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2025. 8. 26 **화** 14:00~17:30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국회의원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챌스, 아동인권포럼



Contents

• 토론회 •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y Adoption

토론회 개요	4
--------	---

인사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8
Nam In-soon(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Songpa (Byeong), Seoul)	10
서영교(국회의원·서울 중랑갑)	12
Seo Young-kyo(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Jungnang (Gap), Seoul)	14
소병훈(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16
Soh Byung-hoon(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Gwangju-si (Gap))	18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	20
Seo Young-seok(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Bucheon (Gap))	22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24
Kim Nam-hee(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Gwangmyeong (Eul))	26
박희승(전북특별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28
Park Hee-seung(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Namwon, Jangsu, Imsil, and Sunchang in Jeonbuk)	30
이인용(사단법인 온을 이사장)	32
Rhee In Yong(Chairperson of ONYUL)	34

기조 발제	
해외입양, 진실화해위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38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y Adoption	46
Hwang Pil-kyu, Attorney(GongGam Human Right Law Foundation)	

• 1부 •

발 제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58
최정규(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y Adoptees Post-TRC Decision	68
Choi Jungkyu, Attorney(Wongok Law LLC)	

토론 1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80
쇠렌센 태경 탄야 인 월	
Presentation for the National Assembly Forum: The Significance and Tasks Follow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Overseas Adoption	84
Taekyung Tanja In Wol Sørensen	
토론 2	
발제(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관련	88
이상훈(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y Adoptees Post-TRC Decision	94
Lee Sang-hoon, Attorney(Former Standing Commissioner of TRC)	
토론 3	
진실규명결정 이후의 회복과 화해	100
권태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Truth-Finding Decision	105
Gwon Tae-yoon, Attorney(Committee on Historical Issues and Reparatio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2부 •

발 제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개선 과제	112
전민경(사단법인 온을)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125
JEON MIN-KYEONG, ATTORNEY (ONYUL)	
토론 1	
국회 해외입양 관련 포럼 발제문	140
신승엽	
SPEECH — FORUM, NATIONAL ASSEMBLY OF KOREA	146
Shin Seung-yup (Korean Adoptee, NLKRG/EARS)	
토론 2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토론문	152
이황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Discussion on the Presentation: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157
Lee Hwang-hee, Professor(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토론 3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한 해외법령, 판례 연구	161
임예지(법무법인 덕수)	
Right of Adoptees to Know Their Origins: Comparative Laws and Case Law	186
Lim Yeaji, Attorney(Law Firm Deoksu)	

토론회 개요

해외입양에대한 진실화해위의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 일시 : 2025년 8월 26일(화) 14:00~17:3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최/주관 : 국회의원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챌스, 아동인권포럼
- 식순

시간	내용	진행
14:00 ~ 14:02	개회 선언	전체 사회 : 황준협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 인권위원회)
14:02~ 15:20	국민의례	
	토론 참석자 및 내빈 소개	
	축사 •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 서영교(국회의원·서울 중랑갑)사 • 소병훈(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 • 박희승(전북특별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 이인용(사단법인 온을 이사장)	
14:20 ~ 14:30	기조 발제 • 황필규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좌장 : 소라미 임상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14:30~15:40	1부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 [발제]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 • [토론1] 탄야 쇠렌센(황태경, 해외입양인 당사자) • [토론2] 이상훈 변호사(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 [토론3] 권태윤 변호사(민변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 [토론4]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질의응답	
15:40 ~15:50	쉬는 시간	
15:50~17:00	2부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와 피해회복 • [발제]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을) • [토론1] Shin Seung-yup (해외입양인 당사자, NLKRG/EARS) • [토론2] 이황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3] 임예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 [토론4]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 질의응답	좌장 : 현소혜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00~17:30	종합토론	

National Assembly Forum Plan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 Date : August 26, 2025 (Tuesday), 14:00~17:30
- Venue : National Assembly Members' Office Building, Conference Room No. 1
- Hosted by : Human Rights Law Foundation GongGam,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Committee on Child and Youth Rights, ONYUL, Fighting Chance Public Interest Law L-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Interest Law Center, Child Rights Forum, National Assembly member: Nam In-soon, Seo Young-kyo, So Byung-hoon, Seo Young-seok, Kim Nam-hee, Park Hee-seung

● Program

time	contents	Progress
14:00 ~ 14:02	Opening	Overall Program Moderator : Hwang JunHyup Attorney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14:02~ 15:20	National Ceremony	
	Introduction of Speakers and Distinguished Guests	
	Congratulatory Remarks • Nam In-soon(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Songpa (Byeong), Seoul) • Seo Young-kyo(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Jungnang (Gap), Seoul) • Soh Byung-hoon(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Gwangju-si (Gap)) • Kim Nam-hee(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Gwangmyeong (Eul)) • Seo Young-seok(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Bucheon (Gap)) • Park Hee-seung(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Namwon, Jangsu, Imsil, and Sunchang in Jeonbuk) • Lee In-yong(Chairperson of ONYUL)	
14:20 ~ 14:30	Keynote Presentation • Hwang Pil-kyu, Attorney (GongGam Human Right Law Foundation)	Moderator : So Ra-mi, Clinical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14:30~15:40	Session 1 Remedies for Intercountry Adoptees Following the TRC Decision • Presentation: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Post-TRC Decision - Choi Jung-kyu, Attorney (Law Firm Wongok) Panel Discussion: • Panelist 1: Tanja Wol Sørensen (Korean adoptee) • Panelist 2: Lee Sang-hoon, Attorney (Former Standing Commissioner of TRC) • Panelist 3: Gwon Tae-yoon, Attorney (Committee on Historical Issues and Reparatio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Panelist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Q&A Session	
15:40 ~15:50	Break	
15:50~17:00	Session 2 Violation of the Right to Origin and Remedies for Adoptees • Presentation: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 Jeon Min-kyeong, Attorney (ONYUL) Panel Discussion: • Panelist 1: Shin Seung-yup (Korean Adoptee, NLKRG/EARS) • Panelist 2: Lee Hwang-He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 Panelist 3: Lim Yeaji, Attorney (Law Firm Deoksu) • Panelist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Q&A Session	Moderator : Hyun So-hy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17:00~17:30	Session 3 General Discussion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인사말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

Nam In-so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Songpa (Byeong), Seoul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갑

Seo Young-ky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Jungnang (Gap), Seoul

소병훈 국회의원·경기광주시갑

Soh Byung-ho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 Gwangju-si (Gap)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

Seo Young-seo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Bucheon (Gap)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Kim Nam-he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Gwangmyeong (Eul)

박희승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Park Hee-se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Namwon, Jangsu, Imsil, and Sunchang in Jeonbuk)

이인용 사단법인 온을 이사장

Rhee In Yong Chairperson of ONYUL

인사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송파구병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함께 해주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 소병훈 · 서영석 · 김남희 · 박희승 의원님,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사단법인 온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챌스, 아동인권포럼, 아동권리연대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해주실 황필규 변호사님, 1부 좌장을 맡아주실 소라미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최정규 변호사님, 토론을 해주실 해외입양인 당사자이신 탄야 쇠렌센님, 이상훈 변호사님, 권태운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부 좌장을 맡아주실 현소혜 교수님, 발제를 해주실 전민경 변호사님, 해외입양인 당사자이신 신승엽님, 이황희 교수님, 임예지 변호사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사무관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2년 7개월간의 조사 끝에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 사건을 인정하고,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과거 해외입양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였습니다.

진화위의 결정은 해외입양인들의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진실규명을 신청한 367명 중 단 56명만이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고, 상당수는 ‘서류 미비’를 이유로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해외입양 자체가 신원 조작 · 서류 조작에 기초해 이뤄졌음을 고려한다면, 서류 부족을 근거로 피해를 부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진화위의 인권침해 결정 이후에도 해외입양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리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가는 피해자들의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의 공식 사과와 함께 입양 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의 뿌리 권리 보장, 신원정보 조작 등 피해 구제 조치 등이 반드시 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도적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입양 절차는 민간기관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적 관리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비준한 헤이그 협약이 발효되어, 앞으로는 아동을 보내는 국가가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고, 받는 국가가 양부모 적격성을 심사해 상호 보증하며, 아동을 보내는 국가의 가정법원에서 최종 입양을 허가하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국제입양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21일,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민간기관이 운영했던 사회복지기관과 집단수용시설 뿐 아니라, ‘입양알선기관’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국회 행안위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법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며, 언제나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 권리 보장 강화에 있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pening Remarks



Nam In-so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Songpa (Byeong), Seoul

Distinguished guests, colleagues, and friends,

I am Nam In-soon, National Assembly Member for Songpa (Byeong), Seoul, and a membe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t is deeply meaningful for me to co-host today's forum 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here at the National Assembly. I would like to thank my fellow Democratic Party colleagues—Assembly Members Seo Young-kyo, Soh Byung-hoon, Seo Young-seok, Kim Nam-hee, and Park Hee-seung—for joining in this effort, and also extend my gratitude to the GongGam Human Rights Law Foundation, the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Minbyun) Committee on Child and Youth Rights, ONYUL,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Interest Law Center, Fighting Chance Public Interest Law Center, the Child Rights Forum, the Child Rights Solidarity, and all others who have contributed to making this event possible.

My thanks also go to Attorney Hwang Pil-kyu for delivering the keynote presentation; to Professor So Ra-mi, chairing Session 1; to Attorney Choi Jung-kyu for presenting; and to our panelists—adoptee Tanja Wol Sørensen, Attorney Lee Sang-hoon, and Attorney Gwon Tae-yoon. I also thank Professor Hyun So-hye, chairing Session 2; Attorney Jeon Min-kyeong for presenting; adoptee Shin Seung-yup, Professor Lee Hwang-Hee, Attorney Lim Ye-ji, and the official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ir participation.

In March of this year, after two years and seven months of investigati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acknowledged numerou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recommended

that the State issue an official apology. This was the first official recognition of State responsibility for such violations in the history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formally acknowledged the harm suffered by adoptees. Yet, of the 367 applicants, only 56 had State responsibility recognized, while many were excluded for reasons of “insufficient documentation.” Considering that intercountry adoption itself was built upon falsification—such as fabricated records and identity manipulation—lack of paperwork should never be grounds for denying recognition of harm. Moreover, even after the TRC's decision, adoptees are still being pushed toward state compensation lawsuits, raising fears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State must not evade responsibility. It must take concrete and effective measures to heal the lifelong wounds of adoptees. An official apology must be followed by improvements to adoption information systems, the guarantee of adoptees' right to origin, and remedies for identity falsification, among other measures.

Institutional reforms are also underway. On July 19, the Amendment to the Special Adoption Act and the Act on Intercountry Adoption—both of which I introduced—took effect. With this change, adoption procedures are now managed directly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ifting away from the private agency-led system. Furthermore, starting October 1,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ratifi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ill enter into force. Under this system, the sending country will determine the child's adoptability, the receiving country will review adoptive parents, and the family court of the sending country will issue final approval, ensuring greater responsibility and transparency in intercountry adoption.

In addition, on August 21, I introduced an amendment to the Framework Act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 expand the scope of its investigations to include not only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collective care facilities operated by private bodies, but also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adoption agencies. I will do my utmost to ensure that this bill is swiftly deliberated by the National Assembly's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will continue to reflect and incorporate the discussions from today's forum into legislative and policy reforms. We will always prioritize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ork tirelessly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Once again, I sincerely thank everyone for being here today, and I wish you health, happiness, and peace.

Thank you.

인사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중랑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오늘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남인순,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무엇보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해주신 해외입양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많은 입양인들이 신원 변경, 서류 조작 등으로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해외입양을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결정은, 이 역사적 아픔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치유를 시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멍니다. 진실규명을 신청한 367명 중 일부만이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고, 정보 부족을 이유로 배제된 이들도 있습니다. 입양서류와 배경 정보가 부실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인권침해

해의 증거라는 입양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해외입양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해외입양인 한 분 한 분의 상처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필요한 입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해외입양인들의 인권과 삶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과 참석해주신 해외입양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회의원 서영교 드림

Opening Remarks



Seo Young-ky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Jungnang (Gap), Seoul

Distinguished guests, colleagues, and friends,

I am Seo Young-ky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Jungnang (Gap), Seoul,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It is deeply meaningful to see today's forum 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convened here at the National Assembly. I extend my heartfelt gratitude to Assembly Members Nam In-soon, Seo Young-seok, Kim Nam-hee, and Park Hee-seung for their commitment in organizing this important gathering. I also wish to thank all those who contributed to its preparation, and above all, I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and respect to the overseas adoptees who have joined us today from afar.

For decades, countless children from Korea were sent abroad for adoption. Yet throughout that process, the State failed in its duty of care. Many adoptees suffered severe violations of their right to know their origins, with their identities altered and documents falsified. The recent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formally recognizing intercountry adoption as a case of state-led human rights violations—represents a solemn acknowledgment of this painful history, and an urgent call for the State to begin the work of healing.

But the journey toward justice is far from complete. Out of the 367 applicants who sought truth-finding, only a portion have seen state responsibility recognized. Others have been excluded on grounds of insufficient records. Yet the very absence and falsification of adoption records is itself evid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We must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s of adoptees who demand recognition of this fact.

Intercountry adoption is not merely a problem of the past—it continues to this day. The State must not turn away from responsibility. It must establish concrete measures to address the wounds and restore the rights of each and every adoptee. The National Assembly, for its part, will do everything in its power through legisl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to ensure that the human rights and dignity of adoptees are fully respected and restored.

In closing, I once again extend my profound thanks to all those who organized today's event and to the overseas adoptees who have joined us here.

Thank you.

August 28, 2025

Seo Young-kyo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인사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광주시갑

안녕하십니까. 경기광주시갑 국회의원 소병훈입니다.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국회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남인순 의원님과 박희승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함께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이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친권자의 동의 없는 입양, 아동의 신원 바뀌치기 등 중대한 제도·행정적 문제가 확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자 국가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한국전쟁 이후 약 17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아동을 해외에 입양 보냈습니다. 해외입양은 국내입양보다 문화·인종·언어적 단절이 크기에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고, 입양은 한 사람의 삶이 좌우되는 만큼 아동의 보호와 권리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은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친생부모의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입양인이 자신의 뿌리를 알아갈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를 살피고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입양아동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가을의 문턱에서 새로운 변화를 준비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난 아픈 역사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저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나뉜 고견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대표의원 소병훈

Opening Remarks



Soh Byung-ho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Distinguished guests, colleagues, and friends,

I am Soh Byung-hoon, National Assembly Member representing Gwangju-si (Gap), Gyeonggi Province.

I extend my heartfelt congratulations on the convening of the National Assembly Forum 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I wish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Assembly Members Nam In-soon and Park Hee-seung for their dedication in organizing this meaningful event, and also to all those who have worked tirelessly behind the scenes. My sincere thanks as well to the esteemed participants who have joined us today.

This past Marc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officially acknowledged that human rights violations occurred in the course of intercountry adoption from the 1950s through the early 2000s. The findings—such as adoptions carried out without parental consent and deliberate falsification of children's identities—reveal grave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shortcomings. These are not just unfortunate episodes of the past; they are issues that our State must face squarely.

Since the Korean War, nearly 170,000 Korean children have been sent abroad for adoption. Unlike domestic adoption, intercountry adoption entails profound cultural, racial, and linguistic disconnections. Adoption determines the entire trajectory of a person's life; therefore,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the safeguarding of their rights must always be our highest priorit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affirms children's right to preserve their identity and places a binding obligation upon States to ensure it. Yet in Korea today, restrictions grounded in data protection laws continue to limit access to birth information, preventing many adoptees from fully realizing their right to know their origins.

Today's forum provides an opportunity to examine thes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adoption process and to deliberate on the State's responsibilities and tasks for redress. It is also a timely moment to explore institutional reforms that will guarantee adoptees the right to reclaim their identity and to connect with their roots.

As the summer heat yields to the threshold of autumn, we stand at a season of transition and renewal. I sincerely hope this gathering will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reflection on our painful history and as a step forward toward a more just and humane future.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 pledge to work diligently so that the valuable insights shared here today lead to real and lasting change.

Once again, I congratulate you on the convening of this forum and extend my best wishes for the health and peace of all participants. Thank you.

August 2025

Soh Byung-hoo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인사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부천시(갑)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시(갑) 국회의원, ‘국민비타민’ 서영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국회토론회」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남인순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박희승 의원님, 김남희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단체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외입양 피해자 56명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과거의 과오가 일부 입양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중대한 결정입니다.

수십 년 동안 고향과 가족, 이름과 언어를 잃고 살아온 해외입양인들의 긴 세월의 억울함과 외로움이, 이제야 조금씩 세상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러한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들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지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속에서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 논의의 중심에는 ‘뿌리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과거를 알고 싶은 개인적 호기심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삶의 의미를 회복하며, 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자율성을 되찾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지난달, 공적입양제도 시행을 앞두고 입양인들의 삶의 뿌리와도 같은 기록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입양기록긴급행동’, 아동권리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입양기록의 이관 과정이 철저히 투명하게 이뤄지고, 보관 서고가 보존 기준에 부합하도록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오랫동안 외면받아온 해외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제도 밖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 권리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도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ing Remarks



Seo Young-seo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Bucheon (Gap)

Greetings.

I am Seo Young-seok,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Bucheon (Gap) with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lso known as the “People’s Vitamin.”

I sincerely thank all of you for joining us at today’s National Assembly Forum 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despite the hot weather. In particular, I extend my heartfelt appreciation to Assembly Members Nam In-soon, Seo Young-kyo, Park Hee-seung, and Kim Nam-hee, as well as to the many organizations and stakeholders who have helped make this event possible.

On March 25,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issued truth-finding decisions for 56 victims of intercountry adoption. This was a momentous decision, for it officially recognized that responsibility for past wrongs did not rest solely with adoption agencies, but wit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self. The long years of resentment and loneliness endured by overseas adoptees—who lost their homeland, families, names, and language—are only now beginning to come to light.

Today’s forum is a meaningful occasion to discuss how we can heal and restore the lives of adoptees following this truth-finding. Above all, we must listen to each victim’s voice and ensure that their concerns are reflected in our policies.

At the heart of this discussion lies the “right to roots.” For adoptees, the right to roots is not a matter of personal curiosity about the past. It is a fundamental human right: to reclaim one’s identity, to restore meaning to one’s life,

and to recover one’s full autonomy as a person.

Last month, ahead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adoption system, I joined the Child Rights Solidarity in hold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National Assembly under the banner of “Emergency Action for Adoption Records.” We strongly urged that adoption records be transferred with full transparency and preserved in facilities that meet proper archival standards, for these records are the very roots of adoptees’ lives.

The long-neglected “right to roots” of overseas adoptees must no longer remain outside the scope of our institutions. As a member of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 will continue to do everything in my power to ensure that this right is effectively guaranteed and firmly established as a constitutional right.

Thank you.

인사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명(을)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해외입양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입양기관과 시설이 보유한 입양기록물 원본을 체계적으로 이관·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점검하고, 입양정보제공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입니다.

오늘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토론회를 함께 열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남인순·서영교·소병훈·서영석·박희승 의원님을 비롯하여 인권 전문가 및 활동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해 3월,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조서를 꾸민 사례, 사망한 아동의 신원을 다른 아동에게 부여해 출국 시키는 ‘신원바꿔치기’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공식적 사과와 더불어 입양인의 시민권 취득 여부 실태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신원 정보 조작 등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 입양정보 제공 시스템 개선, 입양인 가족 상봉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입양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조사를 신청한 375명의 해외입양인 중 56명의 사례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결정한 진실화해위의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Opening Remarks



Kim Nam-hee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Democratic Party of Korea · Gwangmyeong (Eul)

Greetings. I am Kim Nam-hee, National Assembly Member for Gwangmyeong (Eul), serving on the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join in hosting today's forum 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I wish to thank my fellow Assembly Members Nam In-soon, Seo Young-kyo, Soh Byung-hoon, Seo Young-seok, and Park Hee-seung for joining us today, along with the many human rights experts and advocates in attendance.

In March of this year,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confirmed that the State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issue an apology and establish countermeasures.

The investigation revealed serious problems: cases where birth parents' consent forms were not obtained; adoption records that were falsified; and instances where the identities of deceased children were reassigned to others in order to send them abroad—a practice known as “identity swapping.”

Now, beyond a formal state apology, what remains are concrete efforts to restore adoptees' rights: a survey into adoptees' citizenship status and follow-up measures; remedies for victims of falsified identity records; improvements to the adoption information system; and practical support for family reunions.

Today's forum will analyze the TRC's findings—which recogniz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56 cases among the

375 adoptees who filed applications—and consider the tasks that lie ahead for u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s Health and Welfare Committee, I pledge to stand at the forefront of efforts to restore the rights of intercountry adoption victims. I will also work to ensure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systematic transfer and preservation of original adoption records held by agencies and institutions, and for improvements to the adoption information system.

Thank you.

인사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북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귀빈 여러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입양인 당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 3월,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70~80년대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입양인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정부에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기본권 침해와 국가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실규명 이후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과거사 피해자들이 여전히 국가배상소송에 내몰리고,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 주장과 책임 부인을 마주하는 현실은 바뀌어야 합니다.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첫걸음입니다.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정체성과 존엄의 근간이며,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친생부모 동의 요건, 불완전한 기록 관리, 제한적인 정보 제공 등으로 이 권리는 여전히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과거와 화해하는 길은 과거를 덮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국회는 해외입양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함께 준비해 주신 주최 · 주관 단체와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8. 26.
국회의원 박희승

Opening Remarks



Park Hee-se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Namwon, Jangsu, Imsil, and Sunchang in Jeonbuk

Distinguished guests, experts, government officials, and overseas adoptees,

I am Park Hee-se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representing Namwon, Jangsu, Imsil, and Sunchang i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 sincerely thank all of you for taking the time to join us here today despite your busy schedules.

This past Marc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recognized that the State committ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process of intercountry adoption during the 1970s and 1980s, and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issue an apology to the victims and establis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This marked the first time that the Korean government clearly acknowledged both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and State responsibility in the history of intercountry adoption.

But this decision must be seen not as the end, but as the beginning. Following truth-finding, there must be meaningful restor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It is unacceptable that victims of past injustices continue to be driven into state compensation lawsuits, only to face claims of statutes of limitation and denials of responsibility. The restoration of rights for intercountry adoptees is a task for which the State must take the lead.

Today's forum is a first step on that path. The "right to roots" for adoptees is not optional—it is the foundation of identity and dignity to which all human beings are entitled, guaranteed both by our Constitution an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Yet this right remains inadequately protected, undermined by requirements for parental consent, incomplete recordkeeping, and restricted access to information.

The road to reconciliation with a painful past is not about covering it up, but about confronting the truth and establishing justice. The National Assembly will stand with adoptees, sharing in their pain, and will spare no legislative effort to ensure that their rights are substantively guaranteed.

In closing, I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co-hosting and organizing institutions and all those who prepared today's event. I also extend my respect to the presenters and panelists for their dedication. I hope this gathering will serve as a meaningful occasion to illuminate the way forward.

Thank you.

August 26, 2025

Park Hee-seung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인사말



이인용
사단법인 온울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온울 이사장 이인용입니다.

우선 이번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해 주신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의원님을 비롯하여, 함께 이번 토론회 준비에 힘써 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2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외입양 피해자와 관련한 56건의 신청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이후, 그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가 특정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이 실제로 이행되고,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사단법인 온울은 그간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법률 지원과 정책 제안, 입법 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해외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아동 권리 보장 문제를 국내외 무대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통한 권리 실현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해외입양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실효적인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에서는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와 국가의 책무를 살펴보고, 두 번째 발제에서는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그 법·제도적 과제를 다룹니다. 두 주제 모두, 우리 사회가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논점입니다.

온울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외입양인의 권리 보장과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나눈 제안과 논의가 단순한 기록으로 남지 않고, 입법과 정책 변화로 이어져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시간과 지혜를 나누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Opening Remarks



Rhee In Yong
Chairperson of ONYUL

Greetings.

I am Lee In-yong, Chairperson of ONYUL.

First, I would like to extend my gratitude to Assembly Members Nam In-soon, Seo Young-kyo, Soh Byung-hoon, Seo Young-seok, Kim Nam-hee, and Park Hee-seung for hosting this National Assembly Forum on the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My thanks also go to all those who worked tirelessly in preparing for today's forum.

This forum has been convened to explore concrete measures for redress following the March 25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which recognized human rights violations in 56 intercountry adoption cases. The TRC'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firmed these violations were not confined to individual institutions but constituted State responsibility. Yet a decision alone cannot restore victims' rights.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must be implemented, leading to institutional reforms and substantive support.

At ONYUL, we have long worked to advance the rights of society's most vulnerable—including children, wom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through legal assistance, policy advocacy, and legislative initiatives. In particular, we have consistently raised the issue of children's rights, including intercountry adoptees' "right to root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while pursuing concrete legal remedies such as constitutional petition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Today's forum was conceived in that same spirit: to reflect directly the voices of intercountry adoptees and to design effective measures for their redress.

The first presentation will examine the State's responsibilities and the procedures for redress following the TRC's decision, while the second will address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roots and the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Both topics call on our society to reflect on the responsibility we bear toward intercountry adoptees and their families.

Through this forum, ONYUL hopes that discussions on the protection of adoptees' rights and the State's duty to provide meaningful redress will take a step forward. We also hope that today's proposals and discussions will not remain on record alone but will lead to legislative and policy change—becoming the starting point for real improvements in the lives of each and every victim.

Once again, I extend my heartfelt thanks to all participants for sharing your time, wisdom, and insights here today.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기조 발제

해외입양, 진실화해위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Hwang Pil-kyu,

Attorney GongGam Human Right Law Foundation

해외입양, 진실화해위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해외입양, 진실화해위 결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세계적 현상으로서의 불법해외입양

* 피해자의 생명과 권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불법 입양은 입양적합성 결정에서의 사기, 공문서의 위조 또는 강압, 친생부모의 적절한 동의의 부재, 중개인에 의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및 관련 부패가 개입된 입양 뿐만 아니라

아동의 납치와 판매 및 인신매매, 강제실종 및 강제실종의 맥락에서 아동의 부당한 강제이송과 같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불법 행위 또는 불법 관행을 통해 발생함.

* 이러한 행위와 관행은 범죄 네트워크에 의해 이용되는 아동 보호 시스템의 결함을 반영하며, 종종 국가 공무원이 개입하거나 이를 허용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남.

(유엔인권조약기구·특별절차 성명(2022) & 유엔아동매매특별보고관 성명(2017))

•국가 공식보고서 : 네덜란드(2021), 덴마크(2024), 스웨덴(2025), 노르웨이(2025말 예정)

•[참고] 영국(의회공동인권위, 미혼모자녀 입양 보고서(2023))

•[참고] 미국(국무부, 의회제출 연간보고서 - 국가간입양 증진)



불법해외입양으로 침해되는 권리 & 구성되는 범죄

[권리]

-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 어떠한 차별 없이 가족, 사회, 국가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 부모를 알고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권리
-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
- 이름·국적·가족관계와 같은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 빼앗긴 정체성을 회복할 권리
- 사생활 보호의 권리
- 가족생활의 권리

[범죄]

- 아동 납치, 판매, 인신매매, 강제실종, 제노사이드, 인도에 반하는 범죄

(유엔자유권규약, 아동권리협약, 강제실종협약, 제노사이드방지협약 등)



불법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의무

- 불법해외입양 피해자의 진실에 대한 권리, 정체성을 회복할 권리 보장
- 불법해외입양 진상규명 : 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 충분하고 적절한 재정적, 인적 자원이 확보된 완전하고 공정하고 충실하고 효과적인 조사
- 피해자의 권리 침해와 가해자의 책임 확인, 불법해외입양 피해자 특정, 신원 확인, 소재 파악, 빼앗긴 정체성 포함 피해사실 통지
- 불법입양의 범죄화 및 시효의 예외 인정
- 불법해외입양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 원상회복(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입양 무효화 조치 등)
- 배상(경제적으로 측정 가능한 모든 손해 보전)
- 재활(의료/심리적 돌봄, 사회적 서비스 등 제공)
- 만족(진실의 완전한 공적 공개, 공적 사과, 추모와 기억, 법제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등)

(유엔강제실종협약, 강제실종위킹그룹 일반논평, 유엔강제실종위 실종자찾기지도원칙(2019), 유엔피해자권리원칙(2005) 등)



불법해외입양 방지를 위한 원칙

첫째, 모든 입양 과정에서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둘째, 국가 내 다른 대안적 양육 가능성을 충분히 모색하고, 국가 간 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해야 함.

셋째, 입양 과정을 통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등을 방지해야 함.

넷째, 국가 간 입양 관련 주체들의 자격과 동의를 충분히 확인하고 관할 당국을 통해 허가되어야 함. 특히 고아로 규정된 아동의 배경과 문서는 철저히 검증해야 함.

"입양의 목적이 자녀를 위한 가족이 아닌 양부모를 위한 자녀를 찾는 데 있는 경우" 위 원칙 위반임.

(유엔아동권리협약,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유엔아동권리위 일반논평, 최종견해 - 스위스(2021), 인도(2014), 에리트리아(2008), 유엔아동매매특별보고관 성명(2017))



진실화해위 결정(2025. 3. 25.)의 의의 1

불법해외입양이 국가의 지속적인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구조적 결과임을 공적으로 확인함.

- 한국의 해외입양정책은 한국전쟁 직후 단일민족 혈통에 어긋나는 소위 '혼혈아'의 해외송출대책으로 도입됨. (보건사회부 긴급구호대책(1953), 국무회의 의결(1956), 고아법(1957))

- 정부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요보호아동 대책에 있어서 경제적 관점에서 해외입양을 적극 활용해 왔으며,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입양알선기관장이 후견권, 입양동의권 등 절대적 권한 행사 가능)하고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국내 요보호아동이 대규모로 해외 송출됨. (고아입양특례법(1961) 및 입양특례법(1977))

- 그 과정에서 해외입양의 쿼터제 운영, 중단과 재개 등의 결정에 아동의 복지가 아닌 북한의 비난, 해외입양 수요국의 요구, 입양알선기관의 입양아 확보를 위한 과다경쟁 등 아동복지와 무관한 이유가 상당 부분 작용함. (보건사회부 문헌 1970s~1980s)

- 이러한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본래의 신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소실, 왜곡 또는 허위 작성되었고 해외 송출 이후에도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받을 권리,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 성명권,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 등이 침해됨.



진실화해위 결정(2025. 3. 25.)의 의의 2

불법해외입양 전 과정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권침해 양상을 공적으로 확인함.

- 입양 아동 확보를 위한 기간 관 투자금
- 장애아동 수수료 할인 등 입양아동의 상품화
- '양부모 대기자 적체 해소' 등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 허위 기아발견조서에 기초한 고아호적 작성 등 기록의 조작
- 미아일 수 있는 '기아'의 영아시설 입소일 당일 등 신속한 입양알선기관 입양의뢰 등
- 부적절한 시기, 장소에 기초한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 확인공고
- 동의권 없는 자의 동의 등 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처리 등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 양부모에게 누락되고 허위사실 기재된 정보 제공
-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 기부금
- 아동 사망 혹은 입양 중단 시 의도적 신원 바꿔치기
- 아동 출국 전 수령국 입양알선기관에 후견권 임의 이양 등 후견인 직무 미이행
- 수령국 국적취득 확인의 미이행
- 아동학대·국적미취득으로 인한 아동 인권 침해
- 친생가족의 입양된 실종아동 찾기를 방기한 입양알선기관



진실화해위 결정의 문제점 및 한계 1

- 대다수 사례 조사중지결정 : '자료 부족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 평가 필요' (제17차 진실화해위 회의결과, 2025. 4. 22.) : 부실한 자료 관리 및 감독은 그 자체로 진실, 정체성에 대한 권리의 중대한 침해이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됨.
- 해외입양에 대한 선입견 및 사회구조적 측면의 몰이해, 정치적 왜곡가능성, 입양알선기관 등의 영향력 등의 문제 :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됨.
- 조사와 그 결론은 충분하였는가: 왜 전세계 해외입양인의 1/3이 한국출신인가; 입양알선기관과 성인수용시설, 병원, 조산소, 일시보호소 또는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미혼모시설의 (유착)관계는 충분히 조사, 규명되었는가; 입양알선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돈의 흐름은 충분히 파악, 분석되었는가; 입양알선기관의 과다한 수수료는 정확히 파악, 평가되었는가; 친가족찾기과정에서의 2차 가해는 충분히 파악, 평가되었는가; 물증 부족의 극단적 사례의 경우 좀 더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는가; 인권침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강제실종, 아동인신매매 등 명확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지 않았는가.



진실화해위 결정(2025. 3. 25.)의 의의 3

불법해외입양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인권에 기초한 접근으로 국가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를 제시함.

- 국가 - 입양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잘못 인정 및 사과
- 국가 -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내 조치 최우선적 강구
- 국가 -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 보건복지부, 외교부 - 불법입양, 수령국 시민권 미취득 피해자 현황 파악 및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별도 조사 기구 수립 등 강구
- 행정안전부 - 국적, 신원정보 불법상실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공적기록 정정 조치 및 관련 편의 제공 방안 마련
- 보건복지부 - 입양알선기관 보유자료, 복지시설, 상담·의료·일시보호 기관, 지자체 등 생산기록 적극 수집, 보존, 정보 제공하여 입양인에게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국가 - 입양인·친생가족간 관계 회복 위해 유전자 검사, 상봉 및 교류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담당할 조직 마련
- 입양알선기관 - 피해 입양인들에 대한 사과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 & 보유기록물 누락되지 않고 이관될 수 있도록 성실 협조



진실화해위 결정의 문제점 및 한계 2

- 진실화해위 내 1개과의 여러 사건 중 1개사건이라는 인적, 물적 한계 : 진실화해위 조사5과의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요 집단수용시설사건(영화숙·재생원,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성인부랑인수용시설)을 담당한 조사7과가 해외입양사건을 담당함.
-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한계 : 진실화해위 사건으로는 유일하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권 국가의 신청인들이 존재함. (덴마크, 미국,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호주, 독일, 프랑스, 룩셈부르크, 캐나다)
- 진실화해위의 진실화해법 제34조에 근거한 권고의 강제수단 부재 : 제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진실화해법은 신청조사를 원칙으로 직권조사를 예외로 하고 있음.



향후 과제 1 : 진실에 대한 권리 구현

“56. 진실에 대한 권리는 인권을 보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구제와 배상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밀접히 연결된다. 또한 진실에 대한 권리는 법의 지배와 민주 사회의 투명성·책임성·효율한 통치의 원칙과 밀접히 연결된다.

58.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진실에 대한 권리에는 또한 사회적 차원이 있다. 그런 사건이 미래에 재발하지 않도록, 극악한 범죄가 저질러진 상황과 그 이유, 범행에 관한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가 사회에 있다.

59. 진실에 대한 권리는 인권 침해의 이유와 침해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 아는 것을 포함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완벽한 진실, 사건의 구체적 상황, 그리고 누가 사건에 참여했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진실에 관한 권리 연구, 2006)



향후 과제 1 : 진실에 대한 권리 구현

- 우선 진실화해법 개정을 통해 설치될 새로운 진실화해위에 조사중지된 사건, 새롭게 신청되는 사건을 적절하고 충분히 조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개정되는 진실화해법에 ‘해외입양 인권침해’를 조사대상으로 명시하고 적어도 독립된 과에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고려
-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공동의 조사/검증 진행을 적극 추진하고 해외입양인 절대적 다수가 입양을 간 미국 당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으로의 해외입양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조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전세계적으로 최대규모의 해외입양 전과정에서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권 침해 양상에 비추어 신청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해외입양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과 후속대책 마련 등을 수행할 독립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향후 과제 2 : 적절하고 충분한 피해구제

“배상은 원상회복, 금전 배상, 재활, 만족, 재발 방지의 보증 등을 통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을 의미한다.

금전적 피해 배상의 요소인: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급여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는 소득의 상실; (d) 정신적 손해; (e) 법적 또는 전문적 조력,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에 소요된 비용 등이 모두 보전되어야 한다.

또한 “만족”의 기준인 ① 지속적인 침해의 중단을 목표로 하는 효과적인 조치, ② 사실의 검증과 진실의 완전한 공적 공개, ③ 피해자 및 그와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들의 존엄, 명예, 권리를 회복시키는 공식적인 선언 또는 사법적 결정, ④ 사실 인정과 책임의 수용을 포함한 공적 사과, ⑤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등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유엔피해자권리원칙, 2005)

“침해의 가해자를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의 의무 위반으로 국제인권법에 대한 별도의 침해를 구성할 수 있고 침해의 재발에 있어 중요한 원인이 되는 요소다.” (유엔진실정의특별보고관 보고서, 2023)



향후 과제 2 : 적절하고 충분한 피해구제

- 진실화해위 권고 중 아래 항목 1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행이, 항목 2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1. 국가 - 입양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잘못 인정 및 사과
 2. 보건복지부 - 입양알선기관 보유자료, 복지시설, 상담·의료·일시보호 기관, 지자체 등 생산기록 적극 수집, 보존, 정보 제공하여 입양인에게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금전배상과 관련해서는 진실화해법에 강제성 있고 충분하고 적절한 금전배상규정을 두는 방안(현재 일부 개정안 반영), 소송까지 가지 않고 행정작용 단계에서 기존/변형된 국가배상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해외입양 인권침해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모두 포함하는 방안 등 여러 방안이 모색될 수 있겠음.
- 불법해외입양 확인으로 인한 신분/가족관계의 재정립의 경우 철저하게 아동 최선의 이익, 피해자의 의견개진과 참여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함.
- 조사의 전과정에서 가해자와 그 책임이 특정되어야 하고, 형사처벌의 경우 불법해외입양의 범죄화와 공소시효의 배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Hwang Pil-kyu,
Attorney (GongGam Human Right Law Foundation)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Hwang Pil-kyu, Attorney
(GongGam Human Right Law Foundatio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AS A GLOBAL PHENOMENON

* Illegal adoptions cause devastating harm to the lives and rights of victims. They occur through fraud in suitability assessments, falsified or coerced documents, lack of valid parental consent, improper financial gain by intermediaries, child abduction, sale and trafficking, enforced disappearance, and unlawful transfer of children.

* Such practices expose systemic flaws in child protection systems, often exploited by criminal networks and sometimes enabled or tolerated by state officials and policies.

UN references: UN Treaty Bodies & Special Procedures (2022);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2017)

- State reports: Netherlands (2021), Denmark (2024), Sweden (2025), Norway (expected 2025)
- Other references: UK Joint Committee on Human Rights (2023);
- US State Department Annual Reports to Congress on Intercountry Adoption



RIGHTS AND CRIMES IN THE CONTEXT OF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Rights Violated by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 Right to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Right to protection by family, society, and the State without discrimination
-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one's parents
- Right not to be separated from parents against one's will
- Right to preserve identity (name, nationality, family relations)
- Right to restore identity once lost
- Right to privacy
- Right to family life

[Crimes Constituted]

- Child abduction, sale, trafficking, enforced disappearance,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Genocide Convention, etc.)



STATE OBLIGATIONS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 Right to Truth & Identity o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s:
 - Truth-Finding o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s: Regardless of whether a petition has been filed, ensure access to relevant records by adequate and appropriate financial and conduct a complete, fair, thorough, and effective investigation supported and human resources.
 - Identify victims & perpetrators, verify identity, locate, notify of lost identity
 - Criminalization of illegal adoption & exemption from statute of limitations
- Recognition of Victims' Rights Violations and Perpetrators' Responsibility:
 - Restitution: annul unlawful adoptions in child's best interests
 - Compensation: full reparation for economic loss
 - Rehabilitation: medical/psychological care, social services
 - Satisfaction: full public disclosure, official apology, remembrance, legal reforms to prevent recurrence

(Sources: UN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s, UN WGEID General Comments & Guiding Principles (2019), UN Basic Principles on the Right to a Remedy (2005))



PRINCIPLES FOR PREVENTING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Firs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must be the primary consideration in all adoption processes.

Second, alternative care within the country must be fully explored, and intercountry adoption should be considered only as a last resort.

Third, improper financial gain or other undue benefits from adoption must be strictly prevented.

Fourth, the qualifications and consent of all parties involved in intercountry adoption must be verified through the competent authorities. In particular, the child's background and documents must be rigorously examined.

"When the purpose of adoption is to find children for prospective parents rather than parents for children" — such adoption violates the principl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oncluding Observations on Switzerland (2021), India (2014), Eritrea (2008); Statement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ale of Children (2017))



SIGNIFICANCE OF THE TRC DECISION (MAR 25, 2025) – 1

Official recognition that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was a structural consequence of the State's continuous abuse of public authority.

-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policy originated in the aftermath of the Korean War as a measure to send overseas children born of so-called "mixed blood/race," deemed inconsistent with the single-ethnicity ideology. (Emergency Relief Measure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53; Cabinet Resolution, 1956; Orphan Act, 1957)
- Since the 1950s, the Government has relied on intercountry adoption as a primary child welfare measure from an economic standpoint. It delegated all adoption procedures to private adoption agencies—granting their directors absolute authority such as guardianship and consent to adoption—without proper oversight. As a result, large numbers of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were sent abroad without adequate safeguards. (Special Orphan Adoption Act, 1961; Special Adoption Act, 1977)
- Decisions regarding adoption quotas,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adoptions were often influenced not by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but by extraneous factors such as criticism from North Korea, demands from receiving countries, and excessive competition among adoption agencies to secure children.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documents, 1970s–1980s)
- In this process, children's original identities and family information were lost, falsified, or fabricated. Even after being sent abroad, children were not afforded adequate protective measures. As a result, their fundamental rights were violated, including human dignity and wort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right to have their best interests as a primary consideration, the right to know and be raised by their parents whenever possible, the right to a name, and the right to immediate birth registration.



SIGNIFICANCE OF THE TRC DECISION (MAR 25, 2025) – 2

Confirmation of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ter-country Adoption

- Investment funds for securing children for adoption
- Commodification of children (e.g., fee discount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 Mass export of children to meet adoptive parents' demand ("reduce waiting lists")
- Falsification of records (false orphan reports, fabricated family registers)
- Immediate referral to adoption agencies, often on the very day of admission to infant care facilities, even for children who might simply be lost ('abandoned').
- Formalistic guardian confirmation notices issued at improper times/places
- Lack of valid consent (consent by unauthorized persons)
- Superficial screening of adoptive parents (processed within 1–2 days)
- Incomplete or falsified information given to adoptive parents
- Compulsory "donations" to secure adoptable children
- Deliberate identity falsification in cases of death or disrupted adoption
- Failure to fulfill guardianship duties (arbitrary transfer abroad before departure)
- Failure to confirm child's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receiving country
- Human rights violations from child abuse or statelessness
- Neglect by agencies in helping birth families trace missing/adopted children



SIGNIFICANCE OF THE TRC DECISION (MAR 25, 2025) – 3

Comprehensive recommendations to the State based on a human rights-centered approach regard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

- State – Official acknowledgment of wrongdoing and apology to adoptees
- State – Give top priority to domestic measures for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 State – Ratify the Hague Convention on Inter-country Adoption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Establish a separate investigative body to identify victims of illegal adoption and lack of citizenship in receiving countries, and to devise redress measures
- Ministry of the Interior & Safety – Provide correction of public records and related conveniences for victims of unlawful loss of nationality or identity, upon request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 Improve the system to guarantee the right of adoptees to know their origins by actively collecting, preserving, and providing records from adoption agencies, welfare facilities, counseling, medical and temporary car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 State – Create an organization to provide practical support for DNA testing, reunions, and exchanges between adoptees and birth families
- Adoption agencies – Make sincere efforts to apologize and provide redress to victims, and fully cooperate to ensure records are neither lost nor withheld but properly transferre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TRC DECISION - 1

- Suspension of most cases: "Insufficient data—truth-finding and assessment needed" (17th TRC meeting result, Apr. 22, 2025). Poor data management and oversight themselves constitute serious violations of the rights to truth and identity and cannot be shifted onto victims.
- Prejudices and misunderstandings about intercountry adoption, structural/social factors, risk of political distortion, and influence of adoption agencies—all seen as having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the decisions.
- Were the investigations and conclusions sufficient? Why is one-third of intercountry adoptees worldwide of Korean origin? Were the links between adoption agencies and adult care facilities, hospitals, maternity clinics, temporary shelters, child counseling centers, welfare institutions, and unwed mother facilities sufficiently investigated and clarified? Were the influence of agencies in policy decisions and the flow of money adequately traced and analyzed? Were agencies' excessive fees accurately identified and assessed? Were secondary harms in family tracing processes properly recognized and evaluated? In extreme cases of lacking physical evidence, could further focused and thorough investigation have been conducted? Given the seriousnes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uld the cases not have been more clearly characterized as enforced disappearance or child trafficking?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TRC DECISION - 2

- Personnel and resource constraints: Out of many cases handled by one division, the overseas adoption case was assigned to Investigation Division 7, which was already responsible for nearly all major institutional confinement cases (Yeonghwa Home, Jaesaengwon, Brothers Home, Seongam Academy, adult vagrant facilities), except for the Samcheong Re-education case handled by Division 5.
- Limits from languag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differences: This case uniquely involved applicants from diverse linguistic and cultural backgrounds (Denmark, USA, Sweden, Norway, Netherlands, Belgium, Australia, Germany, France, Luxembourg, Canada).
- Absence of enforcement mechanisms for TRC recommendations under Article 34: Article 34 (Duties of the State) stipulates that the State must make efforts to restore the honor and rights of victims of truth-finding cases, take appropriate legal and political reconciliation measures against perpetrators, and adopt necessary measures for national reconciliation and integration.
- Truth and Reconciliation Act: Investigations are in principle application-based, with ex officio investigations as an exception.



FUTURE TASK 1: REALIZING THE RIGHT TO TRUTH

"56. The right to truth is closely linked to the State's duty to protect and guarantee human rights, to conduct effective investigations in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ensure effective remedies and reparations. It is also intrinsically connected to the rule of law, as well as th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ccountability, and good governance in a democratic society.

58. In case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victims and their families have the right to truth. The right to truth also has a collective dimension: society as a whole has the right to know the truth about past events, the circumstances in which egregious crimes were committed, and the reasons why they occurred—so that such acts are not repeated in the future.

59. The right to truth means knowing the full and complete truth regarding what happened,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each case, the reasons for the violations, and who was involved in them."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Study on the Right to Truth, 2006)



FUTURE TASK 1: REALIZING THE RIGHT TO TRUTH

- The amended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should mandate the new TRC to properly and sufficiently investigate cases that were previously discontinued as well as new applications. The amendment should explicitly include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tercountry adoption" as a subject of investigation and provide for at least one independent division dedicated to these cases.
-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osely review the national reports published in the Netherlands, Denmark, Sweden, and Norway, and actively pursue joint investigations and verifications in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Korean intercountry adoptees were sent to the United States, it is essential to engage in close dialogue with U.S. authorities to ensure full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the problems related to adoption to the U.S.
- In view of the widespread and diverse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occurr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of Korean intercountry adoption—the largest such program worldwide—there is a pressing need to establish and operate an independent body that goes beyond handling individual applications and is empowered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overall adoption system and to devise appropriate follow-up measures.



FUTURE TASK 2: ENSURING ADEQUATE AND SUFFICIENT REDRESS

"Reparation" means full and effective compensation, including restitution, monetary compensation, rehabilitation, satisfaction, and guarantees of non-repetition.

Elements of monetary compensation include:(a) physical or mental harm;(b) loss of opportunities such as employment, education, and social benefits;(c) material damages and loss of potential income;(d) moral damages;(e) costs for legal or expert assistance, medicines and medical services, psychological and social services.

"Satisfaction" requires:① effective measures to end ongoing violations,② verification of facts and full public disclosure of the truth,③ official declarations or judicial decisions restoring dignity, honor, and rights of victims,④ public apology including acknowledgment of responsibility,⑤ commemoration and tribute to victims.

(UN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Remedy and Reparation, 2005)

"Failure to prosecute perpetrators of violations constitutes a breach of State obligations and may itself amount to a separate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reating conditions for recurrence."

(UN Special Rapporteur on Truth and Justice, 2023)



FUTURE TASK 2: ENSURING ADEQUATE AND SUFFICIENT REDRESS

- Among the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tem 1 demands immediate implementation, whereas Item 2 requires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1. The State – An official acknowledgment of wrongdoing and a formal apology to adoptees.
 2.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Institutional reform to guarantee the right of adoptees to know their origins by actively collecting, preserv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from adoption agencies, welfare facilities, counseling/medical/temporary care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 With regard to monetary compensation, several options may be considered: establishing binding and sufficient provisions on compens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Truth and Reconciliation (some of which are reflected in current amendments); utilizing existing or modified state compensation systems at the administrative level without requiring litigation; or enacting a special law on overseas adoption-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would encompass both fact-finding and remedies for victims.
- In cases where illegal overseas adoption requires the reestablishment of personal status and family relations, proceedings must be carried out strictly on the basis of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ith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input of the victims.
-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investigation, perpetrators and their responsibilities must be clearly identified, and in terms of criminal accountability, it will be necessary to consider both the criminalization of illegal overseas adoption and the exclusion of statutes of limitation.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1부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 발 제**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 토론 1**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 토론 2** 발제(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관련
- 토론 3** 진실규명결정 이후의 회복과 화해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1부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발제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Post-TRC Decision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Choi Jungkyu,

Attorney (Wongok Law LLC)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1. 검토배경

지난 3월 25일, 해외입양 피해자 56명에 대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라고 합니다)의 진실규명결정¹⁾이 있었습니다. 앞서 황필규 변호사님이 기초발제에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은 해외입양 피해가 단지 입양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임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합니다)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국가가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²⁾하고 있고,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 제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도록 규정³⁾하고 있습니다.

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25. 3. 25.자 결정[사건 : 2라-14447 등 56건, 해외입양 과정 인권침해사건]

2) 과거사정리법 34조(국가의 의무) 국가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피해 및 명예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정치적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 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노력 의무 등), 해당규정은 2023. 3. 21. 신설되어 2023. 9. 22.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법제처 제공)는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계획 및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것임’입니다.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에 담긴 권고는 ‘권고’라는 용어에 담긴 것처럼 법적 구속력은 없고 국가의 행동을 권유하는 것이기에 진실규명결정 이후 소관 국가기관의 장이 세우는 계획과 그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입양인의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만큼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가 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최근 법무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⁴⁾. 여기에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회복방안의 문제점 세 가지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과 권고가 존재했음에도 피해회복방안은 정부의 이행계획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택했고, 그것이 피해회복을 위한 유일무이한 방법이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피해자들이 소송해서 승소했지만, 그 결과에 국가의 상소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녹화공작(강제징집 및 프락치강요), 납북귀환어부사건, 수많은 간첩조작사건에서 국가폭력피해자들은 진실규명결정 이후 정부의 피해회복방안 마련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결국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렸고, 그 소송에서 국가의 기계적 상소뿐만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부정하는 항변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입었습니다.⁵⁾ 해외입양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리고 소송 과정에서 이런 2차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제문을 통해, ‘진실화해위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회복방안’, 즉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리지 않고 소송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는 피해회복방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해보려고 합니다.

4) 한겨레신문 2025. 8. 6. 자 보도(형제복지원·선감학원 상소포기에... “상소취하 과거사 확대해야”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1948.html

5) 경향신문 2025. 4. 30. 자 보도(녹화공작 피해자들, 국가배상 일부승소... “유엔에 ‘정부 2차가해’ 진정서 낸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301751001>

2. 해외입양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역할 – 권고사항 이행계획 수립 관련

가. 과거사정리법상 권고사항 이행 체계

해외입양인들은 1) 법적 정체성 침해, 2) 입양절차상의 위법행위, 3) 국적관련 피해, 4) 입양 후 학대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기본적인 인권과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침해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회복 조치가 필요합니다. 진실규명결정 이후 이행계획 수립과 확정절차는 진실규명결정을 그저 빛바랜 종이 쪼가리로 전락시킬 것인지, 아니면 과거사정리법의 취지대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 될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진실화해위 활동이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로 2023. 3. 21. 신설되어 시행 중인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 2(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노력 의무 등)은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해당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도록 해 두었습니다. 아울러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계획, 조치결과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⁶⁾」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 제6조 제4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소관 국가기관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정리법에 의거하여 진실규명이 결정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과정이지만, 2023. 3. 21. 과거사정리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권고사항 이행 체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여러 사건에서 확인됩니다. 저는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강요 조작사건’의 사례를 통해 권고사항 이행체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겪는 2차 피해와 이런

6)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3. 9. 22.] [대통령령 제33708호, 2023. 9. 12., 일부개정]

피해를 해외입양 피해자들이 겪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권고사항 이행 체계’의 오작동 - (사례 :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강요 조작사건)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강요 조작사건’은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불법적으로 징집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이들에게 위협, 폭력, 가혹행위를 통해 전향 및 사찰을 강요하고 인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2022. 11. 22. 피해자 187명에 대한 진실규명결정⁷⁾을 시작으로 5차에 걸쳐 462명에 대한 진실규명결정⁸⁾을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을 소관하는 국가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이행계획⁹⁾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강요 조작사건

사건개요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을 파괴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불법적으로 징집하여 사회와 격리시키고, 이들에게 위협, 폭력, 가혹행위를 통해 전향 및 사찰을 강요하고 인권을 총체적으로 유린한 사건

진실위 권고사항	이행계획
1. 국가사과	1. 사과주체, 시기, 방법 등을 검토하여 추진
2.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부당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2. ‘국군방첩사령부령’에 재발방지를 위한 3不(정치관여, 직권남용, 특권의식)명시 및 준수
3. 피해자회복조치	3.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추진
4. 피해사실 조사기구 설치	4.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입법추진

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22. 11. 22.자 진실규명결정[사건 : 2라-286-1 등 60건(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

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025. 4. 23.자 보도자료[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 강요 공작사건(5)]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Id=324857

9)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강요 조작사건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서울고등법원 2024나2001802 손해배상(국)]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은 2024. 6. 24.자 준비서면을 통해 국방부장관의 이행계획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은 2023. 12. 20. 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등 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합니다)는 2024. 5. 31. 심의결과 국방부장관이 제출한 위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¹⁰⁾되었습니다. ‘권고사항 이행 체계’ 내에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대한 개선·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기에 피해자들이 이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직접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고, 국가배상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하며 원고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의 불성립(진실화해위 진실규명결정만으로는 피해입증이 부족하다는 취지)하다는 주장 및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했다는 주장(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국가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주장¹¹⁾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을 배척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과거 국가폭력만큼 소송과정에서 맞닥들인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들에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아픔을 호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¹²⁾.

다. 소결

진실규명결정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2차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진실규명결정 후 소관 국가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이행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소관 국가기관의 개선·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국가기관에 대해 이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제2항 각호는 ‘1.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또는 조치결과, 2. 과거사정리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사유서, 3. 그 밖에 과거사정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라 한다)의 권고사항에 대한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며, 3호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 64797 손해배상(국) 사건 피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정부법무공단) 제출 2023. 8. 24.자 답변서

12) MBC 2023. 9. 6. 자 보도(‘프락치’ 피해자 소송 내자···돌연 ‘책임없다’ 말 바꾼 정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291_36199.html

진실규명결정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과거사정리법상 국가기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5조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는 투명성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권고사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가폭력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의 관점에서 중요한 시작점이기에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제21조), 의견청취(제22조), 의견제출(제27조), 제30조(청문의 공개) 등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이행계획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3. 해외입양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법무부의 역할

– 국가배상신청제도 관련

해외입양인 피해회복은 단순히 국가가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되고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침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침해 및 회복방안’은 2부에서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이 발제문을 통해 피해회복 중 금전배상의 관점에서 국가배상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진실화해위는 2022. 11. 29. 진실규명사건에 대한 포괄적 배보상 법안 입법의 필요성 관련 정책권고를 한 바 있지만,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 법안은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현행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체계 내에서 법무부의 역할을 강조해 보려고 합니다.

가.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체계

국가배상법은 1)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 2)법원에 대한 소송제기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각급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과거에는 소송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필요적 전치주의), 2000년 12월 29일 법개정으로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 국가배상소송은 행정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법원실무상 민사소송 관할로 진행¹³⁾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국가배상신청제도는 절차의 간이성(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게 진행), 비용 절감(소송 제기에 따르는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없음). 조기 해결 가능성(신속하게 해결)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¹⁴⁾에는 법에서 정한 배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배상금 수령 후 추가 국가배상소송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국가배상법도 제16조¹⁵⁾에 관련 규정을 두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위헌결정¹⁶⁾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는 추가로 국가배상소송이 가능합니다.¹⁷⁾

국가배상법상 배상심의회에 대한 배상신청제도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폐지된 이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지만, 가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배상신청을 권장한 사례처럼 진실규명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13) 피해자가 국가배상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송결정(서울행정법원 2023. 4. 26.자 2023구합62311), 피해자의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항고기각(서울고등법원 2024. 1. 9.자 2023루1183결정), 피해자의 재항고에 대해 대법원 재항고기각 결정(대법원 2024. 4. 25.자 2024무520)이 선고되었습니다.

1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는 ‘심의위원회의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 구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16조(배상결정의 효력)는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16) 헌법재판소 1995. 5. 25. 91헌가 7 결정(주문 : 국가배상법(1967·3·3 법률 제1899호) 제16조 중 “심의회의 배상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7)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는 “3. 그 지급을 받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규정(부제소합의의 특약)이 존재하나 동의서 작성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나. 가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이 국가배상신청을 권장한 사례

국가배상법 제12조 제2항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발생하게 한 국가기관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는 전주지방검찰청에서 1년간 국가송무담당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지방검찰청에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을 간과하고 집행된 사례가 발생했고, 관련 논의 끝에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하여 피해자의 국가배상신청이 접수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 배상심의회 결정을 통해 피해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장으로 인해 구금된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등을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우정사업본부가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와 관련한 소송결과¹⁸⁾를 안내하고 예금거래절차로 인해 피해사실이 있는 분들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우체국은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서면으로 안내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안내를 받고 41명의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할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접수¹⁹⁾하였습니다.

안내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고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와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를 2020년 6월 24일에 개선하였으며, 개선 이전 위 예금거래 절차로 인해 피해 사실이 있는 분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

1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해 가정법원이 제한한 범위를 넘어서서 우체국은 행이 비대면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래를 후견인의 ‘동행’으로 해석하는 등 임의로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제한한 것은 장애인차별이라 우체국은 행을 운영하는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19) 대전지방법배상심의회 2024국배 제66호, 피해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안내에 따라 2024. 2. 1.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 현재 심의진행 중입니다.

다. 소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나 유족을 위하여 제1항의 신청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앞선 사례에서 전주지방검찰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위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신청을 안내했고, 피해자의 국가배상신청에 따라 피해회복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관련 규정과 앞서 진행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 이후 권고이행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국가배상신청제도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신청에 따라 피해회복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배상신청절차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협조와 적극적인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국가배상법은 피해자가 관할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도록 규정(제12조 제1항)하고 있으며, 배상금의 계산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본부심의회로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4주일 이내 (법 제13조 제1항), 본부심의회도 사건기록을 지구심의회를 통해 송부받으면 4주일 이내에 배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법 제13조 제7항)하는 등 신속한 배상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였습니다.²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무부가 기존 국가배상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진실규명결정 이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도모한다면, 피해자들이 소송²¹⁾에 내몰리지 않고 더 이상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책임을 부정하는 일을 겪는 2차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0) 법무부(국가소송과) 2025. 8. 5.자 보도자료(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결정)

21) 해외입양피해자들은 해외에 거주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헌법상 보장된 국가배상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차원에서라도 소송 전 해결이 필요합니다.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Post-TRC Decision
Choi Jungkyu, Attorney-at-Law (Wongok Law LLC)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Post-TRC Decision

Choi Jungkyu,
Attorney-at-Law (Wongok Law LLC)

1. Background

On March 25,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RC”) rendered a truth-finding decision for 56 intercountry adoptee victims.¹⁾ What makes the TRC’s decision especially significant is that it clearly establishe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alongside adoption agencies—as responsible for the harms suffered by intercountry adoptees. This recognition of governmental responsibility, as noted by Attorney Hwang Pil-gyu in the keynote presentation, marks a milestone in addressing such violations.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hereinafter “Framework Act” stipulates the State’s duty to endeavor to restore victims following a truth-finding decision.²⁾ It further provides that the head of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a given recommendation must submit an implementation pla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cedures, and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hall inspect and manag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³⁾

1) TRC Decision, Mar. 25, 2025 [Cases: 2RA-14447 et al., 56 cases, Human Rights Violations in Intercountry Adoption]
2)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for Truth and Reconciliation, Art. 34 (“The State shall endeavor to restore the honor and redress the harm suffered by victims whose truth has been established, take appropriate legal and political measures toward reconciliation with perpetrator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promote national reconciliation and unity.”).
3) Id. Art. 32-2 (newly enacted Mar. 21, 2023; effective Sept. 22, 2023) (“The head of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TRC recommendations shall prepare and submit an implementation plan and report on measures take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so as to ensure that TRC activities are substantively enacted.”).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truth-finding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re not legally binding, as the term “recommendation” itself implies, but rather urge the State to take action.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to monitor and manage both the plan formulated by the head of the responsible State agency after a truth-finding decision and the status of its implem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medying the harms suffered by intercountry adoptees, the current point in time is as significant as the TRC’s decision itself. This is becau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recommendations, is now formulating the implementation plan. This is why today’s forum is being held.

Recently,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at it would withdraw the State’s appeals in the State compensation lawsuits filed by the victims of the Brothers Home (형제복지원, a notorious welfare facility where thousands were unlawfully detained during the 1970s – 80s) and Seongam Academy (선감학원) cases.⁴⁾ This situation illustrates three key problems in remedial measures following truth-finding decisions. First, even though the TRC’s truth-finding decision and recommendations existed, the government’s implementation plan contained no measures for remedy. Second, victims of State violence chose to file new lawsuits against the State in order to seek redress, and this became the only means available for recovery. Third, even when the victims won their cases, the State nevertheless filed appeals against the judgments.

The problems faced by the victims of the Brothers Home and Seongam Academy cases are not unique to them. In the Nokhwa Operation (녹화공작 — a program of forced conscription and coerced informant activity), the Repatriated Abducted Fishermen Cases (납북귀환어부사건 — abductions by DPRK and subsequent repatriations), and numerous fabricated espionage cases, victims of State violence waited for the government to prepare remedial measures following truth-finding decisions, but ultimately were compelled to file State compensation lawsuits. In those suits, they suffered secondary victimization—not only from the State’s routine appeals but also from arguments denying the State’s liability.⁵⁾ This forum is being held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ees are not forced to resort to litigation and subjected to such secondary victimization in the course of litigation. Through this presentation, I intend to emphasize the roles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n formulating remedial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that prevent them from being forced into litigation and protect them from further victimization.

4) Hankyoreh, Aug. 6, 2025, “State Drops Appeals in Brothers Home and Seongam Academy Cases... ‘Appeal Withdrawals Should Be Expanded to Other Past Wrongs,’” available at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1948.html

5) Truth-finding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Nov. 22, 2022) [Case Nos. 2RA-286-1 et al., 60 cases: Coercive Conscri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Undercover Agent Coercion Operations].

2. How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ould Implement TRC Recommendations for the Redress of Intercountry adoptees

가. Implementation System for TRC Recommendations under the Framework Act

Intercountry adoptees have suffered: violations of legal identity, unlawful acts in the adoption process, harms relating to nationality, and post-adoption abuse—constituting se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se harms go beyond mere administrative errors; they constitute grave infringements on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personal identity, requiring responsible, State-level restorative measures. The process of formulating and finalizing an implementation plan after a truth-finding decision will determine the outcome of that decision. It may remain a mere record without real effect. Or, in keeping with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it may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genuine reconciliation with the past and progress toward the future.

To ensure that the TRC’s work leads to meaningful implementation by state agencies, Article 32-2 of the Framework Act—newly inserted on March 21, 2023, and currently in force—provides that state agencies with jurisdiction over recommendations must respect and make efforts to implement them, whil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tasked with monitoring and managing the status of their implementation. Furthermore, the heads of such agencies are required to submit an implementation plan to the Minister within three months from the date the TRC reports its recommendations to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Details regarding the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and reporting of results are set out in the Presidential Decree titled Regulations on the Handling of Recommendations Related to Past Affairs.⁶⁾ Article 6(4) of these Regulations authorizes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to make public the implementation plans submitted by the heads of competent agencies in order to facilitate their effective implementation.

Under the Framework Act,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TRC’s recommendations is as important as the truth-finding itself. However, despite the amendment of March 21, 2023, there have been multiple instances where the implementation system failed to function effectively. Using the “Fabricated Case of Coercive Conscri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Undercover Agent Coercion (대학생 강제징집·프락치 공작 조작사건)” as an example, I will explain how this malfunction has caused secondary victimization for victims and wh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ust act to ensure intercountry adoptees do not suffer the same.

6) Regulations on the Handling of Recommendations Related to Historical Fact-Find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Clearing up Past Incidents [Enforcement Date: Sept. 22, 2023] [Presidential Decree No. 33708, Sept. 12, 2023, Partial Amendment].

나. How the TRC Recommendation Implementation System Failed: The Case of the Student Forced Conscription and Informant Coercion Incident

The "Student Forced Conscription and Informant Coercion Incident" refers to a period during an authoritarian regime when university students were illegally conscripted to undermine social and student movements. Isolated from society, they were subjected to threats, violence, and severe abuse, and were coerced into ideological conversion and surveillance, constituting a wholesale violation of their fundamental human rights. Beginning on November 22, 2022,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RC) issued findings of truth for 187 victims⁷⁾, and over five rounds, it has issued findings for a total of 462 victims.⁸⁾

The implementation plan⁹⁾ submit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as the head of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the TRC's recommendations,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pursuant to the relevant laws, is as follows.

University Student Forced Conscription & Informant Coercion Case

Case Overview

During authoritarian rule, university students were illegally conscripted, isolated from society, and subjected to coercion, violence, and severe human rights abuses.

TRC Recommendation	Implementation Plan
1. State apology	1. Review and implement subject, timing, and method
2.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during military service	2. Include "Three Nos" (no political involvement, no abuse of authority, no sense of privilege) in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 regulations
3. Victim redress measures	3. Promote legislation in consultation with National Assembly & relevant ministries
4. Establish fact-finding body	4. Promote legislation in consultation with National Assembly & relevant ministries

7) Truth-finding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Nov. 22, 2022) [Case Nos. 2RA-286-1 et al., 60 cases: Coercive Conscri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Undercover Agent Coercion Operations].

8) Press Release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pr. 23, 2025) [Coercive Conscri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Undercover Agent Coercion Operations (5)], available at https://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ntId=324857

9) Seoul High Court, 2024Na2001802, State Compensation (Republic of Korea), Defendant's counsel (Korea Government Legal Service), Preparatory Brief dated June 24, 2024, submitting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s implementation plan, in litigation brought by victims of the fabricated case involving the forced conscription of university students and coercion to act as informants.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ubmitted the above Recommendation Implementation Pla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n December 20, 2023. On May 31, 2024, the "Deliberative Committee on the Handling of Past-Related Recommendations," established under the Regulation on the Handling of Past-Related Recommendations, deliberated on the matter and, as its final resolution, approved the plan submitt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without any modifications.¹⁰⁾ Within the "recommendation implementation system," no improvements or supplements were made to the plan. The entire process was conducted in strict confidentiality. Victims were not given an opportunity to present their views.

Meanwhile, the victims were compelled to file individual lawsuits against the State to seek redress. In these state compensation cases, the defendant, the Republic of Korea, argued for dismissal of the plaintiffs' claims, contending that their right to claim state compensation did not exist—on the grounds that a TRC decision alone was insufficient to prove the harm suffered—and that their claims were extinguished by the statute of limitations (arguing that more than three years had passed since the plaintiffs became aware of the harm and more than five years since the harm occurred)¹¹⁾. The court rejected these arguments. However, the victims reported that confronting such assertions from the State during litigation caused them severe emotional distress, comparable to the trauma they had suffered from past state violence.¹²⁾

다. Conclusion – Enhancing Implementation Plans Through Victim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I believe that the primary reason victims continue to be compelled to file state compensation lawsuits even after a TRC decision—and suffer secondary victimization in the process—is the failure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state agency to establish a proper implementation plan following the TRC decision.

10) Regulation on the Handling of Recommendations Related to Past Affairs, Presidential Decree No. 33708, Sept. 12, 2023, art. 6(3) ("Where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that improvement or supplementation by the competent state agency is necessary for any of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as a result of deliberation by the Commission, he or she may request or recommend such improvement or supplementation to the competent state agency."). Paragraph (2) subparagraphs are: "1. Implementation plan or result of measures under Article 32-2(3) of the Framework Act; 2. Statement of reasons under Article 32-2(4) of the Framework Act; 3. Other matters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ems necessary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by the competent state agency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under Article 3(1) of the Framework Act." No separate criteria have been established for matters recognized under subparagraph 3.

11)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3Gahap64797, State Compensation (Republic of Korea), Defendant's counsel (Korea Government Legal Service), Answer dated August 24, 2023.

12) MBC News, September 6, 2023, "Government Changes Stance to 'Not Responsible' in Lawsuit Filed by 'Informant Operation' Victims,"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522291_36199.html

The process by which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ormulates an implementation plan following a TRC decision constitutes the fulfillment of a statutory duty under the Framework Act. Article 5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ffirms the principle of transparency, requiring administrative actions to be specific and clear in content. Although an implementation plan pursuant to a recommendation does not legally constitute a “disposition” in the strict administrative law sense, it is nonetheless a critical starting point for redress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of state violence. Therefore, in line with the spirit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such as prior notice of dispositions (Article 21), hearing of opinions (Article 22), submission of opinions (Article 27), and public hearings (Article 30)—I respectfully request that the plan be disclosed to victims in advance of its submission to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at victims be afforded the opportunity to submit their opinions and have those opinions duly considered.

3. Role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Redress for Intercountry adoptees – National Compensation Claim System

The redress for intercountry adoptees must go beyond mere monetary compensation by the State. It also requires in-depth discussion on how to restore violations of the “right to origin” of adoptees. (The issue of “violations of the right to origin” and measures for its restoration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Part 2.)

In this presentation, I will focus on the Ministry of Justice’s role—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monetary compensation—in its capacity as the government body responsible for the State Compensation Act.

For reference, the TRC issued a policy recommendation on November 29, 2022, calling for legislation to provide comprehensive reparation and compensation for cases where truth had been established. However, nearly three years later, such legislation has yet to be enacted. I will therefore emphasize the Ministry of Justice’s role within the current state compensation framework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가. State Compensation Framework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State Compensation Act provides two avenues for seeking redress:

filing a compensation claim with a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and
filing a lawsuit in court.

Victims may submit a claim to the relevant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before filing a lawsuit. In the past, this procedure was mandatory (“compulsory pre-litigation procedure”), but the amendment of December 29, 2000, removed this requirement, allowing victims to bring a lawsuit directly without first filing a claim (Article 9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lthough state compensation lawsuits have the character of an administrative party action under administrative law,

in practice they fall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ivil courts.¹³⁾

Compared to a state compensation lawsuit, the state compensation claim system offers advantages such as procedural simplicity (relatively simpler and faster than litigation), cost savings (no court fees or service charges required), and early resolution (potential for quicker settlement). In many special acts for victim relief and support¹⁴⁾, the law stipulates that once the legally prescribed compensation is paid, it is deemed a judicial settlement, thereby legally barring further state compensation lawsuits. The State Compensation Act also included such a provision in Article 16¹⁵⁾.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later ruled this provision unconstitutional.¹⁶⁾ As a result, even after receiving compensation through the claim process, victims may still file an additional state compensation lawsuit.¹⁷⁾

Since the abolition of the mandatory pre-litigation requirement, the state compensation claim system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has seen limited use in practice. However, as in cases where the head of the perpetrating public official’s agency has recommended filing such claims, it should be utilized as a means to promptly compensate victims—without forcing them into state compensation lawsuits—when state responsibility has already been confirmed through a TRC decision.

나. How the Agency Head of the Perpetrating Official Encouraged a State Compensation Claim

Article 12(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 public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damage belongs shall encourage the victim or his/her bereaved family to file the applic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This can be interpreted as imposing an active duty on the state agency responsible for the damage to facilitate the victim’s redress.

13) In a case where the victim filed a state compensation lawsuit with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the court issued a transfer decision (Seoul Administrative Court, Apr. 26, 2023, 2023GuHap62311). The victim’s appeal was dismissed (Seoul High Court, Jan. 9, 2024, 2023Ru1183), and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re-appeal (Supreme Court, Apr. 25, 2024, 2024Mu520).

14) Article 16 of the Special Act on Remedy and Support for Victims of the April 16 Sewol Ferry Disaster provides that “where the applicant agrees to the decision of the Review Committee on the payment of compensation, consolation support money, or damages, such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judicial settlement between the State and the applican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15) Article 16 of the former State Compensation Act (Act No. 1899, Mar. 3, 1967) provided that “where the applicant agrees to the compensation decision of the Review Committee, or a local government has paid the compensation, such agreement or payme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judicial settlemen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16)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91Hun-Ka7, May 25, 1995 [Holding: The portion of Article 16 of the former State Compensation Act (Act No. 1899, Mar. 3, 1967) stating, “where the applicant agrees to the compensation decision of the Review Committee, such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constitute a judicial settlemen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is unconstitutional.]

17)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ppendix 23] contain a provision (a non-litigation clause) stating: 3. By accepting such payment, I shall not initiate any litigation in court with respect to the same matter. However, the effect of the non-litigation clause cannot extend to circumstances or damages that were unforeseeable at the time the consent form was executed.

While serving for one year as a Public-Service Legal Officer in charge of state litigation at the Jeon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 encountered a case in which an arrest warrant was executed after its validity period had expired. Following internal discussions, the victim was informed of the State Compensation application process, and the application was duly submitted. As a result of the relevant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s decision, the victim promptly received compensation for lost income and other damages incurred during the period of detention based on the expired warrant.

In December 2023, the Korea Post informed the public, via its internet banking website and written notices, of court rulings related to postal savings transactions involving persons under limited guardianship.¹⁸⁾ The notice also informed affected individuals that they could file State Compensation claims for damages arising from such transactions. Following this guidance, 41 victims submitted compensation applications directly to the competent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without going through the state compensation litigation process.¹⁹⁾

안내문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와 관련한 소송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고 금융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①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와
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예금거래 시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우체국 예금거래 절차를 2020년 6월 24일에 개선하였으며, 개선 이전 위 예금거래 절차로 인해 피해 사실이 있는 분들은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정사업본부

Translation:

Notice

We would like to inform you of the outcome of the lawsuit concerning postal savings transaction procedures for persons under limited guardianship.

To protect such individuals—who, due to illness, disability, advanced age, or other causes, have reduced capacity to manage their affairs—and to ensure the safety of financial transactions:

Restricting them to conducting transactions only in person at a post office counter for cases that do not require the consent of their limited guardian; and

Prohibiting them from conducting transactions alone—even with a written consent from their limited guardian—for cases that do require such consent, and requiring them to be accompanied by the guardian,

were both found by the Supreme Court to constitute discriminatory acts prohibited under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Remedy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etc..

Korea Post improved its postal savings transaction procedures for persons under limited guardianship on June 24, 2020.

We inform you that individuals who suffered harm due to the previous procedures may apply for state compensation.

Korea Post

다. Conclusion: Ensuring Timely Victim Redress Through Active Use of the State Compensation Application System by the Ministry of Justice

Article 12(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 public official responsible for the damage belongs shall recommend the application under paragraph (1) to the victim or the bereaved family.” In the earlier examples, the Jeonju District Prosecutors’ Office and Korea Post provided guidance on filing a state compensation claim in accordance with this provision, and the victims’ applications led to the commencement of compensation procedures.

In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these precedents, the head of the government agenc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RC recommendations should inform victims about the state compensation application process. For these applications to lead to actual redress, the cooperation and proactive engagement of the Ministry of Justice, which oversees the state compensation application procedure, are essential.

The State Compensation Act requires victims to file compensation claims with the competent District Review Committee (Art. 12(1)). If the calculated compensation amount exceeds a certain threshold, the claim must be referred to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Art. 13(6) and Enforcement Decree Art. 20). The District Review Committee must render a decision within four weeks of receiving the claim (Art. 13(1)), and the Central Review Committee must also decide within four weeks of receiving the case file from the District Review Committee (Art. 13(7)), thereby ensuring prompt compensation decisions.

On August 5, the Ministry of Justice (MOJ) withdrew, in principle, all appeals filed by the State in lawsuits brought by victims who had been forcibly confined at Brothers Home and Seongam Academy, in order to ensure prompt re-

18)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301308, Sept. 27, 2023 [Holding: It constitutes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Korea Post Bank to arbitrarily restrict the rights of a person under limited guardianship—by entirely prohibiting non-face-to-face transactions beyond the scope limited by the family court and interpreting transactions requiring guardian consent as requiring the guardian’s “physical accompaniment.” The State, which operates Korea Post Bank, is liable to compensate the victim.]

19) Daejeon District Compensation Review Committee, Case No. 2024GukBae66. Following guidance from Korea Post, the victims filed a compensation claim with the Review Committee on Feb. 1, 2024, and the case is currently under review.

lief for the victims.²⁰⁾ If the MOJ were to actively use the existing state compensation application system to facilitate victim recovery following a TRC truth-finding decision, it could help prevent victims from being forced into litigation and reduce the secondary harm of the State denying responsibility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²¹⁾

20) Ministry of Justice (National Litigation Division), Press Release, Aug. 5, 2025 (“Withdrawal and Waiver of Appeals by the State in State Compensation Lawsuits Concerning Brothers Home and Seongam Academy”).

21) Given that many victims of intercountry adoption reside abroad and are therefore likely to face significant practical obstacles in filing state compensation lawsuits, it is necessary to resolve such matters prior to litigation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guarante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claim state compensation.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1부 진실화해위의 결정과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토론

토론 1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소렌센 태경 탄야 인 월

The Significance and Tasks Follow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Overseas
Adoption

Taekyung Tanja In Wol Sørensen

토론 2

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관련

이상훈(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Post-TRC Decision

Lee Sang-hoon, Attorney (Former Standing Commissioner of TRC)

토론 3

진실규명결정 이후의 회복과 화해

권태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Truth-Finding Decision

Gwon Tae-yoon, Attorney (Committee on Historical Issues and Reparatio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소렌센 태경 탄야 인 월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의의와 과제

소렌센 태경 탄야 인 월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포럼을 공동 주최해주신 남인순, 서영교, 소병훈, 서영석, 김남희, 박희승 의원님, 그리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위원회, 사단법인 온울, 아동권리포럼 등 여러 공익단체 관계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한 입양인 당사자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인, 소렌센 태경 탄야 인 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인권침해 피해자로 공식 인정한 56명의 입양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제 개인의 사례를 통해 불법 해외입양이 남긴 상처와 구조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1. 지워진 시작

사람의 이야기는 보통 “처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 시작이 없었습니다.

저는 덴마크에서 입양된 날이 제 삶의 시작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서류에는 알 수 없는 아버지, 알 수 없는 어머니, 알 수 없는 출생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컨대 아무 이야기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가족찾기를 신청했을 때, 저는 이 서류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존재했고, 살아 계셨습니다. 입양기관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숨겼습니다. 저의 시작은 단순히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손에 의해 지워지고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2. 조작의 시스템

1982년, 제가 태어난 해, 덴마크로 향하는 비행기마다 수십 명의 한국 아기들이 실려 갔습니다. 모두가 고아라는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거리에 정말로 수십 년간 고아들이 넘쳐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와 기관이 만들어낸 체계적 조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입양 시스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의 출발은 제도의 손에 의해 이렇게 고의로 지워졌습니다.

입양인들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고아 호적이 허위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요구했지만,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는 침묵했습니다. 이번 TRC의 결정은 역사상 최초로 이 진실을 공식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인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제가 없다면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다.

3. 조작된 삶의 대가

시작이 없는 삶은 정체성을 혼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훨씬 더 큼니다.

저는 어머니를 찾았지만, 사회적 낙인과 두려움 때문에 결국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녀 또한 이 제도의 피해자입니다.

한편 우리의 기록은 여전히 창고에 방치되어 있고, 입양인은 자신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기록조차 자유롭게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권리 침해입니다.

4. 지금 필요한 것

입양인들이 흩어진 조각을 스스로 찾아 헤매는 낯선 이방인으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가의 책임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는 입양인들에게 다음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공식적 인정과 사과 : 조작과 말소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
- 정보 접근 : 기록과 자료의 전면적 · 투명한 공개
- 정체성 회복 : 가족찾기 지원과 사회적 낙인 제거
- 배상과 구제 : TRC 권고에 따른 재정적 · 제도적 보상

5. 국회를 향한 요청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과거와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한때 한국이 내보냈던 아이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인정만이 아니라 회복과 보상, 그리고 잃어버린 정체성의 복원을 요구합니다.

이번 TRC의 결정은 수십만 건 중 56건만을 다룬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입법과 정치적 개혁으로 이어질 때에만, 비로소 진실은 정의로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he Significance and Tasks Follow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Overseas Adoption

Taekyung Tanja In Wol Sørensen

The Significance and Tasks Following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Overseas Adoption

Taekyung Tanja In Wol Sørensen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Taekyung Tanja In Wol Sørensen

I have been invited today as one of the 56 adoptees, whose cases have been recognised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 have well documented human rights violations. thus recognising us as victims of state violence.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what they look like in my case. And some thoughts on what should happen now.

When you tell a life story you often start at the beginning. But what if there is no beginning? I grew up believing my life started when I landed in Denmark. That is what I was told by my adoptive parents and that is what they were told by the Danish adoption agency. Even the adoption documents corroborate this story: unknown father, unknown mother, unknown birthplace, everything unknown, in sum, there is no story. What you can deduct from all the unknowns is that I was found and placed in the KSS children's home before being sent to Denmark to start my story. But why has no one questioned this? found how, by who and where?

It was a convenient story for a childless couple. To receive a child with no attachments and no story, the closest to having your own child. And the documents show the stamps and approval of all the correspondent authorities in both Denmark and Korea. So why question it.

As an adult, with the help of the knowledge of other adoptees, I filed a family search through KSS, and it turns out they had my mother's contact on file this whole time. She exists, she is alive! But that's all I got, no name, no picture, no address. But I could write her through KSS, and for a short time we exchanged a couple of letters, before she cut all contact. After she had me she married and had two kids, and she is scared that her life will be torn apart, that her family will turn away from her if they find out about me. She is scared and traumatised, even after all these years

society will not accept her. We are both victims of this system.

I filed another family search through KSS, if they have my mother's contact information, they must have more information about me. And again it was only thanks to the help and knowledge of other adoptees that I learnt how to apply the exact way, so they had to give me my birth document. In the application, all the way down, you cross out section D named 'other' and you write the name of the document you need with the exact title. KSS did not give information gladly. Even though it was your own information.

And there in the Korean birth document it said birthdate, birthplace, birthweight. Not much but a little bit more than what I had. In the official document I was found in Seoul, and in the secret document I was born in a midwife clinic in Incheon.

To grow up with no beginning affects your sense of self in many ways. But to find out your beginning was erased on purpose to uphold a system, shakes your identity in a profound way.

I do not have grave and violent circumstances for my beginning, like too many other adoptees have, instead my case represents the large majority of all adoptees, and it represents the system's logic, it is from this standpoint I speak. As one out of hundreds of thousands, whose beginnings have been erased and falsified to be sent abroad! In 1982 when I was born, at the height of the adoption frenzy, hundreds of Korean babies were being flown into Denmark alone, to be strewn across the country into white Danish families, on my flight we were at least a dozen small babies. All with the same story of no story. All found orphans on paper. Was Korea flooded with orphan babies on the streets for over 40 years?

I will never have a relationship with my mother, it is too late. But even the adoptees who find their families and resume a relationship with them, it will never mend the time and hurt caused.

Us adoptees have known for years that our documents were falsified, that our orphan hojuk signed by the authorities were false, that our stories of no stories were fabricated. Because we've been looking for our backgrounds, we've been questioning the official story, and we've met the walls of secrecy and bureaucracy in Korea and the countries we were adopted to. Transnational adoptees have been calling out the Korean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for decades and have been met with silence. So I, and many of us, welcome the TRCs conclusion. It is the first time in history, in Korea and in any country, to officially acknowledg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ases of transnational adoptees. But it will be merely symbolic if no legal and political change follows.

I still don't know my mother's name or what she looks like. I don't know anything about my father. And I can't go asking for them because I don't speak the language and I don't know the system. The adoption agencies had our folders and would not share them, and now they are in an abandoned warehouse, under the jurisdiction of an underfunded and incapable NCRC. Even now we are still not able to access our documents or gain all information about our beginnings.

Having been sent away under false pretence, having lived a life with false information, having lost access to family, language, culture, history, and being inserted into another family,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has life-long consequences. And as adults, adoptees have been coming back for decades to search for pieces of our very empty puzzles and for recognition and justice for what has been done to us. But it should not be up to us to go look and search and demand, each on our own, like strangers in our own country, it should be in the government's interest to offer compensation, acknowledgment, assistance and restoration, as outlined by the TRC.

Now is the time for a reckoning with the past, for the ones you sent away are back, and we demand to be recognised, to be compensated and to have our lost identities restored. The TRC's conclusion to find human rights abuses in 56 ou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ases should only mark the tip of a legal and political iceberg in Korea, for the benefit of all adoptees.

발제(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관련

이상훈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발제(진실화해위의 결정 이후 해외입양인의 피해 회복 방안) 관련

이상훈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1. 전체적인 의견

발제문에서 제시한 회복방향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해외입양 사건의 경우 진실화해위원회 (이하 ‘진화위’)의 조사 및 결정에 있어서 다른 특수성과 한계가 있기에 이를 공유드리고 향후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감안할 부분에 대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조사과정에서 대면한 진화위 조사 및 결정의 한계

가. 국가 폭력 조사기구로서의 민간입양기관에 대한 조사의 제한

○ 진화위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식민지배, 해방, 분단, 전쟁, 쿠데타, 군부독재 등을 압축적으로 경험한 우리나라가 대규모, 조직적으로 자행된 과거의 다양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정신에 따라 이를 포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구임.

– 1기 위원회에서는 남과 북의 분단과 전쟁, 이데올로기적 대립에서 비롯된 민족 내부의 갈등 청산(민간인 학살 사건 등)과 남한 내부의 독재로부터 비롯된 반민주·반인권

적 유산 청산(의문사, 간첩조작사건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였는데, 2기 위원회에서 1기 위원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사건 이외에 집단 수용 시설 사건이나 해외입양 사건 등 새로운 유형의 과거사 사건의 경우 조사의 방향과 범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음.

– 진화위법에서는 조사 대상 인권침해 사건의 정의를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 침해사건”으로 규정(제2조 제1항 제4호)했기 때문에 해외입양 사건의 경우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음.

○ 진화위의 결정은 국가 폭력 범주의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또 다른 주된 축인 국내 민간 입양알선기관과 해외 입양 수령국, 해외 입양 알선기관은 제외된 부분적인 조사 결과임.

– 국가 책임의 주요 골격은, 국가는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를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하는 후견인으로서의 역할과 해외입양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 충돌) 민간 입양알선기관에 일임한 후, 이를 견제, 감시하는 행정·입법·사법상 제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고, 그 결과 다종다양한 피해사례들(적법한 입양 동의 부재, 허위 기아발견신고 등 기록의 조작, 요식행위인 부양의무자확인공고, 의도적 신원 바뀌치기, 양부모 자격 부실 심사, 후견인 직무 미이행, 양부모 수요에 맞춘 아동 대량 송출, 입양대상 아동 확보를 위한 강제적 기부금 징구 등)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토록 하였다는 것임.

– 그러나 과거 해외입양의 전체적인 태양과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외에도 국내 민간 입양알선기관과 해외 입양 수령국, 해외 입양 알선기관까지 조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한계를 가짐. 구체적으로 진화위는 국내 민간 입양알선기관 4곳으로부터 신청인들의 입양 당시의 개인 자료만 수령했고, 입양 수령국 중 덴마크로부터만 일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

나. 대표성 확보 미흡

○ 진화위에서 조사 개시된 건은 367건으로서 1955년부터 1999년까지의 입양총 141,776건의 0.25%에 불과하고, 전체 해외입양인 중 65% 이상을 차지한 미국 입양 건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함.

– 2022년 8월 22일 52건을 시작으로 신청접수 마감일인 2022년 12월 9일까지 총 372건의 사건이 접수되었고, 이후 중복신청 등의 이유로 367건이 조사개시 되었음.

– 1999년 이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인원이 전체 해외입양인 중 65% 이상을 차지한 데 비해 신청인 중에서는 덴마크 입양인이 60% 이상을 차지하였고, 이는 사건 신청 과정에서 덴마크의 입양인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임.

구분	구분2	신청인		전체 해외입양('99년 이전)*	
		명	비율	명	비율
수령국	덴마크	227	61.9%	8,265	5.8%
	네덜란드	17	4.6%	3,993	2.8%
	노르웨이	20	5.4%	5,499	3.9%
	벨기에	17	4.6%	3,456	2.4%
	미국	45	12.3%	93,009	65.6%
	독일	5	1.4%	2,308	1.6%
	프랑스	2	0.5%	10,620	7.5%
	스웨덴	22	6.0%	8,244	5.8%
	호주	10	2.7%	2,583	1.8%
	룩셈부르크	1	0.3%	630	0.4%
	캐나다	1	0.3%	1,381	1.0%
	기타	0	0.0%	1,788	1.3%

다. 국가의 사법적 책임 자체를 전제하지 않음

○ 진실 규명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사법적 책임 자체보다는 이를 포함한 국가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 사건임.

- 원래 진화위 결정에서의 국가 책임은 국가의 사법적 · 정치적 책임을 포괄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책임을 의미.
- 그러나 진화위법 논의 초기에 진실규명과 배보상을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경우 진실 규명 조사 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를 분리하여 절차를 마련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사건의 성격에 따라 일부는 피해 신청인의 사법적 구제까지 염두에 두고 관련 증거와 논리를 마련하려고 했음.
- 반면 해외 입양 사건의 경우 위원 구성상 진실 규명 결정 의결이 쉽지 않은 분위기였고, 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국가의 사법적 책임에 대한 기준에 집착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국가의 총체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

〈결정문 소결 中〉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다.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다양한 입양아동의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 정부 기관은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향을 외면한 채 수 십 년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였다. 이는 국가가 입양아동의 기본권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가사 위헌 · 위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 그럼에도 2025년 3월 25일 조사 개시된 367건 중 56건만이 진실규명 결정되고, 나머지 311건은 조사중지 결정된 것은 아쉬움.

3. 피해 회복 방안 논의에 대한 제언

- 해외 입양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음.
- 개인적으로 2003년 덴마크 현지 조사 당시 한인회보다 10배 이상 많은 해외입양인의 현실을 보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사고 있는 약 15만명의 해외입양인들이 우리나라를 원망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지 우리 사회는 숙고할 필요가 있음.
- 3기 위원회가 출범하면 미국을 포함한 더 많은 사건들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라별 · 개인별 피해 태양은 매우 다양할 것임
- 개별적인 피해 구제보다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함.
- 해외 입양 사건은 피해유형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구제 방안이나 개인별 요구도 특히 제각각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 같이 진실 규명 결정 후 개별적으로 금전 배상을 청구하는 형태의 구제 방안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최근 재외동포청에서 해외입양동포 전담 서비스를 개시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 이를 포함하여 입양인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친생부모 등과 관련한 입양기록 확보 문제, 국내에 오고 싶어하는 분들에 대한 국내 체류, 정착 지원 문제, 해외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외교적 지원 문제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2013년에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마침)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Post-TRC Decision

Lee Sang-hoon,

Attorney(Former Standing Commissioner of TRC)

Remedy Measures for Intercountry Adoptees Post-TRC Decision

Lee Sang-hoon, Attorney(Former Standing Commissioner of TRC)

1. General Comments

I broadly agree with the remedial directions set out in the presentation. Still, in intercountry adoption cases, the TRC's investigations and decisions reveal distinct features and limits. I want to underscore a few of them and offer observations on what should guide more concrete measures of redress.

2. Limitations of TRC Investigations and Decisions

가. Limits of the TRC's Role as a State Violence Fact-Finding Body in Investigating Private Adoption Agencies

◦ The TRC is a state institution established to comprehensively address a wide range of human rights violations—committed on a massive and systematic scale throughout Korea's modern history—in line with the principles of transitional justice. In less than a century, our country has gone through colonial rule, liberation, division, war, military coups, and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 TRC was created to bring these experiences into an integrated historical reckoning.

- In its first term, the TRC focused mainly on resolving internal conflicts that stemmed from national division, war,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such as civilian massacres—as well as dismantling the legacies of authoritarian rule in South Korea, including suspicious deaths and fabricated espionage cases. In the second term, beyond handling unresolved cases from the first term, the Commission also faced the challenge of defining the scope and direction of investigations into new types of historical cases, such as incidents in collective care

facilities and intercountry adoption.

- Under the Framework Act, human rights violations subject to investigation are defined as “cases of death, injury, or disappearance resulting from unlawful or grossly unjust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Article 2(1)(iv)). Accordingly, in cases of intercountry adoption, the key issue has been how to interpret “unlawful or grossly unjust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 The TRC mainly looked at state violence—cases where public authorities acted unlawfully or in a grossly unjust way. However, it failed to include other major actors: domestic private adoption agencies, the receiving countries, and the overseas agencies that arranged the adoptions. Because these were not included, the findings remain inevitably incomplete.
- The main point about state responsibility is this: the government handed over every part of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ss to private agencies that were in a clear conflict of interest—they were supposed to act as guardians protecting the child’s best interests,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running institutions whose purpose was to send children overseas. After delegating this power, the government failed to provide any real checks or oversight through its administrative, legislative, or judicial systems. It simply stood by.

As a result, a wide range of harms kept happening, over and over, for many years: adoptions without proper consent, falsified records like fake abandonment reports, identity swaps, perfunctory notices, poor screening of adoptive parents, neglect of guardianship duties, children sent abroad in bulk to meet demand, and even forced “donations” from families in order to secure children for adoption.

- But to uncover the full picture and truth of past intercountry adoptions, investigations would also have to include domestic private adoption agencies, the receiving countries, and the overseas agencies involved. The TRC was not able to do that. In reality, it only got personal files from four domestic private agencies, and out of all the receiving countries, only Denmark cooperated at all—providing even a small portion of records.

나. Lack of Representation

- The TRC opened investigations into only 367 cases—that is just 0.25% of the 141,776 intercountry adoptions that took place between 1955 and 1999. And it failed to properly investigate the largest group of all: adoptions to the United Stat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65% of every intercountry adoptee.
- Starting with 52 cases on August 22, 2022, a total of 372 applications were filed by the deadline of December 9, 2022. After eliminating duplicates and other overlaps, the TRC ultimately opened investigations into 367 cases.
- Before 1999, more than 65% of all intercountry adoptions from Korea were to the United States. But among the

applicants to the TRC, over 60% were adoptees in Denmark. This was because adoptee organizations in Denmark took the lead in mobilizing applications.

Category	Country	Applicants		Total Adoptees (pre-1999)	
		Number	% of Applicants	Number	% of Applicants
Receiving Country	Denmark	227	61.9%	8,265	5.8%
	Netherlands	17	4.6%	3,993	2.8%
	Norway	20	5.4%	5,499	3.9%
	Belgium	17	4.6%	3,456	2.4%
	United States	45	12.3%	93,009	65.6%
	Germany	5	1.4%	2,308	1.6%
	France	2	0.5%	10,620	7.5%
	Sweden	22	6.0%	8,244	5.8%
	Australia	10	2.7%	2,583	1.8%
	Luxembourg	1	0.3%	630	0.4%
	Canada	1	0.3%	1,381	1.0%
	Others	0	0.0%	1,788	1.3%

다. The TRC did not premise its work on the State’s judicial liability

- To maximize the chances of truth-finding, the Commission stressed the State’s overall responsibility—judicial, political, and moral—rather than focusing narrowly on legal liability.
- By design, “state responsibility” in TRC decisions has always meant comprehensive responsibility, encompassing both judicial and political accountability.
- When the Framework Act was drafted, lawmakers feared that combining truth-finding with compensation in a single track would restrict the scope of investigations. So the two were deliberately separated. Even so, in some cases, petitioners and investigators prepared evidence with potential judicial remedies in mind.
- In intercountry adoption cases, however, the Commission’s composition made formal truth-finding decisions difficult. The greater value lay in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building momentum. Accordingly, the reports avoided fixating on judicial liability and instead underscored the State’s overall responsibility, with legal liability treated as only one part of that whole.

〈결정문 소결 중〉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행은 입법자의 입법을 통하여 비로소 구체화되는 것이다. 국가가 그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즉 국가가 국민의 법익보호를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다종다양한 입양아동의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행정, 사법부의 각 정부 기관은 이에 대한 원인 파악과 개선 방향을 외면한 채 수 십 년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하였다. 이는 국가가 입양아동의 기본권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고 가사 위헌·위법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현저히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Translation:

[Excerpt from Decision]

Our Constitution imposes on the State a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nd that duty takes concrete form only through legislation. In reviewing how the State discharges that duty, the Constitutional Court applies the “prohibition on insufficient protection”: it asks whether, at a minimum, the State has taken adequate and effective measures to safeguard the rights at stake. Yet despite decades of repeated rights violations against adoptee children, the legislativ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collectively failed to diagnose the causes or implement reforms. For years, the system was left in disarray. This failure amounts to the State’s neglect of its basic duty to protect the fundamental rights of adoptee children. Even if not unconstitutional or formally unlawful, it was nonetheless a grossly unjust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 Still, out of the 367 cases the TRC opened on March 25, 2025, only 56 resulted in truth-finding decisions. The remaining 311 were closed without conclusion—a deeply disappointing outcome.

3. Recommendations on Remedies

- Active engagement with intercountry adoption cases, a litmus test of whether Korea can be regarded as a human-rights leader.
- When I visited Denmark in 2003, I saw with my own eyes that the number of Korean adoptees there was more

than ten times that of the local Korean community. With roughly 150,000 Korean adoptees scattered around the world, our society must ask itself whether it has done enough, when so many continue to feel estranged from their country of birth.

- Looking ahead, once the third TRC is launched, I expect broader and more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including cases in the United States. The forms of harm will vary greatly, both by country and by individual.
- Why a Special Law, Not Individualized Compensation
- For that reason, individualized compensation is not the right approach. Instead, a special law would be more appropriate. Intercountry adoption cases involve widely different harms and equally diverse needs; a one-by-one damages claim after a truth-finding decision is unlikely to be effective.
- I note that the Office for Overseas Koreans has recently announced dedicated services for adoptees. This should be built upon through a special law that addresses common demands: securing access to adoption records, supporting those who wish to return and settle in Korea, and providing diplomatic support for those who remain abroad.
- We already have a model to draw from: in 2013, the National Assembly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Acquisition of Legal Residency and Support for the Settlement of Koryoin—ethnic Korean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That precedent should guide us here as well.(end)

진실규명결정 이후의 회복과 화해

권태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이후의 회복과 화해

권태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서의 과거사정리, 진상규명의 역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시작부터만 따지더라도 이제 20년가량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진실규명에 따른 배상, 회복 조치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법이 마련되지 않았고, 최정규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과거사,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을 위해 개개인이 소송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에 소송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소송을 통한 배상이 과연 과거사정리에 있어서 최종 단계로 받아들여지는 게 옳은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2.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과정의 문제점

가. 판단기준의 불명확함

현재는 과거사 소송에서의 소멸시효 판단 기준이 ‘진실규명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년’으로,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2052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 종료 시점까지도, 한국전쟁시기 민간인학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문경학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1. 선고 2008가합666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31. 선고 2009나24479 판결)과 진실규명 결정 전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울산보도연맹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8가합57659 판결)이 상반되게 선고되면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인정받고도 막상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장시간 방치되었습니다. 사실 현재도 형제복지원 피해자 등 상당수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더라도,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주장에 대응해야 하는 사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위자료 판단’의 기준이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에서 법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이 적절한지 여부와 각 재판부의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점도 문제입니다. ‘대학생 강제징집 및 프락치강요 조작사건’의 경우에 재판부별로 청구를 인용한 금액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 그러한 편차가 발생하는지는 사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에서는 대부분 판결에서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청구가 인용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실질적인 피해 내용과 성격은 사실상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가기구를 통해서 피해사실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른 배상 절차에서 국가가 다시금 당사자에게 부담(소송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부담, 입증책임의 곤란함, 장기간 절차에서의 불안정함 등)을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소송 과정에서 파편화되는 사건과 조직

국가폭력은 어느 개인에 대한 개별 사건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수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집단수용시설 사건, 해외입양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건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개별 당사자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피해는 당연히 세심히 다루어져야 하지만, 사건의 성격은 피해의 집단성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피해회복 과정에서는, 결국 사건은 피해자 개인의 명의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규명 운동을 함께하는 시민사회 일원이자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라는 이중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함께 진행하면서, 소송 단계에 들어서면 개별 피해자들이 사건을 개인적 피해로 받아들이게 되고, 피해자들 사이의 유대감이 약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국가폭력 사건의 최종 해결이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추모, 재발방지로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송이 짧아도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동안, 피해당사자들은 물론 진실규명 운동을 지원하던 시민사회 등의 지원조직 역시 점점 파편화되고 약화되는 상황은 막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이 활동 동력을 잃어간다면, 진실화해위원회를 통한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소송이 끝이 아닌, 화해를 위하여

가. 포괄적 배상 제도

현재 국가폭력 사안에서는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반복해서 자신의 피해를 진술해야 하고, 법원과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진짜 피해자’인지 여부를 의심받으며, 장기간 불안정한 시간을 거쳐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국가기구로부터,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받고도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2차 피해입니다.

포괄적 배상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 시기부터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이어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이 본격적으로 논

의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폭력 사건을 국가가 스스로 진실을 규명하고 배상 등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포괄적 배상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도 이제는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외 별도 노력

피해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손해배상 이외에도,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 교육, 생활 등의 지원이 가능하고, 추모사업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시는 2020. 1. 30.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2022. 6. 21.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료 및 생활 안정 지원과 추모사업 관련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대전 산내 골령골에는 정부에서 평화공원이 세워질 예정입니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5년 전에 완공되어야 했을 공원이 아직 공사 시작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합니다).

다. 손해배상의 성과를 모으는 고민

이전 국가폭력 사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그 승소 금액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9통일평화재단’은 소위 ‘인혁당’ 사건으로 희생당한 분들의 유족들이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출연하여 만들어졌고, ‘진실의 힘’은 조작간첩 사건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출연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센인들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에 함께했던 변호단에서 소송을 통해 확보한 사례금을 마중물로 하여 ‘함께하는 빛’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관련 활동을 이어가면서 다른 인권운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공익소송을 수행한 변호사들이 사건을 승소하면, 수령하는 성과보수 중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며 다른 공익활동, 공익소송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을 지속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Truth-Finding Decision

Gwon Tae-yoon,
Attorney(Committee on Historical Issues and Reparatio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covery and Reconciliation After the Truth-Finding Decision

Gwon Tae-yoon,

Attorney(Committee on Historical Issues and Reparation,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1. Introduction

In Korea, roughly two decades have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ereinafter, the “TRC”). Yet when it comes to remedies and restoration following truth-finding, the path ahead remains uncertain. In many cases, damage remedies have been pursued by way of civil litigation. This experience forces us to ask a basic question: can damages litigation truly be considered the final step in addressing past state violence?

2. Problems in Seeking Damages Through Litigation

A. Unclear standards

In past-abuses lawsui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is now largely treated as three years from the date the TRC’s decision is served on the applicant (see, e.g., Supreme Court, 26 Mar 2020, 2019Da220526). Even so, the first and second TRC periods created complicated, unsettled issues. Victims who have already had their harm officially recognized are still forced to litigate the same facts all over again, often having to counter the State’s insistence that claims be dismissed for lack of “objective evidence.”

Another difficulty is the way courts assess non-pecuniary damages (“consolation money”). Benchmarks offered in state-violence cases are inconsistent across panels and often tied to the type of case rather than the individualized extent and nature of harm. Typical awards repeat certain fixed amounts, effectively sidelining each victim’s effectively sidelining the lived experiences and harm of each victim. If a state body has already acknowledged the harm, it should

not again shift litigation burdens—time and cost, proof difficulties, and the insecurity of multi-year proceedings—back onto the victim.

B. Fragmentation of cases and organizations in the litigation process

State violence can be perpetrated against an individual, but frequently takes the form of organized, collective wrongdoing. While each victim’s personal harm must be addressed with care, the defining character of many incidents lies in their collective nature. Damages suits, however, are inevitably filed under individual names. This fragments cases and weakens the solidarity and capacity of civil groups that supported truth-finding in the first place. If movements and related organizations lose momentum, the “reconciliation” sought through the TRC process may fail to materialize.

3. Beyond Lawsuits—Toward Reconciliation

A. A comprehensive compensation scheme

Today, victims of state violence must repeat their trauma in court, face doubts from opposing counsel and even the bench about whether they are “real victims,” and wait through long, uncertain periods before receiving compensation. This is secondary victimization.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compensation system—one that avoids repetitive, adversarial suits—was already flagged during the first TRC. With discussions for a third TRC now underway, it is time to consider such a scheme in earnest to prevent further secondary harm.

B. Measures beyond damages by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eyond monetary damages,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an provide medical, educational, and livelihood support, and can also pursue memorial and remembrance projects. For example, the City of Busan enacted on 30 Jan 2020 the “Ordinance on Supporting Victims of the Brothers Home Incident” and planned a memorial park and museum—yet, tellingly, the project has still not broken ground despite a planned completion date five years ago. Implementation matters.

C. Pooling the fruits of litigation

There are examples where damage awards have seeded forward-looking initiatives. The 4·9 Unification Peace Foundation, for instance, was capitalized in part from damages obtained by bereaved families in the so-called “Inhyukdang” case. Likewise, some attorneys have voluntarily donated portions of contingency fees to sustain public-interest advocacy and litigation funds, transforming individual victories into broader, broader, ongoing public benefits.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2부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와 피해회복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발 제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개선 과제

토론 1 국회 해외입양 관련 포럼 발제문

토론 2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토론문

토론 3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한
해외법령, 판례 연구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2부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와 피해회복



발제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개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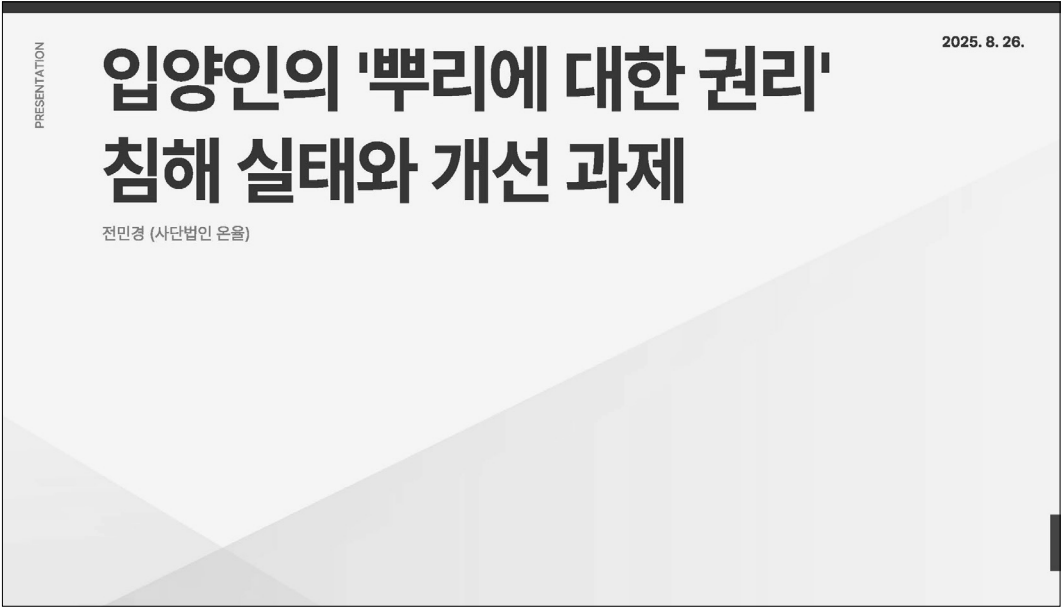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전민경

사단법인 온울

JEON MIN-KYEONG,
ATTORNEY (ONYUL)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개선 과제
전민경 사단법인 온울



목차	01 들어가며
	02 뿌리에 대한 권리의 개념
	03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뿌리에 대한 권리
	04 한국 입양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권리 침해 실태
	05 개선 과제와 정책 제언

들어가며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입양인의 출생에 관한 정보가 과연 오롯이 친생부모만의 정보인지, 입양인 자신의 정보는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 이러한 입양인 정보공개 청구의 현실은 단순한 정보 접근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정체성에 대한 침해라는 본질적 문제를 내포한다.

한국의 해외입양 역사와 현실

- 한국은 한국전쟁 이래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해외입양을 진행
- 수많은 입양인들이 생물학적 기원에 대한 단서를 차단당함
- 성인이 되어 돌아온 입양인들의 출생정보 요구에 제한적 대응
-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입양인의 권리 제한
- 사망한 부모의 정보조차 특별한 사유 없이는 제공 거부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 (1)

개념적 정의

-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 유전자 정보, 출생 배경 등 인간 존재의 근원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를 유전적 기원을 알 권리로 한정짓는 경우에도, 생물학적 기원에서 나아가 3가지 개념을 포섭함

3가지 개념 (by Rabitsky)

- (1) 의학적 측면
: 전체 가족의 의학적 병력과 유전적 정보 접근
- (2) 정체성 측면
: 친생부모에 대한 개인적 서술 정보를 통한 자아 형성
- (3) 관계적 측면
: 친생부모와의 관계 형성 및 신원 확인

생물학적 부모를 아는 것을 넘어, 친생부모의 서술을 통하여, 그 자녀가 스스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출생의 기원을 비로소 알게되는 권리

뿌리에 대한 권리의 개념

'뿌리에 대한 권리'의 의미



자신의 생물학적 기원 및 정체성을 알고, 이를 보존하고 회복할 수 있는 권리



친생부모, 조상, 언어, 문화 등과 같은 출생과 성장의 근원을 포괄하는 개념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의 열람권을 넘어, 자아 정체성과 인격의 기초가 되는 권리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

'정체성에 관한 권리'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 (2)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 제7조

- 제7조제1항: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한 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7조제2항: 국가는 아동이 출생등록 과정에서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의무 부여

• 아동의 정체성과 안정적 성장 환경 보장의 핵심 요소가 포함된 조항들

- 가족에서 생활할 권리(right to family life)와 연계
- 부모와의 분리 금지 원칙(제9조)
- 가족 재결합의 보장 원칙(제10조)
- 부모가 아동을 보호할 공동 책임(제18조, 제27조)

정체성에 관한 권리 (1)

정체성의 의미

- 정체성(identity)은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지 않은 고유한 식별 특성을 가진 상태'
-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개별화될 수 있는 고유한 실체로 만드는 것
- 자신만의 독창적인 특질을 통해 타인과의 차이를 형성

정체성의 구성 요소

- 정적(static) 요소: 변화가 쉽지 않은 요소
이름, 국적, 가족관계, 출생정보, 유전적 특질
- 동적(dynamic) 요소: 끊임없이 변화 가능한 요소
문화, 언어, 사회적 소속감, 법적·사회적 특성

'정체성을 알 권리'는 정적 정체성과 동적 정체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

정체성에 관한 권리 (2)

유엔 아동권리협약 (CRC)

• 제8조

- 제1항 : 아동의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규정
- 정체성에 국적, 이름, 가족관계 등을 포함

- 제2항 : 아동이 정체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가에 정체성 박탈 방지 의무 부여

• 정체성 박탈과 회복

- 제7조(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
+ 제8조 (정체성에 대한 권리 및 보호 규정)

- 입양정보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기록 자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를 불필요하게 침해함

뿌리에 대한 권리의 종합적 의미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 (CRC 제7조)



-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 권리
누구의 자식인지에 대한 정보
-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해
- 친생부모를 알고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
- 국가의 출생등록 과정에서 친생부모 정보 보장 의무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 (CRC 제8조)



- 생물학적 부모, 가족, 언어, 문화, 출생배경을 포괄하는 정체성을 보호
- 정체성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
- 국가의 정체성 보존 의무 부과

정체성 회복 및 지원 요구 권리



- 정체성이 박탈되었을 때 이를 회복할 권리
- 국가에 회복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구할 권리
- 정보접근, 기록 열람, 가족 찾기 지원 요구
- 정체성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구축 요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뿌리에 대한 권리

뿌리에 대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제10조, 제17조, 제36조 제1항에서 그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자율성, 가족관계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헌법 조항과의 연관성

-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 자신의 존엄한 인격권을 바탕으로 자율적 생활영역 형성 권리
: 자신의 기원에 대해 인식하고 정체성과 인격을 형성할 권리
-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율적으로 삶을 설계할 권리
-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가족과 강제로 분리되지 않을 권리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뿌리에 대한 권리

독자적 기본권으로서의 필요성과 정당성

- 뿌리에 대한 권리는 단순한 정보접근권이나 알 권리를 넘어서는 총체적 권리.
- 헌법재판소가 '출생등록될 권리'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선례에 비추어, 뿌리에 대한 권리 역시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으로 인정될 필요 있음

독자적 기본권 인정 요건

-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 및 정체성에 관한 권리 => 인간의 존엄실현과 밀접한 관계 존재
- '뿌리에 대한 권리'는 헌법 상 어느 하나의 기본권이나 헌법 조항에 온전히 포섭되지 아니함
-> 그러나, 해외입양인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부모를 찾고 인격과 정체성의 기초를 회복하려는 권리실현이 심각하게 제약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을 인정할 필요성 존재
- '뿌리에 대한 권리'는 출생의 기원에 대해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보존과 회복을 내용으로 함
-> UN CRC 제8조는 그 정체성을 불법적으로 박탈당하지 않도록 국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권리 내용(출생기록 접근, 정체성 보존, 관계 회복 등) 충분히 구체적이므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으로서 성립요건 충족함

입양정보공개청구 현황

01

정보공개청구 건수

- 2013년~2024년 3월까지
- 총 20,120건의 정보공개청구 접수

02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

- 친생부모 인적사항 공개: 3,665건
- 전체의 18.2%에 불과한 수치

03

입양인의 현실

- 80% 이상의 입양인이 자신의 부모 정보를 알 수 없음

04

기본권 제한 요소

- 친생부모 동의 요건 기반의 시스템
- > 입양인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

05

정보공개 처리 과정

- 입양기관/아동권리보장원에 정보공개 청구
- 친생부모 소재지 파악 시도(약 50%만 성공)
- 친생부모에게 동의 여부 확인 서신 발송
- 친생부모 동의 시에만 완전한 정보 제공
- 동의 거부 또는 무응답 시 부분 정보만 제공
- 친생부모 사망 시에도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필요
- 정보 제공 시 원본이 아닌 요약본만 제공
-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 기회 제한
- 법적 권리 보장의 실질적 실패

한국 입양제도의 구조적 문제

입양특례법 제36조의 한계

- 구 입양특례법 제36조(현 국내입양특별법 제33조)는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권 규정
-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구조적 한계 존재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취지

- 2011년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에서 처음 도입
-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입법 취지
- 입양인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청구 가능
- 입양기관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정보공개 주체로 기능

친생부모 동의 기반 구조의 문제점

-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정보공개 구조
- 친생부모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 제외하고 정보 제공
- 친생부모 사망 시에도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 필요
- 입양인의 정체성에 관한 권리보다 친생부모의 개인정보보호 우선

친생부모 소재지 파악의 어려움

소재지 파악 성공률

- ▮▮
- 2022년 전체 정보공개청구 2,043건 중 친생부모 소재지가 파악된 경우는 1,083건(53%)에 불과
- 2023년에는 2,717건 중 1,438건(53%)만이 소재지 파악 성공
- 절반에 가까운 청구에서 친생부모 동의 확인절차가 시작조차 되지 못함

주민등록번호 부재 문제

- ▮▮
- 입양기록에 친생부모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현 주소지 파악이 어려움
- 아동권리보장원은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 가능
- 주민등록번호 없이는 소재지 파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짐

불완전한 주소 정보

- ▮▮
- 행정구역상 '동' 단위 정도의 세부주소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소재지 파악 시도 불가
- 불완전한 주소 정보만 있는 경우 지자체를 통한 소재지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음
- 입양 당시에 부실하게 작성된 기록이 현재 입양인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동의 확인 절차의 문제점

등기우편 반송 및 무응답



- 현재 주소가 확인되었다도 실제 거주 여부, 장기 출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 빈번

- 아동권리보장원은 실무상 친생부모 소재지로 3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화신이 없으면 절차 종료

-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아도 다른 방법 미활용

무응답의 법적 해석



- 무응답 상태는 거부 의사로 볼 수 없음에도 실무상 동의 거부와 동일하게 처리

- 한편, 국내입양특별법 제33조 제2항은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 정보 제의

- 친생부모의 '적극적 거부 의사 표시'가 아닌 '응답 부재'까지 확대해석하여 입양인 권리 제한

통지서 내용의 불충분함



- 현행 통지서는 입양인의 정보공개 요청 사실과 동의여부를 묻는 간략한 내용만 포함

- 친생부모가 정보공개 의의와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

- 입양인에게 정보가 갖는 중요성,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설명 부족

사망한 친생부모의 정보공개 제한

사망자 정보 접근 제한



- 입양특별법 제36조 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의료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정보 공개 허용

- 이미 사망한 친생부모의 경우에도 입양인의 정보접근권을 제한

-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보다 입양인의 정체성 확인 권리가 경시됨

개인정보보호법과의 불균형



-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함

- 그러나 입양특별법은 사망한 친생부모의 정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요건 요구

-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 원칙보다 더 엄격한 기준 적용으로 입양인 차별

권리 보호의 불균형



- 사망한 친생부모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인의 권리 제한

- 친생부모의 권리와 입양인의 권리 간 균형이 심각하게 왜곡됨

- 보호법익간의 현저한 불균형 초래

예외조항의 비실효성

이중 요건의 문제



- 입양특별법 제36조 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사유가 있고,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보공개 허용

-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and' 조건으로 이중으로 엄격하게 규정

- 유전질환 등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보 확보 어려움

예외조항 적용 사례 부재



- 2013년 법 시행 이래 2024년 9월 기준, 입양특별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음

- 보건복지부 회신자료에 따르면 예외조항 적용 사례 전무

- 예외조항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형식적 조항에 불과

특별한 사유의 불명확성



-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범위가 법령상 제시되지 않음

-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지 예측 어려움

- 심각한 유전병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 의료적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에서조차 정보공개 거부

공개정보의 범위와 형식 제한

제한적 열거주의 방식



- 입양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정보공개 범위를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 정보, 입양인의 입양 전 정보 등으로 제한

- 열거주의 방식으로 공개대상 정보 한정

- 입양인이 알아야 할 정보의 범위를 법령이 임의로 제한

핵심 문서 미포함



- 입양의 적법성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문서인 '입양동의서'를 명시적 공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입양 결연 과정, 해외입양 출국 관련 서류,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서 등 중요 문서 제외

- 입양과정 전반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문서들이 공개대상에서 제외됨

요약 발췌문 제공의 한계



-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원본 문서가 아닌 발췌 요약 정리본만 제공

- 입양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둘러싼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움

- 문서의 서식, 서명, 작성 일자 등 입양과정의 적법성 확인에 필요한 맥락적 요소 차단

정보제공의 실효성과 신뢰성 문제

원본 문서 미제공



-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더라도 원본 문서가 아닌 발췌 요약 정리본만 제공
- 입양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전체 맥락 파악 불가능
- 5가지 항목(친생부모 인적사항, 입양 배경, 입양 전 정보 등)에 대한 요약본만 제공 되는 제한적 방식
- 문서의 진위성과 완전성 확인 불가능
- 정보의 누락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증가

절차적 적법성 확인 어려움



- 입양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검증에 필요한 핵심 문서 미공개
- '입양동의서'가 명시적 공개대상에 포함 되지 않음
- 입양 결연 과정, 해외입양 출국 관련 서류 등 제외
- 입양 후 사후관리 보고서 등 중요 문서 접근 제한
- 입양 과정 전반의 적법성 검증 불가능

맥락적 요소 부재



- 문서의 서식, 서명, 작성 일자 등 맥락적 정보 차단
- 입양과정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부재
- 발췌 제공 방식은 오히려 입양인의 의혹 증폭
- 정보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 조장
- 입양인의 알 권리와 정체성 회복권 침해

개선 과제와 정책 제언 (2)

01

원본 열람 허용

- 발췌본이 아닌 입양 관련 원본 문서의 열람 허용
- 문서의 형식, 서명, 작성일자 등 확인 가능

02

입양인 정보공개 담당자 확충

- 인력난의 해소는 인력의 보충으로

03

공정한 절차 마련

-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04

원본과 번역본 동시 제공

- 원본 뿐만 아니라 번역본도 동시 제공
- 가능하면 입양인의 언어로 제공

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개선 과제와 정책 제언 (1)

01

원칙적 공개

-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입양인의 정보접근을 원칙으로 하는 구조로 전환

02

예외적 비공개

- 친생부모의 명백한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
- 무응답을 거부 의사로 간주하지 않음

03

사망자 정보 공개

- 사망한 친생부모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 의료적 목적 등 특별 사유 요건 삭제

04

정보공개 범위 확대

- 입양동의서 등 핵심 문서 포함
- 입양 전 과정 관련 문서로 범위 확대

친생부모의 동의 기반
정보공개 구조를
입양인 중심의 권리 접근
구조로 전환

개선 과제와 정책 제언 (3)

01

입양 전 모든 기록

- 입양 전 아동의 삶에 관한 모든 기록 포함
- 아동의 생애 맥락에서의 입양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확보할 필요 존재

02

아동보호기관 기록

- 아동보호기관이 보호하던 당시 작성 기록
- 아동의 성장과 발달 관련 기록 포함

03

지자체 보관 기록

- 지자체의 아동보호시설 의뢰 서류 포함 의뢰 대장 등 행정기록 보존

04

기록 통합 관리

- 분산된 기록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 원본자료와 데이터 모두를 통합하여 관리

입양기록의 범위를 확대

개선 과제와 정책 제언 (4)

01

상담 지원

- 정보 접근 이후 심리·정서적 지원
- 전문 상담사를 통한 정체성 회복 지원

02

법률지원 체계

- 입양 관련 통합적 법률지원 필요
- 입양정보공개 / 인권침해 손해배상

03

가족재회 지원

- 친생가족 찾기 프로그램 운영
- DNA 검사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04

국가 책임 강화

- 국가 차원의 재정 및 인프라 구축
- 해외입양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입양인의 정보 접근 이후
후속 지원체계

맺으며

-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는 인간 존엄성 보장을 위한 핵심적 기본권
- 정체성 구성과 삶의 의미 회복을 위한 필수 요소
- 국가가 박탈한 뿌리는 국가가 책임지고 회복시킬 의무 존재
- 입양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JEON MIN-KYEONG, ATTORNEY (ONYUL)



Introduction

Adoptee's Right to Origin

Setting aside the debate on whether birth information is solely the birth parents' personal data or also the adoptee's own information, the reality of such requests for disclosure of adoptee records goes beyond mere access to information; it implicates the fundamental infringement of human dignity and identity.

The History and Reality of International Adoption in Korea

- South Korea has conducted large-scale international adoptions for decades since the Korean War.
- Countless adoptees are denied access to their biological origins.
- Limited responses to requests for birth information from adoptees who return as adults.
- Restrictions on adoptees' rights, citing the "privacy" of their biological parents.
- Refusal to provide information on even deceased parents without justification.

Index

- 01 Introduction
- 02 Concept of the "Right to Origin"
- 03 The Right to Origi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 04 Structural Problems in Korea's Adoption System and the Reality of Rights Violations
- 05 Tasks for Reform and Policy Recommendations

Concept of the Right to Origin

Meaning of Right to Origin



The right to know, preserve and restore one's biological roots and identity

It goes beyond the simple right to access biological information and becomes the foundation of self-identity and personality.



A concept encompassing the origins of birth and upbringing, such as biological parents, ancestors, language, and culture.



Right to know One's Origin

'Right to Identity

Right to Know One's Origin (1)

Conceptual Definition

- The right to know information about one's biological parents, genetic information, birth background, etc.
- Even if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 is limited to the right to know one's genetic origins, it goes beyond biological origins to encompass three distinct dimensions:

3 Dimensions (by Rabitsky)

- (1) Medical dimension
: Access to the complete family's medical history and genetic information
- (2) Identity Dimension
: Self-development through personal narrative information about biological parents
- (3) Relational Dimension
: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birth parents and truly understanding one's origins

Beyond knowing one's biological parents, the right of a child to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establish a relationship with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finally learn about the origins of their birth through the narratives of their biological parents.

Right to Know One's Origin (2)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

• Article 7

Article 7(a)
"The child shall be registered immediately after birth and shall have the right from birth to a name, the right to acquire a nationality and, as far as possible, the right to know and be cared for by his or her parents."

Article 7(b)
It obligates States Parties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se rights for all childre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obligations.

- Provisions that include key elements for ensuring children's identity and a stable environment for growth

Linked to the right to family life
- Prohibition of separation from parents (Article 9)
- Guarantee of family reunification (Article 10)
- Parents' shared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children (Articles 18 and 27)

Right to Identity (1)

Meaning of Identity

- Identity is "the state of having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stinguish one person or thing from another."
- It is what makes an individual a unique entity within the society to which he or she belongs.
- It creates a distinction between oneself and others through unique characteristics.

Elements of Identity

- Static Elements: Elements that are difficult to change. / Name, nationality, family relationships, birth information, genetic characteristics

- Dynamic Elements: Elements that are constantly changing / Culture, language and sense of social belonging

The "right to know one's identity" is a comprehensive concept encompassing both static and dynamic identities. It also encompasses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

Right to Identity (2)

UN 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CRC)

• Article 8

- Article 8(1) : Right to preserve child's identity
- Identity includes Nationality, name and family relations

- Article 8(2) : The State Parties are obligated to prevent the unlawful deprivation of any or all elements of a child's identity

• Identity deprivation and restoration

Article 7 (Right to Know the Origin of Birth)
+ Article 8 (Right to Identity and Protection Regulations)
- Except in cases wher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is practically impossible, the right to identity must be recognized.
- Even if records exist, legally and institutionally concealing information unnecessarily infringes children's rights.

The comprehensive meaning of the right to Origins

Right to Know One's Origin (CRC Article 7)



- The right to know where one comes from. Information about whose child one is
-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into which one was born
- The right to know one's biological parents and receive their protection
- The obligation to guarantee information on biological parents during the state's birth registration process

Right to Identity (CRC Article 8)



- Protection of identity, including biological parents, family, language, culture, and birth background.
- The right not to be unlawfully deprived of one's identity.
-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preserve one's identity.

Right to identity restoration and support



- When identity is taken away, the right to restore it
- the right to seek state measures and support for restoration
- the right to demand access to information, access to records, and assistance in finding family members
- the right to deman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for identity restoration

The Right to Origi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Constitutional Basis of the Right to Origins

While adoptees' right to their roots is not explicitly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its ideological foundation can be found in individual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This is closely linked to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human dignity, individual autonomy, and the prote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Relationship with constitutional provisions

- Article 10 (Human Dignity and Value)
: The right to establish an autonomous life based on one's dignity and personality rights
: The right to recognize one's origins and develop one's identity and personality
- Article 17(1) (Confidentiality and Freedom of Private Life)
: The right to confirm one's identity and plan one's life autonomously
- Article 36(1) (Guarantee of Marriage and Family Life)
: The right not to be forcibly separated from one's family

The Right to Origi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The necessity and legitimacy of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s

- The right to Origins is a comprehensive right that goes beyond the simple right to access information or the right to know.
-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cedent in recognizing the "right to birth registration" as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 The right to Origins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an unenumerated fundamental right under Article 3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The Right to Origin as a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of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s

-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 and the right to identity are closely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human dignity. The "right to origins" is not fully encompassed by any single fundamental right or provision of the Constitution.
- -> However, sinc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international adoptees to find their parents and restore the foundation of their personality and identity as adults is severely restricted, there is a need to recognize this as an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not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 The "right to origins" encompasses not only the right to know one's origins but also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one's identity.
- -> Article 8 of the UN CRC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state to prevent unlawful deprivation of identity. The content of this right (access to birth records, preservation of identity, restoration of relationships, etc.) is sufficiently specific, thus meeting the requirements for its existence as a fundamental right not explicitly enumerated in the Constitution.

Structural Problems in Korea's Adoption System

Limitations of Article 36 of the Special Adoption Act

- Article 36 of the former Special Adoption Act (now Article 33 of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stipulates adoptees'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 It also has structural limitations, predicated on the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The purpose of the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system

- First introduced in fully revised Special Adoption Act in 2011
- Legislative intent: to guarantee adoptees' right to know
- Adoptees can request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 Adoption agencies or the NCRC serve as the entities responsible for disclosing information

Problems with the structure based on consent from biological parents

- Information disclosure structure requiring the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 Information is provided without the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excluding personal information
- Even in the event of death of a biological parent, "special reasons, such as medical purposes" are required
- The protection of biological parents' personal information takes precedence over the adoptee's right to identity

Difficulty in locating birth parents

Success rate of location identification



- Of the 2,043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filed in 2022, only 1,083 (53%) were able to identify the biological parents.

- In 2023, only 1,438 (53%) of the 2,717 requests were able to identify the biological parents.

- In nearly half of the requests, the process of confirming the consent of the biological parents has not even begun.

Absenc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If the biological parent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not listed on the adoption recor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ir current address.

- NCRC can only search for information throug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Sharing Network if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s available.

- Without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location tracking is limited.

Incomplete address information



- If detailed addresses at the administrative district level ("dong") are missing, it's impossible to identify the adoptee's location.

- If only incomplete address information is available, it's impossible to identify the adoptee's location through local governments.

- Poorly prepared records at the time of adoption currently limit the adoptee's ability to exercise their rights.

Status of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01

Number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 From 2013 to March 2024
- A total of 20,120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received

02

Disclosure rate of biological parents' information

- Disclosure of biological parents' personal information: 3,665 cases
- A mere 18.2% of the total

03

The reality of adoptees

- More than 80% of adoptees do not know their parents' information.

04

Factors restricting fundamental rights

- A system based on the consent of biological parents -> Severely restricts adoptees' right to know

05 Information disclosure processing process

- Request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from adoption agencies/ NCRC
- Attempts to locate biological parents (successful only in about 50% of cases)
- Letters sent to biological parents to confirm consent
- Complete information provided only if the biological parents consent
- Only partial information provided if consent is refused or unanswered
-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medical reasons, are required even in the event of the biological parents' death
- Only summaries, not originals, are provided when providing information
- Limited opportunities for adoptees to restore their identity
- Substantial failure to guarantee legal rights

Consent confirmation process

Return of registered mail and no response



Even if the current address is confirmed, registered mail is frequently returned due to reasons such as actual residence, long-term absence, or absence from home.

NCRC, in practice, sends registered mail three times to the biological parents' locations, ending the process if there is no response.

Even if delivery is not made due to absence, other methods are not utilized.

Legal interpretation of non-response



Although non-response cannot be considered a refusal, in practice it is treated the same as refusal of consent.

Meanwhile, Article 33(2) of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excludes biological parent information even when consent cannot be confirmed.

The interpretation extends beyond the "active expression of refusal" by biological parents to "lack of response," thereby restricting adoptees' rights.

Insufficient content of the notification of consent



The current notice only briefly addresses the adoptee's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asks for consent.

The structure makes it difficult for biological parents to fully understan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sufficient explanation of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o adoptees and its impact on identity formation.

Ineffectiveness of exception provisions

The problem of double requirements



Article 36(3)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cases where the biological parents are deceased or unable to consent, and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medical purposes.

The "and" requirement, which requires both conditions to be met simultaneously, is doubly strict.

Even in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those involving genetic diseases, information is difficult to obtain.

Absence of application of exception clauses



Since the law went into effect in 2013, as of September 2024, not a single case has been disclosed under Article 36, Paragraph 3 of the Special Adoption Act.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response, there have been no cases where the exception clause has been applied.

The exception clause is merely a formality with no practical effect.

Unclearness of special reasons



No clear standards or scope for "special reasons, such as medical purposes" are provided in the law.

Difficult to predict when exceptions may be granted.

Information disclosure is denied even in urgent and critical medical situations, such as serious genetic disorders or life-threatening illnesses.

Limitations on the scope and format of disclosed information

Restrictive enumeration method



Article 1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limits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to personal information of biological parents, adoption background information, and adoptees' pre-adoption information.

Limiting information subject to disclosure through an enumeration-based approach.

The scope of information adoptees should know is arbitrarily limited by law.

Key documents are not included



The "Adoption Consent Form," a key document verifying the legitimacy and authenticity of an adoption, is not explicitly included in the disclosure requirements.

Key documents such as the adoption matchmaking process, documents related to overseas adoption departure, and post-adoption follow-up reports are excluded.

Documents necessary for understanding the overall adoption process are excluded from disclosure.

Limitations of providing summary excerpts



Even when information is disclosed, only excerpts and summaries are provided, not the original documents.

Adoptees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the full context surrounding their information.

Contextual elements necessary to verify the legitimacy of the adoption process, such as document format, signature, and date of creation, are blocked.

Restrictions on disclosure about deceased biological parents' info

Restricted access to deceased person information



Article 36(3) permits disclosure of information only for special reasons, such as medical purposes, even if the biological parents are deceased.

Even if the biological parents are deceased, adoptees' access to information is restricted.

Adoptees' right to identity verification is given less priority than the privacy of the deceased.

Imbalance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pplies to information about living individuals.

However, the Special Adoption Act imposes additional requirements on information about deceased biological parents.

Discrimination against adoptees occurs due to stricter standards than general privacy protection principles.

Imbalance in rights protection



Restrictions on adoptee rights despite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potential for privacy violations in the case of deceased biological parents.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s of biological parents and adoptees is severely distorted.

A significant imbalance between protected legal interests.

Effectiveness and reliability of information provision

Original document not provided



Even when information is disclosed, only excerpts and summaries are provided, not the original documents.

Adoptees are unable to grasp the full context of their information.

Limited access to only summaries of five key items (birth parents' personal information, adoption background, pre-adoption information, etc.)

Inability to verify the authenticity and completeness of documents

Increased anxiety about the possibility of missing information

Difficulty in verifying procedural legality



Key documents required to verify the procedural legitimacy of the adoption process are not disclosed.

The "Adoption Consent Form" is not explicitly included in the list of documents subject to disclosure.

Documents related to the adoption matchmaking process and overseas adoption departure are excluded.

Access to important documents such as post-adoption follow-up reports is restricted.

Verification of the overall legitimacy of the adoption process is impossible.

Absence of contextual elements



Blocking of contextual information, such as document format, signature, and date of cr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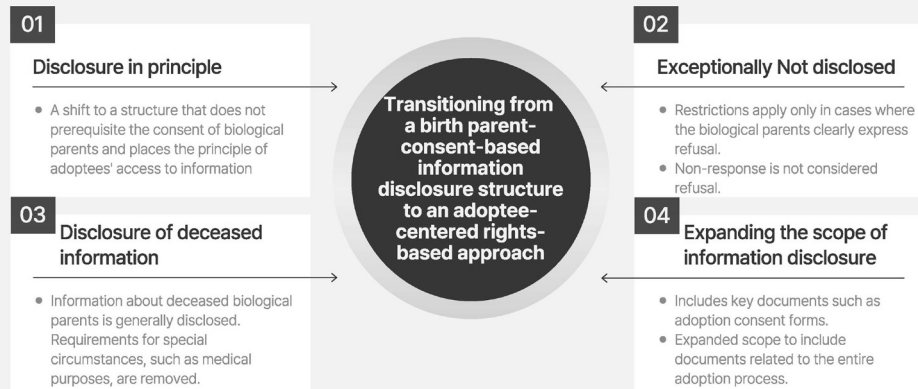
Absence of elements that could verify the authenticity of the adoption process

Providing excerpts actually increases adoptees' suspic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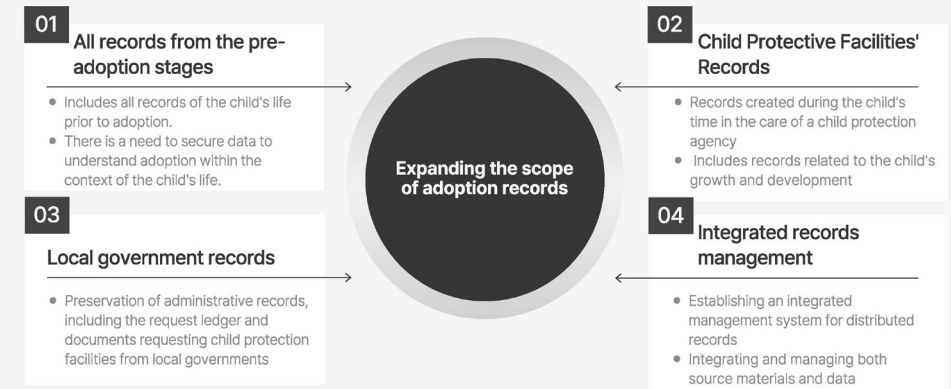
Promotes distrust of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Violates adoptees' right to know and right to identity recov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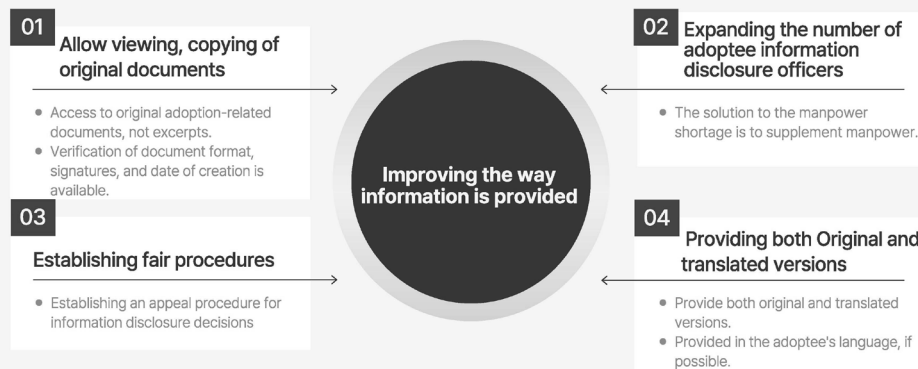
Improvement Tasks and Policy Suggestions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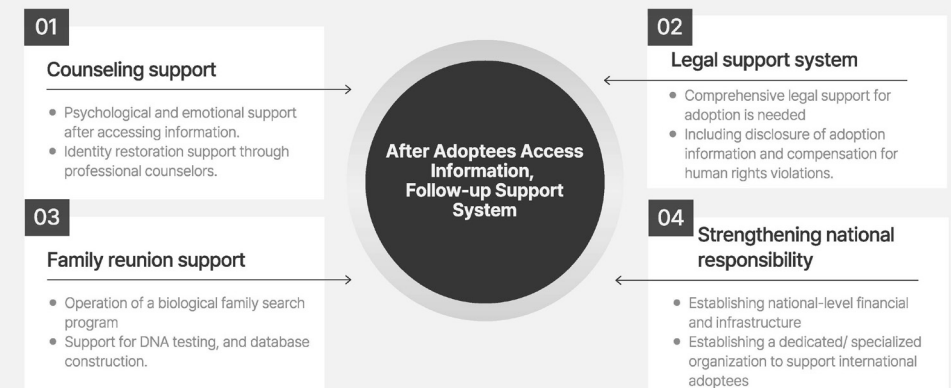
Improvement Tasks and Policy Suggestions (3)



Improvement Tasks and Policy Suggestions (2)



Improvement Tasks and Policy Suggestions (4)



In conclusion

- Adoptees' right to their roots is a core fundamental right for ensuring human dignity.
- It is an essential element for establishing identity and restoring meaning in life.
- The state has a responsibility to restore origins it has deprived.
- Legal, institutional, and policy efforts are needed to ensure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adoptees' rights.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Significance and Tasks of the TRC's
Human Rights Violation Decision on Intercountry Adoption

2부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와 피해회복

토론

토론 1 국회 해외입양 관련 포럼 발제문 신승엽

SPEECH — FORUM,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in Seung-yup (Korean Adoptee, NLKRG/EARS)

토론 2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토론문 이황희(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Discussion on the Presentation: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Lee Hwang-hee,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토론 3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한 해외법령, 판례 연구 임예지(법무법인 덕수)

Right of Adoptees to Know Their Origins:
Comparative Laws and Case Law
Lim Yeaji, Attorney (Law Firm Deoksu)

국회 해외입양 관련 포럼 발제문

신승엽

국회 해외입양 관련 포럼 발제문

신승엽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주최 측 관계자 여러분,
사랑하는 입양인 동료들, 가족들, 지지자들, 그리고 친구 여러분,

오늘 저는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 삶과 역사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삶과 맞닿아 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6건의 공식 인정 사례 중 한 명입니다. 제 입양은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인권 침해 사례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혼자가 아니라, 대륙과 바다를 건너 흩어진 수많은 한국 입양인들, 그리고 정의를 향한 싸움에서 늘 곁에 서 주신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2025년 3월 26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년에 걸친 독립적이고 면밀한 조사 끝에,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입양 제도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결론 내린 것입니다.

조사된 375건 가운데, 56건에서 중대한 기본권 침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311건은 여전

히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보아서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도, 작은 행정 착오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부모와 떼어놓고, 정체성을 지워내고, 세대를 넘어 침묵과 수치, 그리고 부재의 삶으로 몰아넣은 체계적 관행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 불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은 봉인된 기록 속에 묻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결코 제 것이 아니었던 이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가 아닌, 제가 ‘되어야 한다고 여겨진 모습’을 담은 여권을 쥐고 살아야 했습니다.

입양은 저에게 삶을 주었지만, 그것은 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침묵과 삭제, 허위 행정 위에 세워진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라고 배웠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배웠습니다.
질문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침묵을 깨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구합니다 – 아니, 단호히 외칩니다. 진실, 인정, 그리고 회복을.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손에 쥔 이 보고서, 이 권고안, 이 자리는 수십 년간의 싸움의 결실입니다.
서울에서 스톡홀름까지, 뉴욕에서 암스테르담까지, 성인이 된 입양인들은 싸워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서류를 청구하고, 글을 쓰고, 정부를 설득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침묵을 거

부해왔습니다.

우리는 봉인된 기록을 열어달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찾을 수 없다고 했던 가족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법을 공부했고,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네트워크를 세웠습니다.

개인의 슬픔은 이제 공동의 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환점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보고서가 “이 제도가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단순히 기관과 중개자들이 아니라.
그리고 처음으로, 국제사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과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단지 서류상의 존재가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존중받는 세상.
뿌리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되는 세상.

진실 · 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입양 제도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즉,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와 정체성을 알 권리, 보존할 권리, 회복할 권리입니다.

국제인권법, 특히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와 제8조는 명시합니다.
· 아동은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그리고 부모를 알고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국가는 아동의 정체성 – 가족 관계, 언어, 문화 – 를 보호하고 그 불법적 박탈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뿌리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서류에 적힌 이름을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 의학적 차원 – 가족의 병력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 정체성 차원 – 부모의 개인적 이야기를 알아 자기 삶의 뿌리를 세울 권리,
- 관계적 차원 – 가족을 만나고 알고,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입양인에게 이 권리는 인간 존엄, 자율, 자기결정의 근간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여전히 이 권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입양인들의 친생부모 정보 공개 청구 중 80% 이상이 거부되거나 부분 공개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 “무응답”을 거부로 간주한다는 이유.
- 심지어 부모가 이미 사망했어도 극히 제한된 “의학적 필요” 조항에서만 예외를 인정한다는 이유. 하지만 10여 년 동안 이 조항으로 승인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설령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원본은 주어지지 않고 일부 발췌본만 제공됩니다.

날짜, 서명, 절차적 세부 사항 같은 핵심 맥락이 지워진 채, 우리는 우리의 입양이 합법적이고 진정한 것인지 확인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기관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자의적인 정책을 내세워, 입양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서명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길을 차단해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입양 기록 전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폭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의 입양기관과 중개자는 우리의 역사에 대한 문지기 역할을 자처하며, 가족 · 정체성 · 기록에 접근하는 길을 통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기관들은 해외 정부와 입양 가정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받아왔고, 결국 인간의 삶을 수익 모델로 바꿔버렸습니다.

입양의 대가는 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진 가족, 훼손된 정체성, 그리고 수만

명의 영구적 이주로 치러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인도주의적”이라 정당화했지만, 그 규모와 수익은 다른 현실을 드러냅니다. 아이들이 수출품처럼, 짐작처럼 거래되었고, 뿌리는 흥정 가능한 상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진실 · 화해위원회의 결과는 반드시 이 경제적 유산이 인간적 대가와 함께 평가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만든 구조 자체를 직시해야 합니다.

헤이그 국제입양협약은 오랫동안 입양 비리를 막는 해법으로 제시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합시다. 이 협약은 입양인의 목소리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양부모를 보호하고, 송출국과 수입국을 보호하지만, 입양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 자신의 입양 기록에 접근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 입양 이후의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도 없습니다.
-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권리를 보장할 집행 수단도 없습니다.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가족을 찾았고, 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도가 작동한 것 아닌가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도가 저를 가족과 다시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싸워 얻어낸 것입니다. 제도는 오히려 파일 속에 이미 있던 진실을 수년간 숨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뿌리에 대한 권리가 단순한 사적 호기심이 아닌 이유입니다.

그것은 존엄, 자율, 정의의 문제입니다.

국가가 한 사람의 뿌리를 앗아갔다면, 그것을 되찾을 책임 또한 국가에 있습니다.

SPEECH — FORUM,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in Seung-yup

Korean Adoptee, NLKRG/EARS

SPEECH — FORUM, NATIONAL ASSEMBLY OF KOREA

Shin Seung-yup
Korean Adoptee, NLKRG/EARS

Distinguishe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Honored organizers,
Dear fellow adoptees, families, allies — friends,

Today, I stand before you not only as an individual but as someone whose life — whose history — has been bound together with so many others in this moment.

I am one of the 56 confirmed cases - my adoption case has been recognized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I speak not only for myself, but alongside my fellow Korean adoptees, scattered across continents, as well as, those who have stood beside us as we fought for justice — often against the tide.

On March 26, 2025,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took a historic step.

After years of careful, independent investigation, it conclu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bears responsi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intercountry adoption system.

Out of 375 cases investigated, 56 were found to involve serious violation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the majority of the cases, 311, are still waiting a decision.

Let's not downplay the gravity of this moment.

These were not isolated errors. Not minor bureaucratic mistakes.

They were systemic practices that separated children from parents, erased identities, and condemned generations to a life of silence, shame and erasure.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is injustice has been acknowledged.

The truth is no longer buried in sealed files. It is now in the open.
I know what it means to live with a name that was never truly mine.
To own a passport that tells the story of who I was supposed to become — not who I really was.

Adoption gave me a life — but it was not my life. It was a life built on silence, erasure, and bureaucratic fiction. And I know I'm not alone in this.
We were taught to be grateful.
To stay quiet.
To not ask too many questions.

But today, we break that silence.
Today, we ask — no, we demand — truth, recognition, and repair.

Make no mistake: this was not handed to us.
What you see today — this report, these recommendations, this forum — is the result of decades of struggle.

Adult adoptees, from Seoul to Stockholm, New York to Amsterdam, have been fighting.
Filing complaints. Writing. Lobbying. Speaking up— and refusing to be silent.

We kept requesting files that remained sealed.
We kept searching for families we were told could not be found.
We held governments accountable. We studied laws. We built networks.

What once was individual grief has become collective strength.

Now, we stand at a turning point.
For the first time, we have an official report that states: this system violated human rights.
For the first time, the government is being held to account — not just the agencies and intermediaries.

And for the first tim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orced to listen.

Together, we are ready to contribute to real, structural change.
Because this is not just about Korea. Not just about the past.

This is about what kind of world we want to build.
A world where children have rights — not just paperwork.
A world where origin is respected — not erased.

The TRC's findings make clear: adoption, as it was practiced, violated our **Right to Origin** — the right to know,

preserve, and restore our biological roots and identity.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articularly Articles 7 and 8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Children have the right to a name, nationality, and to know and be cared for by their parents.
-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protect a child's identity — family relations, language, culture — and to prevent its unlawful deprivation.

The Right to Origin is not limited to knowing names on paper. It includes:

- The medical dimension — access to full family medical history.
- The identity dimension — knowing the personal story of one's parents to shape one's own sense of self.
- The relational dimension — the ability to meet, know, and maintain contact with one's family.

For adoptees, this right is foundational to human dignity,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Yet in practice, Korea's laws and institutions continue to deny this right.

From 2013 to 2024, over 80% of adoptee requests for disclosure of birth parent information to the NCRC and private agencies were denied or resulted only in partial information. Why?

- Because consent could not be confirmed.
- Because “no response” is treated as refusal.
- Because even when parents are deceased, disclosure is limited to narrow “medical necessity” exceptions — and in more than a decade, only a handful of cases have been approved under that clause.

Even when disclosure is granted, adoptees are given only filtered extracts — never the original documents — stripping away crucial context such as dates, signatures, and procedural details. These omissions make it impossible to fully verify the lawfulness or authenticity of our adoptions. By hiding behind privacy regulations and arbitrary policies, agencies have blocked access to invaluable intake information so adoptees never knew who signed their adoption papers and how their adoption came to be.

This system was not just a legal failure; it was an industry.

And the violence of denying full access of one's own adoption files continues to this day.

Korean adoption agencies and intermediaries operated as the gatekeepers of our histories, controlling access to families, identities, and records. Over decades, these institutions received **billions of U.S. dollars** from foreign governments and adoptive families, turning human lives into a revenue stream. The cost of an adoption was not just financial — it was paid in broken families, stolen identities, and the permanent displacement of tens of thousands of

children.

While these agencies justified their work as “humanitarian,” the scale of profit exposes a different reality: a market that treated children as export goods, as luggage, and origins as negotiable commodities. The TRC’s findings demand that this financial legacy be examined alongside the human cost.

But we must also take a hard look at the structures that allowed this to happen.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has long been presented as the solution to adoption malpractice.

But let us be honest: this treaty — written without the voices of adoptees — was not created for us.

It protects adoptive parents.

It protects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But it says very little about the rights of the adopted child — especially after adoption.

There is no binding right to access your own adoption file.

No obligation for post-adoption care.

No mechanism to enforce our right to know where we come from.

That must change.

Some might say: “But you found your family, and you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 so the system worked for you.”

That is not true.

The system did not reunite me with my family — I had to fight for that myself. The system concealed the truth for years, even when the information it was right there in the file.

This is why the Right to Origin is not a private curiosity. It is a matter of dignity, autonomy, and justice. When the state has taken away a person’s roots, it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restoring them.

Today I have the privilege of speaking to amplify the voices of adoptees all over the world who were wronged — but who have become activists, researchers, artists, legislators, bridge-builders. And also, the voices of allies — families, lawyers, advocates — who listened instead of speaking over us. Who gave us space, not pity. Who stayed even when it was hard.

Together, we stand for something greater than compensation. We stand for dignity.

For the fundamental human dignity that no one should ever lose — regardless of where they were born or where they were sent.

The TRC’s findings give us a foundation for action:

1. Make **disclosure the rule** and non-disclosure the exception, regardless of whether the parents are deceased or whether there is a medical emergency.

2. Give adoptees **original unredacted records in English and Korean**, not filtered extracts.

3. Expand adoption records to include all documents from before, during, and after the adoption.

4. Guarantee **post-disclosure support** — counseling, legal help, and reunion services.

Recognize the Right to Origin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right in Korea.

I end with this call:

Let us move beyond legal liability and speak of moral responsibility.

Let us recognize that every person is born with the right to know who they are — and no system should ever take that away.

This forum is not the end. It is a beginning. A beginning of dialogue, of repair, of rewriting a history that was hidden too long. Because what happened to us was not fate. It was a decision. And what we do now — that too is a decision.

We are still waiting for a response from the TRC report. After the acknowledgement of wrong doing, after the truth telling, we need to move towards repair and reparation.

Without action, the results of the TRC are just a hollow acknowledgement of historic wrongdoing that stays as a mark of shame on Korea and its history. But this is not only history: we are still living, and our children will continue to carry on the legacy and scars of this adoption policy.

As such, a swift and comprehensive response needs to be implemented; a clear timeline of how the current administration plans to change policy in line with the restoration of dignity and identity for adoptees is needed. We are waiting for an answer, and hope this forum is a continuation of the push towards justice for adoptees.

Let us create a world where no one ever again has to say:

“I was given a life that was never mine.”

Thank you.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토론문

이황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침해 실태와 과제」 토론문

이황희

발표문은,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해당 권리의 내용과 헌법적 근거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현행법의 문제를 검토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의식과 접근법, 해법에 관한 발표문의 전반적인 관점에 공감합니다. 저의 토론은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송적인 접근을 전제로 몇 말씀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뿌리에 대한 권리’(right to origin)의 기본권성이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이 권리가 기본권성을 인정받을 만한 충분한 근거와 필요성이 있다는 발제문의 입장에 공감합니다. 다만, ‘뿌리에 대한 권리’라는 표현은 은유적인 성격이 있는데, 통상적인 기본권들의 네이밍과는 결이 달라서, 조금 더 직설적인 표현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ex. 출생에 대한 권리? 혹은, 태생에 대한? 혹은, 혈통에 대한?)

2. 뿌리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내입양특별법’) 중에서 입양정보의 공개를 위해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33조 제2항,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입양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동조 제3항입니다. 전반적으로 해당 조항들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조항들이 입양인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법익을 추구하는지를 확정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만약, 공익을 위한 입양인 권리의 제한이라면, 이는 전형적인 비례원칙 심사 대상이 됩니다(공익—사익 구도). 반면, 친생부모의 권리(ex. 사생활의 비밀 등)를 보호하기 위한 입양인 권리의 제한이라면, 이는 강화상 기본권 충돌 사안에 해당하고 여기에도 비례원칙 심사가 적용됩니다(사익—사익 구도). 이처럼 양자는 비례원칙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실무상으로 비례원칙 심사에서 피해의 최소성 심사를 충실히 하느냐, 아니면 생략 혹은 간략히 하느냐에 관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가 공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이라면(공익—사익 구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본래 자유롭고 자기목적적인 기본권 영역’과 ‘기본권에 구속되는 수단으로서의 국가 영역’ 간의 차이로 인해 국가의 ‘필요 최소한도’의 개입이라는 당위가 명확하게 성립합니다. 반면, 국가가 사익을 위해 사익을 제한하는 것이라면(사익—사익 구도), 이때 국가는 충돌하는 사익 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일방적인 희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필요 최소한도의 제한이라는 당위가 다소 미약해집니다. 이것은, 기본권 충돌 사안에서 3단계 심사, 즉 ‘목적의 정당성’ 충족 여부, ‘수단의 적합성’ 충족 여부,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충족 여부라는 심사구도를 취하고 있는 최근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심사는 통상적으로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 가깝게 이루어집니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가 거의 생략되거나 상당 부분 약화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헌재 2019. 4. 11. 2017헌바127)에서, 해당 조항을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간의 기본권 충돌 사안(사익—사익 구도)으로

보지 않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객관적 가치를 공익으로 설정한 다음 이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안(공익—사익 구도)으로 설정한 것 역시 이러한 심사구도상의 차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3. 그렇다면 심사구도상 유리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선 달성하려는 법익을 ‘공익’적인 것으로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만약 사익—사익 구도로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입양자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친생부모의 사생활의 비밀보다 더 우월한 상위의 기본권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3단계 심사구도의 취지는, 충돌하는 두 기본권 중 “어느 쪽이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입양자의 권리가 더 우월하다면 더 우월한 기본권의 보호를 위해 피해의 최소성 원칙이 다시금 필요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본권 충돌 사안에서 상위 기본권과 하위 기본권 간의 충돌 문제로 이해한 흡연 제한 사안에서는 (물론 해당 사안은 공익—사익 구도 또한 중첩적으로 적용하기는 했으나) 피해의 최소성 심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이와 같은 구도설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안은 아마도 3단계 심사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위의 문제되는 법률 조항들의 위헌성을 충분히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기본권 충돌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므로” 어느 한 기본권의 제한과 다른 기본권의 보호가 적절한 비례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 비례 유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즉, 어느 한 기본권을 위하여 다른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과 같은 불비례적인 방식은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생부모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친생부모가 적극적으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만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은 친생부모의 권리 보호와 입양자의 권리 제한 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적극적인 동의 혹은 부동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모호한 영역’, 가령 응답 부재나 회신 없음의 영역을 전적으로 입양인에 대한 불이익한 결과와 등치되도록 주조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생부모의 적극적인 동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친생부모의 동의에 압도적인 비중을 설정함으로써, 그와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한 입양자가 다른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불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와 입양자의 기본권 제한이 적절한 비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즉 상호 불비례적인 관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5. 사족으로 한 마디를 덧붙인다면, 발제문에서 소개한 ‘평화적 생존권’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때 인정하였으나, 이내 판례를 변경하여 부정한 권리이므로(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이를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Discussion on the Presentation: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Lee Hwang-hee, Professor(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Discussion on the Presentation: Status and Challenges in Violations of Adoptees' Right to Origin

Lee Hwang-hee,

Professor(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Law)

The presentation frames the “right to origin” of adoptees by outlining its content, its constitutional basis, the problems in current legislation, and the tasks ahead. I share the overall perspective of the paper—its concerns, methodology, and proposed solutions. My remarks today will approach the issue from a constitutional-litigation perspective.

1. First and foremost, what matters is whether the “right to origin” qualifies as a constitutional right. I agree with the paper’s view that there is ample basis and need to recognize it as such. That said, the expression “right to origin” is somewhat metaphorical and departs from the conventional naming of fundamental rights. A more direct formulation—such as a right to know one’s birth, one’s biological origins, or one’s parentage—may be preferable.
2. The main problem arises under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rticle 33(2) requires the consent of birth parents for disclosure of adoption records. Article 33(3) further prohibits disclosure altogether—unless for medical or other special reasons—if the birth parents die without having given consent. Taken together, these provisions leave ample room for challenge as violations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what legal interest these provisions seek to protect in restricting adoptees’ rights. If the restriction is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 it becomes a typical subject of proportionality review—a public-versus-private scenario. If, on the other hand, the restriction is to protect the rights of birth parents, such as privacy, then it constitutes a case of conflicting fundamental rights—a private-versus-private scenario—which is likewise subject to proportionality review. In both setting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applies, but in practice the difference lies in whether the “least restrictive means” test is carried out thoroughly, or instead omitted or applied only in a limited way.

If the State restricts a private right in pursuit of the public interest (a public–private interest conflict), Article 37(2)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such restrictions may be imposed only “when necessary.” In this context, the distinction between rights that are “inherently free and self-purposive” and those that are “subject to the State as an instrument of regulation” makes clear the imperative of state intervention being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extent.” By contrast, when the State restricts one private right for the sake of another private right (a private–private interest conflict), the State is acting as a mediator between conflicting private interests. In such cases, neither side can be made to bear a unilateral sacrifice, and thus the imperative of a “minimum restriction” is considerably weaker.

This distinction is evident in recent Constitutional Court jurisprudence, which has adopted a three-stage proportionality test in cases involving conflicts of fundamental rights: (1) legitimacy of purpose, (2) suitability of means, and (3) proportionality of the restriction. Within this framework, the proportionality analysis is generally conducted as a balancing of interests, with the “least restrictive means” requirement often omitted or substantially weakene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declaring the criminal provisions on abortion unconstitutional (Constitutional Court, April 11, 2019, 2017Hun-Ba127) illustrates this point. Rather than treating the matter as a direct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between the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fetus’s right to life (a private–private conflict)—the Court framed it as a restriction of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the objective value of fetal life, thereby recasting it as a public–private conflict. This demonstrates the Court’s awareness of the differences in review structure described above.

3. From the standpoint of constitutional review, there are two possible ways to secure a more favorable framework. First, as explained earlier, the protected legal interest may be framed as a matter of “public interest,” thereby placing the case within the public–private category. Second, even if the issue is treated as a private–private conflict, it is possible to argue that the adoptee’s right to origin constitutes a higher-ranking fundamental right than the birth parents’ right to privacy.

The very rationale of the three-step proportionality test is that, because no fundamental right can ordinarily be deemed categorically superior to another, “a harmonious solution must be sought that allows both rights to function and exert their effect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in order to preserve the unity of the Constitution.” Yet if the adoptee’s right is recognized as the superior right, the principle of least restrictive means regains its full force: the protection of the higher-ranking right obliges the State to minimize restrictions on the lower-ranking right.

Indeed, in cases where conflicts were understood as involving higher- versus lower-ranking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ducted genuine minimum impairment analysis. For example, in decisions addressing restrictions on smoking—although the Court also invoked a public–private framework in parallel—it nonetheless carried out a substantive assessment of whether the restrictions satisfied the principle of least

restrictive means.

However, if such a framing cannot be smoothly established, it is likely that the Court will proceed under the standard three-step proportionality test. Even in that case, I believe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still be able to sufficiently establish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at issue.

In ordinary cases of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has consistently held that “a harmonious solution must be sought that enables both rights to function and exert their full effect,” and it examines whether the restriction of one right and the protection of another are kept in proper proportion. In other words, a disproportionate approach—sacrificing one right unilaterally for the sake of another—cannot be tolerated under the Constitution.

With respect to disclosure of birth information, the law currently conditions disclosure not on an explicit objection by the birth parents, but on their explicit consent. This framework disrupts the balance between protecting the rights of birth parents and restricting the rights of adoptees. The structure effectively equates the “gray zone”—cases of silence or non-response—with a categorical disadvantage for adoptees. Moreover, absent affirmative consent, adoptees are completely barred from obtaining even the most basic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their birth parents. By assigning overwhelming weight to parental consent, the law forecloses any possibility for adoptees to explore alternative avenues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origin.

This demonstrates that the provisions fail to maintain a proper propor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cy of birth parents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adoptees—in short, the relationship is one of disproportionality.

5. As a final note, the “right to peaceful existence” introduced in the presentation was at one point recogniz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the Court later reversed its precedent and rejected it (Constitutional Court, May 28, 2009, 2007Hun-Ma369). For this reason, I am not certain whether making reference to it here would be helpful.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한 해외법령, 판례 연구

임예지 법무법인 덕수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한 해외법령, 판례 연구¹⁾

임예지
법무법인 덕수

I. 해외 비교법 연구— 국가별 입양인의 알권리 보장 현황

1. 스웨덴

(1) 개관

스웨덴은 1993. 5. 29.에 체결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여 국내법에 통합하였고, 이와 관련된 법률도 정비하였다²⁾³⁾.

1) 본 발제는 온 마을 Law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한 비교법 연구」(공동연구자 김선휴, 김영미, 소라미, 원의림, 윤이나, 임예지, 전민경, 황준협), 2025 중 일부를 정리한 내용임을 밝힌다.

2) 김효진, 이재연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4호(2011), 138면

3) Excerpts from Swedish legal provisions concerning intercountry adoptions,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July 2016, https://www.mfof.se/download/18_7a15f94516e8e25421b349ea/1575532272623/swedish-laws-concerning-adoption-july2016.pdf, 2024. 11. 29. 열람.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사회복지법(2001:453) ^{4) 5)} , 아동가족법(1949:381) ⁶⁾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2018:1289) ⁷⁾ , 국제입양에 관한 규정(2018:1296) ⁸⁾ , 스웨덴의 아동 보호 및 국제 입양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가입에 관한 법률(1997:19), 국제입양 중개법(1997:192)
2	청구권자	입양인 본인, 입양부모, 친생가족 ⁹⁾
3	청구기관	MFoF(가족법 및 부모지원 기관), 사법기관, 민간기관, 스웨덴 이민청, 스웨덴 기록원, 스웨덴 국세청 ¹⁰⁾ .
4	공개요건	18세 이상 입양인(친생부모 동의 불요)
5	정보공개내용	공개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혼인 여부, 국적 민감정보: 출생 관련 정보, 성별전환 여부 및 장애, 입양에 관한 정보 ¹¹⁾
6	정보공개절차	18세 이상 입양인이 MFoF에 입양정보공개 신청하면 친생부모의 나이, 건강상태, 사회적 상황, 입양 사유 등 정보가 제공됨.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출생지 및 입양기록 추적 지원, 입양인 대상 상담 및 심리지원
8	불복방법	18세 이상 입양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자신의 입양여부 및 친생부모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불복의 여지가 없음

(3) 시사점

스웨덴의 입양기록을 관할하는 MFoF(가족법 및 부모지원 기관)에서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18세 이상 입양인에게 입양 관련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며, 출생지(origin) 및 입양기록 추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 친생가족이 입양인과의 소통을 거부할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이후 지속적인 연락 시도와 심리 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4) 스웨덴 가족법 및 부모 지원 기관 Myndigheten för familj rätt och föräldraskapsstöd(MFoF) <https://www.mfof.se/internationella-adoptioner/stod-och-vagledning/att-soka-sitt-ursprung/vagledning-vid-ursprungssokning/inledning-och-information/lagar-och-bindande-konventioner-for-sverige.html>, 2024. 10. 20. 열람.

5) Exerpts from Swedish legal provisions concerning intercountry adoptions,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August 2023 https://www.mfof.se/download/18_7c267bb719379bee5769d09/1692340960667/Excerpts%20from%20Swedish%20legal%20provisions%20concerning%20intercountry%20adoptions_20230818.pdf 에서 발췌 후 ChatGPT 이용하여 영한번역함.

6) 상동

7) Excerpts from Swedish legal provisions concerning intercountry adoptions,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July 2016, https://www.mfof.se/download/18_7a15f94516e8e25421b349ea/1575532272623/swedish-laws-concerning-adoption-july2016.pdf, 2024. 11. 29. 열람.

8) 상동

9) 스웨덴 가족법 및 부모 지원 기관 Myndigheten för familj rätt och föräldraskapsstöd(MFoF) <https://www.mfof.se/internationella-adoptioner/stod-och-vagledning/att-soka-sitt-ursprung/vagledning-vid-ursprungssokning/att-bli-hittad-av-sin-biologiska-familj.html>, 2024. 11. 29. 열람.

10) 스웨덴 국세청 Skatteverket > 안내 > 2024년 >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정책 > 인구등록 업무 및 관련 업무 <https://www4.skatteverket.se/rattsligvagledning/edition/2024.3/329108.html>, 2024. 12. 9. 열람.

11) 상동

2. 덴마크

(1) 개관

덴마크는 1997. 11. 1.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고, 덴마크 입양법 및 관련 법률에 동 협약의 내용을 통합하였다. 또, 2008. 11. 27.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정된 유럽 아동 입양에 관한 협약에 서명했다¹²⁾. 2024년 1월, 덴마크 사회부는 1970-80년대 한국에서 덴마크로의 입양 과정에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로 인해 덴마크의 유일한 해외 입양기관인 덴마크 국제 입양(DIA)은 2024. 1. 16. 해외입양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¹³⁾.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CRC 헤이그협약 이행법률, 입양법 ¹⁴⁾ , 입양 가이드라인 ¹⁵⁾ , 유럽 아동 입양에 관한 협약 ¹⁶⁾
2	청구권자	18세 이상 입양인, 18세 미만 입양인의 입양 부모 ¹⁷⁾
3	청구기관	이의신청위원회, 가족법원, 입양심의회, 입양위원회, Danish International Adoption(DIA)
4	공개요건	18세 이상 입양인(친생부모 동의 불요)
5	정보공개내용	입양 배경, 친생가족의 신원정보 및 비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일체 ¹⁸⁾
6	정보공개절차	이의신청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 덴마크기록원에 보관된 인구등록정보 요청, 인구등록사무소에 친생부모의 생사 여부와 현재 거주지 정보 요청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추적 서비스: 없음 입양인 대상 상담 및 심리지원: 있음 ¹⁹⁾
8	불복방법	18세 이상 입양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자신의 입양여부 및 친생부모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법적으로 인정되므로 불복의 여지가 없음

12) 덴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 입양에 관한 2008년 11월 27일 유럽 협약 선언(개정)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r/2012/18> 2024. 12. 9. 열람.

13) 덴마크 ‘입양 중단’ 발표… 입양인 그룹 “잘된 일”,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LQ2Fr?utm_source=chatgpt.com, 2024. 12. 9. 열람.

14) 덴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법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a/2019/775>, 2024. 12. 9. 열람.

15) 덴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입양 가이드라인 <https://www.retsinformation.dk/eli/retsinfo/2023/10084>, 2024. 12. 9. 열람

16) 덴마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 입양에 관한 2008년 11월 27일 유럽 협약 선언(개정)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r/2012/18> 2024. 12. 9. 열람.

17) 덴마크 항소기관 Ankestyrelsen <https://ast.dk/born-familie/hvad-handler-din-klage-om/adoption/fremmedadoption/adoptivbar-nets-oprindelige-foraeldre>, 2024. 12. 9. 열람.

18) Questionnaire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HCCH <https://assets.hcch.net/docs/dc7f8077-b675-4974-8241-49d331859b12.pdf>, p19, 2020. 2024. 12. 9. 열람.

19) 상동

(3) 시사점

덴마크의 입양정보공개에 관한 법규의 시사점은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 인증한 단일한 입양 기관이 입양을 중개한다는 점, 입양정보 제공에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 입양 여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제공한다는 점,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자 할 때, 입양 정보에 새롭게 접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 등이다.

3. 노르웨이

(1) 개관

노르웨이 입양법은 1986. 2. 28. 제정되었으며 제2장에서 비밀입양과 정보제공의 의무, 제4장에서 국제입양을 규정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입양은 오직 정부의 승인에 의해서만 허가되며, 입양은 아동의 복리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노르웨이는 자국 아동의 해외 입양을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 아동이 노르웨이로 입양되는 것만을 인정한다²⁰⁾. 노르웨이 입양법 제3조에 따라 입양 기관은 관련 정부 부처(아동청소년가족부)이고,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CRC 헤이그협약 이행법률 ²¹⁾ , 입양법 ²²⁾
2	청구권자	입양인, 친생부모
3	청구기관	아동청소년가족국(Bufdir) ²³⁾ , 국가기록원(이 경우 미성년 입양인도 가능) ²⁴⁾
4	공개요건	입양인(아동청소년가족국 18세 이상, 국가기록원 미성년 가능, 친생부모의 동의 불요)
5	정보공개내용	제한 없음

20) 김효진, 이재연 “국내의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4호 (2011), 138면

21) Mandate for the Investigation of Historical Foreign Adoptions,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8f5e8adf32dd480aab97fc-5b63e9f4b8/mandate-for-the-investigation-of-historical-foreign-adoptions.pdf?utm_source=chatgpt.com, 2024. 12. 9. 열람.

22) 김효진, 이재연 “국내의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34호 (2011), 138면

23) 노르웨이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담당국 Bufdir(<https://www.bufdir.no/om/>), 24. 10. 20. 열람.

24) 노르웨이 국가기록원, 생물학적 기원, 게시일 2017. 5. 28. 최종수정일 2024. 6. 26., https://www.arkivverket.no/en/personal-documentation/biological-origin?utm_source=chatgpt.com, 2024. 12. 9. 열람.

순번	항목	내용
6	정보공개절차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에 ‘외국 입양 서류에 대한 접근(Access to foreign adoption documents)’을 제목으로 한 문의사항을 보내면 입양 사건에 대한 정보가 제공됨 ²⁵⁾²⁶⁾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1) 추적 서비스 아동청소년가족국에 ‘생물학적 기원 검색(Search for biological origin)’을 제목으로 한 문의사항을 보내면 됨. 필요한 서류 번역 비용, 입양인과 친생부모 간의 첫 전화 통화를 위한 전화 통역사 비용이 지원됨 ²⁷⁾ . 2) 입양인 대상 상담 및 심리지원 ²⁸⁾
8	불복방법	입양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고 우려되는 경우, 노르웨이 아동청소년가족국에 ‘입양에 대한 우려(Concerned about adoption)’를 제목으로 한 문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고, 해외입양조사위원회(The examination committee for foreign adoptions)에 조사 요청할 수 있음 ²⁹⁾ .

(3) 시사점

입양아가 18세에 도달하면 입양기관은 입양인에게 입양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성년 입양인의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입양인이 신청하면 입양에 관한 정보가 제공된다. 입양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2023년 신설된 해외입양조사위원회를 통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불법 또는 비윤리가 없었는지 밝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찾기 지원 서비스도 문서작성, 번역, 전화통화 통역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영국

(1) 개관

1999년 영국은 ‘헤이그 아동보호 및 국가간 입양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입양과 관련된 일부 법 내용을 개정했다. 그 후 2003년에 헤이협약을 비준했고 그에 따라 국가 간 입양 및 국내 입양 관련 법률을 추가로 개정했다.

영국의 입양절차를 규율하는 현행법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이하 ‘2002 입양 및 아동법’이라고 함)으로 2005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동 법은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과 「1989년 아동법(Children Act 1989)」과 동일하게 아동복지 고려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국의 입양절차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부합하도록 하였다.³⁰⁾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2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입양인, 입양인 이외의 자
3	청구기관	입양기관 ³¹⁾
4	공개요건	정보공개 대상이 성인인 경우, 입양기관의 재량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공개 처리 ³²⁾
5	정보공개내용	입양인 또는 다른 사람에 관한 정보와 해당 개인에 대한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정보(입양인의 출생기록 인증사본, 입양등록부상 입양인에 관한 항목에 관한 정보)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서만 공개됨 ³³⁾³⁴⁾ 다만 이러한 제한 규정은 입양기관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부모 또는 친생부모와 정보공개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³⁵⁾
6	정보공개절차	서면으로 결정 내용 통지, 결정 이유, 불복절차 고지 ³⁶⁾
7	가족찾기지원 서비스	입양정보공개를 신청하는 자에게 입양기관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 ³⁷⁾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상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입양기관은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³⁸⁾ 입양인은 입양정보공개 관련 상담 무료. ³⁹⁾
8	불복방법	통지 발송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이의신청하여 독립 검토 패널의 검토를 신청할 수 있음 ⁴⁰⁾⁴¹⁾

30) 영국은 1991. 12. 16.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하였다.

31)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제57,58조

32)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제61조

33)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제57조 제3항

34)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제57조 제1항

35)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제57조 제5항

36)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15조 (2)항

37)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제63조

38)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17조 (1)항

39)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22조 (2)항

40)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15조 (2)항

41)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제15조 (3)항

25) 노르웨이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담당국 Bufdir, 입양 절차에 대한 접근 <https://www.bufdir.no/adopsjon/opprinnelse-og-innsyn/>, 2024. 12. 9. 열람.
26) 노르웨이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담당국 Bufdir, 입양 절차에 대한 접근 <https://www.bufdir.no/adopsjon/opprinnelse-og-innsyn/>, 2024. 12. 9. 열람.
27) 노르웨이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담당국 Bufdir, 생물학적 혈통 검색에 관한 정보 및 상담 지원<https://www.bufdir.no/adopsjon/soke-et-ter-opprinnelse/>, 24. 12. 9. 열람.
28) 상동
29) 노르웨이 아동, 청소년 및 가족 담당국 Bufdir, 입양 사건에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고 우려되는 경우 문의 안내 <https://www.bufdir.no/adopsjon/bekymret/>, 24. 12. 9. 열람.

(3) 시사점

영국의 경우 입양인은 성인이 되면 별도의 요건 없이 자신의 입양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 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고등법원 또는 가정법원에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제한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도록 규정하여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친생부모에 대한 식별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되는 지점이다. 또한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입양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다. 누구든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입양인 이외의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이 적절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입양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상담제공을 안내하도록 하고, 상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만하다. 상담서비스의 제공은 입양정보의 공개 이후 수십년간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들이 상봉하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입양특례법 상 입양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단 하나의 조문을 두고 있을 뿐 정보공개청구절차와 이후 상봉절차에 있어 상담이나 어떠한 지원 서비스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5. 아일랜드

(1) 개관

아일랜드는 2010. 7. 28. ‘헤이그 아동보호 및 국가간 입양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 협약’)을 비준하였고, 동 협약은 「2010년 입양법(2010년 입양법)」(이하 「2010년 입양법」이라고 함) 제9조에 따라 2010. 11. 1. 발효,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아일랜드 정부가 2015년 발족한 ‘미혼모와 아이들을 위한 시설 조사 위원회(Mother and Baby Homes Commission of Investigation)’는 가톨릭교회가 대부분 운영하는 아일랜드의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192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수천 명의 영아가 사망했다는 조사⁴²⁾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위원회는 조사 보고서에서 “입양된 사람은 출생증명서와 관련된 출생 정

42)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vestigation into Mother and Baby Homes”, 12 January 2021(last updated on 22 November 2021).

보를 확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는 중요한 인권이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되어야 한다. 입양 당시 작성된 의료 정보와 입양 기록도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입양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권고의 영향으로 아일랜드 의회는 입양인의 출생 정보 접근권을 규정한 「2022년 출생정보 및 추적법」을 입법하였다. 이로써 아일랜드 입양인들은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출생, 초기 생애 및 의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CRC 헤이그협약 이행법률-2010년 입양법, 2022년 출생정보 및 추적법
2	청구권자	만 16세 이상의 관련자 ⁴³⁾ , 본인의 친생부모나 입양부모가 관련자였고 사망하였으며 본인이 만 18세 이상인 자, 부록(the Schedule)에 명시된 기관에 거주하는 동안 사망한 관련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 ⁴⁴⁾ 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3	청구기관	일반등록사무소(GRO), 입양청(AAI), Tusla ⁴⁵⁾
4	공개요건	친생부모가 연락과 접촉을 원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면 입양인들에게 친생부모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5	정보공개내용	출생증명서 사본 ⁴⁶⁾ , 출생 정보(birth information), 생애 초기 관련 정보(early life information), 보호(care) 관련 정보(보호시설 등에 있었던 사람), 의료 정보(medical information), 혈족과 관련한 의료 정보, 제공된 물품(provided item)
6	정보공개절차	정보공개 신청 ⁴⁷⁾ →신청서 접수 및 등록 ⁴⁸⁾ →정보 세션(information session)→기록 제공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추적 서비스 제공
8	불복방법	제공된 자료에 불만족하는 경우 직속 관리자에게 검토 요청 가능, 다시 불복하는 경우 옴부즈맨에 문의 가능, 고등법원에 사법심사 청구 가능 ⁴⁹⁾

43) 입양인 외 ‘잘못된 출생 신고의 대상이거나, 또는 그렇게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 ‘출생한 날로부터 18세가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i) 부록에 명시된 기관에 거주하거나, 또는 (ii) 위탁 양육 또는 위탁 보호 대상자였던 사람’(이 법 제2조)

44) 가까운 친족의 순위는 ‘그의 모친이나 부친’, ‘그의 형제·자매’, ‘그의 삼촌·이모·고모’, ‘그의 4촌 또는 5촌’으로 한다(이 법 제26조 제2항).

45) 만 16~17세의 경우, 오직 아동가족청(Child and Family Agency)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동가족청이 신청 이후의 절차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46) 「2022년 출생정보 및 추적법」 제6조, 제7조, 제8조

47) 만 16~17세의 경우, 오직 아동가족청(Child and Family Agency)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동가족청이 신청 이후의 절차를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48) 앞의 글, 제12면.

49) 앞의 글, 제23면.

(3) 시사점

입양인 뿐 아니라, 입양인의 자녀, 사망한 입양인의 친족 등도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포함된다는 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친생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친생부모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연락을 원치 않는 경우 등에도 출생증명서와 출생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추적 서비스를 통해 친생부모와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모든 시도를 하고 직접 연락하여 자녀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 등이 국내 입양특례법과 차별화된다.

그러나, 아일랜드도 친생부모가 연락과 접촉을 원치 않고 개인정보를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면 입양인에게 친생부모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서 입양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2022년 10월 「2022년 출생정보 및 추적법」 시행 후, 입양인들의 정보 공개 및 추적 서비스 제공 신청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법령과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기한인 3개월(정보 공개), 6개월(추적 서비스) 내에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여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6. 독일

(1) 개관

독일에서는 2002년 3월 1일에 헤이그 협약이 발효되었으며, 이에 따른 헤이그 협약의 이행 법률인 「아동 보호 및 국제 입양 분야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는 법률 Adoption Convention Implementation Statute (AdÜbAG)」⁵⁰⁾을 제정하였다.

(2) 입양 관련 법 및 정보공개 관련 법

(가) 입양관련 법령

입양과 관련된 법으로는 ① 「입양중개법」⁵¹⁾, ②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영향에 관한 법

50) 「아동 보호 및 국제 입양 분야 협력에 관한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이행법(입양협약 이행법)–Gesetz zur Ausführung des Haager Übereinkommens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Adoptionsübereinkommens-Ausführungsgesetz – AdÜbA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d_bag/BJNR295010001.html#BJNR295010001BJNG000100306

51) 「입양 알선 및 지원, 대리모 알선 금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mittlung und Begleitung der Adoption und über das Verbot der Vermittlung von Ersatzmüttern; AdVermiG)」 단, 독일의 헤이그 국가보고서(HCCH Country Profile)에서는 「입양중개법(Adoption Placement Act (AdVermiG))」으로 표시되어 있다. https://www.gesetze-im-internet.de/advermig_1976/

률」⁵²⁾ 및 「입양가정 지원 개선법_입양지원법」⁵³⁾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개인신분법」 및 「민법」에도 입양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나) 정보공개 관련 법령

한편 입양인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은 「입양중개법」과 「개인신분법」에서 구체화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은 2014년 5. 1.부터 「신뢰출산법(임신여성 지원 확대를 위한 법률안)」⁵⁴⁾이 발표되어, 신뢰출산으로 출산한 아동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다.

즉, 「개인신분법」, 「입양중개법」, 및 「임신갈등법(신뢰출산법)」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각기 다르며, 출생기록부는 「개인신분법」에 따른 청구를 하여야 하며, 본인의 입양에 대한 중개기록은 「입양중개법」에 따라 입양기관에 청구를 한다. 한편, 아동이 신뢰출산으로 태어난 경우에는 「임신갈등법」에 따라 혈통증명서 청구를 할 수 있다.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헤이그협약이행법률, 입양중개법, 외국법에따른아동입양의영향에관한법률, 입양가정지원개선법, 개인신분법, 민법, 신뢰출산법
2	청구권자	입양인(16세 이상,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입양부모
3	청구기관	등기소, 입양기관, 연방가족 및 시민사회 업무국
4	공개요건	16세 아동, 입양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단,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열람할 수 없음 ⁵⁵⁾ .
5	정보공개내용	입양 알선 과정의 준비와 실행 및 후속 지원에 대한 정보, 출생과 생활이력에 관한 정보, 출생등록부, 친생부모의 식별/비식별정보
6	정보공개절차	모든 입양인(아동의 법정대리인 및 16세 이상의 아동)은 등기소 및 입양기관에 문의할 경우 본인의 출생정보에 접근 가능.

52) 「외국법에 따른 아동 입양의 영향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Wirkungen der Annahme als Kind nach ausländischem Recht; AdWirk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dwirkg/>

53) 「입양가정 지원 개선법_입양지원법 (Gesetz zur Verbesserung der Hilfen für Familien bei Adoption (Adoptionshilfe-Gesetz)」, https://www.bgb1.de/xaver/bgb1/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mpTo=bgb1121s0226.pdf#_bgbl__%2F%2F*5B%40attr_id%3D%27bgb1121s0226.pdf%27%5D__1728972763915

54) 「임신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Gesetz zur Vermeidung und Bewältigung von Schwangerschaftskonflikten; SchKG)」,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ratungsg/>

55) BGH, 1. 3. 2005, XII ZB 83/04, OLG Celle, 25. 6. 2009 – 16 WF 132/09 판결 참고. ① 아동이나 다른 관련 당사자의 개인적인 정보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② 아동이 생물학적 부모나 입양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충격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 ③ 열람으로 인해 법적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순번	항목	내용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친생부모와 입양인 사이의 정보교환 또는 연락 가능성에 대한 논의 및 정보 제공함
8	불복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가능 ⁵⁶⁾

(3) 시사점

독일은 신뢰출산으로 출생한 입양인을 포함하여 아동이 16세가 되면 자신의 ‘출생등록부’, ‘배치 파일’ 및 ‘혈통증명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권한을 가진다.

56) 행정절차법(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및 행정소송법(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

원칙적 공개이고 예외적으로 비공개 사유를 두어 비공개 하는 것으로, 「임신갈등법」 상 신뢰출산의 경우에 있어서 친생모의 공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에도, 가정법원에서 각 법익에 대한 이익형량을 실시한다. 이때, 친생모가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송에서 진술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친생모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기본적으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입양인의 공개청구가 기각될 경우에도 3년 뒤에 재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동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입양인이 16세가 되기 전까지 아동의 복리차원에서 아동의 친생부모와 입양부모 사이의 정보교환을 하도록 하고 이를 입양기관에서 관리한다는 점, 아동이 성장발달에 따라 이 정보교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은 폐쇄적인 국내법상 입양정보공개 절차 및 입양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의할 만하다.

7. 미국

(1) 개관

2024년 7월을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15개 주에서는 성인 입양인에게 제한없이 자신의 출생증명서 원본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밖에 19개 주에서는 성인 입양인이 출생증명서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의 명령 없이도 출생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다. 나머지 주에서는 법원의 명령 또는 기록에 친생부모의 서면 동의 또는 사망을 통하지 않는 한 입양인이 출생증명서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⁵⁷⁾

미국의 많은 주들은 생모의 신원을 포함한 법원의 정보, 입양장소 또는 입양을 주선했던 사람 등 입양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정보를 알 수 없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⁵⁸⁾

57) 미국 입양인권리법 웹사이트, <https://adopteerightslaw.com/maps/>

58) 鄭光洙, (2004), 미국의 입양법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19, 43-66.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입양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⁵⁹⁾ 각 주 별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사법적 해석이 다르다.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의 주들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입증 책임의 기준을 식별 정보의 공개를 요하는 강력한 필요(a compelling need for the identifying information)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다.⁶⁰⁾

한편 Alabama, Alaska, Kansas, Oregon 주를 포함한 일부 주들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면 제한없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⁶¹⁾

(2) 버몬트 주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버몬트주입양법 ⁶²⁾
2	청구권자	양부모, 입양인의 법적 후견인, 후견인, 18세가 된 입양인, 해방된 입양인, 사망한 입양인의 18세가 된 직계 비속, 18세 미만 직계비속의 부모 또는 후견인, 입양인의 이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⁶³⁾
3	청구기관	입양 청원을 심리한 법원, 입양 배정 기관 ⁶⁴⁾ , 등기소
4	공개요건	친생 부모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식별 정보의 공개는 제한되나 출생증명서는 받을 수 있음. 비 식별정보는 공개.
5	정보공개내용	비식별정보 ⁶⁵⁾⁶⁶⁾ , 식별정보(친생부모가 입양 동의 및 포기 서류를 작성할 때 기밀유지포기서에 서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만 제외, 2023. 7. 1. 이전까지 식별정보 비공개 요청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입양인의 정보공개 요청 단계에서 친생부모의 동의 등 절차를 얻을 필요는 없다고 해석됨 ⁶⁷⁾)
6	가족찾기지원서비스	없음
7	불복방법	사법구제 ⁶⁸⁾

59) Samuels, supra note 1, at 378–82.

60) In re Adoption of S.J.D., 641 N.W.2d 794, 799–800 (Iowa 2002); see also In re Estate of McQuesten, 578 A.2d 335, 339 (N.H. 1990) (“an adoptee bears a heavy burden”); In re Long, 745 A.2d 673, 675 (Pa. Super. Ct. 2000) (good cause must be establish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Bradey v. Children’s Bureau of S.C., 274 S.E.2d 418, 422 (S.C. 1981) (“disclosure follows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61) 鄭光洙. (2004). 미국의 입양법에 관한 고찰. 강원법학, 19, 43–66.

62) VERMONT STATUTES ADOPTION ACT

63) 15A V.S.A. § 6–104

64) 15A V.S.A. § 6–104

65) •알려진 유전질환 또는 질병 •부모의 현재 건강상태 •약물 또는 알코올 사용 여부 •배치 전에 완료된 모든 의학적, 심리적 또는 정신적 평가 결과 •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 •양친의 인종, 민족 및 종교적 배경 •각 부모에 대한 일반적인 신체적 설명 •부모의 다른 자녀의 출생일 및 성별 •동의 또는 포기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 •미성년자의 주 또는 연방 혜택 자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정보(재정, 의료 또는 기타 지원 포함)

66) 15A V.S.A. § 2–105

67) Davenport Amy Marie, “Adoption Law in Vermont,” 이화젠더법학 2.2 (2011): 1–30. A Delicate Balancing of Interests.

68) 15A V.S.A. § 6–104(e)

(3) 뉴욕 주

1) 개관

뉴욕 주는 2020년 1월 15일 시행된 입양인 권리법(New York Clean Bill of Adoptee Rights §3419) 개정을 통해, 8세 이상의 입양인과 그 직계 비속들에게 제한 없이 원본 출생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입양인은 뉴욕주 보건부를 통해 출생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양 정보 등록부, 중개 서비스, DNA 테스트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당시 친생부모가 자녀를 입양 보낼 당시 입양기록 등에 대한 기밀을 기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지만, 결국 뉴욕 주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알 권리를 지닌다는 점에서 수천 명의 입양인에게도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2020년 입양인권리법
2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입양인, 입양인이 사망한 경우 입양인의 직계 비속, 입양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망한 입양인의 직계 비속의 법정대리인 ⁶⁹⁾
3	청구기관	뉴욕 주 Vital Records 또는 뉴욕시 보건 및 정신위생부(NYC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⁷⁰⁾
4	공개요건	성인 입양인이 신청만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친생부모의 식별정보와 본인에 대한 입양 기록을 제공함
5	정보공개내용	출생증명서에는 법원과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아래와 같은 입양인의 개인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⁷¹⁾ 또한 입양인은 출생증명서뿐 아니라, 해당 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입양명령서 등 추가 문서도 받을 수 있다. ⁷²⁾
6	정보공개절차	청구권자는 원본 출생증명서가 접수된 곳에 따라 뉴욕 주 Vital Records 또는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부(NYC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입양 정보 등록부의 운영

69) New York Public Health Law(뉴욕주 공중보건법) 4138–E(2)(a)

70) NCFA(2021), Adoption–Advocate–No. –161, Adult Adoptee Access to Adoption and Birth Records: History, Controversy, Legislation, and Societal Change

71) (1) 입양 부모의 이름 및 신분증
(2) 출생 관련 세부정보
(3) 입양인에 대한 정보

72) New York Public Health Law(뉴욕주 공중보건법) 4138–E(2)

3) 시사점

뉴욕 주는 성인 입양인이 신청만 하면 특별한 제한 없이 친생부모의 식별 정보와 본인에 대한 입양 기록을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입양 정보 등록부 제도를 운영하여 입양인과 생물학적 가족이 각자의 정보를 등록하여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입양인은 자신의 친생부모 또는 형제자매에 대한 비식별 정보 및 의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양측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식별 정보도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4) 워싱턴 주

1) 개관

워싱턴 주에서는 신원 확인 정보 및 입양 법원 기록은 봉인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 명령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기밀 중개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밀 중개 프로그램을 감독하며, 중개인은 친부모, 입양인 및 기타 친척을 검색하고 잠재적으로 찾기 위해 기밀 법원 및 기타 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워싱턴 주 입양법
2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입양인
3	청구기관	워싱턴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4	공개요건	입양 부모, 입양인 또는 친부모의 서면 정보 요청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식별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식별 정보는 친생부모 또는 입양인 수색 절차를 통해 공개될 수도 있다.
5	정보공개내용	출생증명서 제공 - 비공개 서약서 및 연락 선호 양식 제출
6	정보공개절차	청구권자는 워싱턴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원본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됨.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친부모 또는 입양인 수색제도 - 기밀 중개자 선임 ⁷³⁾⁷⁴⁾ 18세가 넘는 입양인은 본인의 신원 정보를 친생부모, 친형제 또는 기타 친족에게 공개하고 싶은지, 그들로부터 연락을 받기를 원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해 보건부에 제출할 수 있음. ⁷⁵⁾
8	불복절차	입양 중개자가 비식별 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입양인은 상급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73) RCW 26.33.343(1)

74) RCW 26.33.343(6)(b)

75) RCW 26.33.347

3) 시사점

워싱턴 주는 앞서 설명한 버몬트 주, 뉴욕 주에 비하여 입양인에 대한 입양 기록 접근이 상당히 제한된 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기밀 중개자 선임을 청원하여 친부모를 수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 찾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청원인에게 사망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는 점, 친생부모가 법에서 정한 특정 기간 내 출생증명서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연락 선호 양식을 제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입양인에게 출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 친부모의 비공개 서약서 또는 연락 선호 양식은 친부모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만료되어 사실상 사망한 친부모의 프라이버시권보다 입양인의 알 권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친생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인에게도 본인의 식별정보를 친생부모 등에게 공개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입양인의 프라이버시권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 등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8. 이탈리아

(1) 개관

(가) 이탈리아 민법(REGIO DECRETO 16 marzo 1942, n. 262) 제291조 내지 제310조에서 성인입양을 포함한 입양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⁷⁶⁾. 1983년 이탈리아는 입양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미성년자 입양을 입양법의 기본 모델로 공인하고 특별법으로 규율하며 민법에서 삭제했다.⁷⁷⁾

76)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regio.decreto:1942-03-16:262!vig=2020-12-04>), 2024. 11. 27. 열람77) FRA,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7/mapping-minimum-age-requirements-concerning-rights-child-eu/accessing-adoption-files-and-information-biological-family>), 2024. 10. 20. 열람

(나) 1993년 5월 29일 헤이그 협약 (Hague Convention of Hague Convention of Child Protectio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의 이행을 위한 이탈리아 중앙 기관은 국제입양위원회(C.A.I.)이며, 이탈리아는 ‘국제입양위원회의 개편에 관한 법률’(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8 giugno 2007, n. 108⁷⁸⁾)(이하 ‘국제입양위원회법’이라 함)로 조직의 구성, 과제 등을 정하고 있다.

(다) 이탈리아 헌법 제30조는 ‘자녀를 지원, 지도 및 교육’하는 부모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2000년 11월 3일 대통령령 제396호(DECRETO DEL PRESIDENTE DELLA REPUBBLICA 3 novembre 2000, n. 396⁷⁹⁾) 제30조 제1항은 여성이 익명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라 출산을 한 여성은 자녀가 태어난 지역의 등록 기관에 아동 등록을 위한 출생신고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개인 정보가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신원은 문서 작성일로부터 100년⁸⁰⁾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다(DECRETO LEGISLATIVO 30 June 2003 no 196 제93조).

(라) 개인정보보호법 DECRETO LEGISLATIVO 30 giugno 2003, n. 196⁸¹⁾은 개인정보보호 및 공개/이용에 관하여 일반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다. LEGGE 7 agosto 1990 , n. 241는 행정 절차 및 행정 정보에 관한 일반적인 접근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2) 조사 내용

순번	항목	내용
1	근거법	미성년자의 가족에 대한 권리에 관한 법률(이탈리아 입양법), 민법, 국제입양위원회법, 헌법, 개인정보보호법
2	청구권자	25세 이상의 입양인, 심각하고 입증된 심리적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양부모가 사망 또는 추적불능상태인 18세 이상의 입양인, 심각하고 입증된 이유가 있는 입양인의 양부모, 미성년자의 건강에 긴급하고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병원 또는 보건시설의 장
3	청구기관	소년법원 ⁸²⁾

78)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DECRETO%20DEL%20PRESIDENTE%20DELLA%20REPUBBLICA%208%20giugno%202007,%20n.%20108:stato:regio:decreto:1942-03-16;262!vig=2020-12-04>), 2024. 11. 27. 열람

79)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presidente.repubblica:decreto:2000-11-03;396>), 2024. 11. 27. 열람

80) 이는 “익명의 법적 제한의 기간을 인간 생명의 기간 이상으로 설정한다”는 의미이다(Corte costituzionale, sentenza n. 278 del 2013 par. 5 del “Considerato in diritto”).

81)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islativo:2003-06-30;196!vig>), 2024. 11. 27. 열람

82) 원문으로 tribunale per i minorenni - ‘미성년자를 위한 법원’이나, ‘소년법원’으로 번역.

순번	항목	내용
4	공개요건	일정 연령(만 25세)에 달한 입양인이 입양정보공개를 소년법원에 신청한 경우, 소년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것이 원칙 ⁸³⁾ . 단, 친생모의 익명출산이 있었던 경우에는 아래 2) 비공개요건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친생모의 익명성 유지에 관한 의사를 비공개 심리 절차로 확인한 후에야 그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할 수 있음
5	정보공개내용	출생증명서, 의료기록, 친생부모 외 친형제자매를 포함한 가까운 가족의 신원 정보(단, 동의 여부 확인 절차 거쳐야 함)
6	정보공개절차	신청인 당사자가 신청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1개월 소요. 수수료 있음.
7	가족찾기지원서비스	해외입양의 경우 일부 공인 입양기관(AABs) ⁸⁴⁾ 이 친생부모와의 접촉 없이 입양인의 출생국 방문을 돕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⁸⁵⁾
8	불복방법	행정소송

(3) 시사점

1) 입양정보 관리

먼저 이탈리아는 입양 과정에서 소년법원이 엄격한 요건에 따라 입양 적격 심사를 진행하며, 입양인의 입양정보접근에 있어서도 사법기관인 소년법원의 승인이 요구된다는 점, 특히 만 25세에 달하지 않은 성년이나 미성년자인 입양인의 양부모 및 보건기관의 장 등에 대한 예외적 정보 공개에 있어서도 소년법원이 직접 그 요건(필요성, 긴급성 등)과 부정적인 영향(입양 정보에 대한 접근이 신청인의 정신적/신체적 균형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고려하여 공개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입양 전후로 사법기관인 소년법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친생부모 동의 확인 절차

(익명출산을 한) 친모에게 익명성 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확인할 때에도 법원의 비공개 심리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단순히 우편송달로 정보 공개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보다 강제성이 있으며 비교적 명확한 의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83) 25세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본질적으로 자율적인 성격을 가지며, 법률에서 생물학적 부모의 의사에 따라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나 지연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법당국의 권익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Sentenza Cassazione Civile n. 22838 del 09/11/2016 판결문 중).

84) 이탈리아 입양법에 따라 입양위원회는 전세계의 공인입양기관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그 목록에 대한 연락처, 주소 등 정보를 게시, 업데이트하고 있다.

85) HCCH(<https://assets.hcch.net/docs/48badc15-3b70-4a4c-a416-c20545398cdc.pdf>), 2024. 8. 7. 열람

3) 입양정보공개의 원칙적 공개

입양정보공개 요건과 관련하여 입양인의 연령에 따른 접근권 제한이 존재하나 이를 만족시키면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 즉, 친부모와 관련하여 입법부는 입양인의 권리가 친부모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사후에 수행될 이해관계의 균형을 배제하는 등 일반적인 사전 평가를 내렸다. 친부모에 대한 입법부의 선택은 입양인의 친양자 지위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에서 친부모의 역할이 갖는 특수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⁸⁶⁾

4) 입양정보의 예외적 비공개에 관하여 예외사유의 엄격한 해석

예외적으로 익명출산한 친생부모의 신원정보는 비공개된다는 이탈리아 입양법 제28조 제7항과 관련하여서도 이탈리아 입양인들의 노력으로 ECHR 및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따라 입양인들의 정보 접근가능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익명출산을 한 친생부모라 할지라도 그 사생활에 관한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입양인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비공개 심리 절차를 거쳐 다시 한번 익명성 유지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는 오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적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익명출산을 선택한 친생부모에게도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자신의 친생자녀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법원은 Corte di Cassazione - sez. I civ. - sent. 15024/2016 판결⁸⁷⁾ 및 Sentenza Cassazione Civile n. 22838 del 09/11/2016 판결⁸⁸⁾을 통해 익명출산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86) Cass. civ. Sez. I, 20 marzo 2018, n. 6963 판결 이유 중 일부 인용

87) Biodiritto, (<https://www.biodiritto.org/Biolaw-pedia/Giurisprudenza/Corte-di-Cassazione-sez.-I-civ.-sent.-15024-2016-parto-anonimo-e-diritto-a-conoscere-le-proprie-origini>), 2024, 11, 27, 열람

88) Laleggepertutti, (<https://sentenze.laleggepertutti.it/sentenza/cassazione-civile-n-22838-del-09-11-2016>), 2024, 11, 27, 열람

5) 정보공개대상의 확대 - 형제자매를 포함한 친족

나아가 이탈리아 대법원은 Cass. civ. Sez. I, 20 marzo 2018, n. 6963 판결⁸⁹⁾을 통해 입양인의 출신(origin)에 관한 정보에 친형제들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여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헌법과 관습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자신의 출신 정보에 접근할 권리에 대한 문언적 언급을 강화하여 특히 추적할 수 없는 경우 친부모뿐만 아니라 규칙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더라도 형제 자매와 같은 가장 가까운 친척도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의 생물학적 계보를 발견할 권리의 본질과 개인 정체성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광범위한 해석을 받아들이게 한다.

9. 소결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 미국 뉴욕주의 경우 입양인이 성인 또는 일정 연령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도록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입양기록 추적(Tracing)이나 수색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스웨덴, 아일랜드, 미국 워싱턴주), 입양정보공개 절차가 진행되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스웨덴, 덴마크, 영국), 가족찾기 지원을 위하여 문서작성, 번역, 전화통화 통역에 대하여서까지 지원하는 경우(노르웨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신원 공개가 가능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미국 워싱턴주)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입양인뿐 아니라, 입양인의 자녀, 사망한 입양인의 친족 등에게까지 정보공개청구권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참고할 하였고 이탈리아의 경우 공개되는 입양정보의 범위에 입양인의 친형제를 포함한 친척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 점이 유의미하였다.

89) Tribunale per i Minorenni di Trieste, (https://tribmin-trieste.giustizia.it/cmsresources/cms/documents/Cassazione_6963-2018.pdf), 2024, 11, 28, 열람

II. 유럽인권재판소 주요 판례

1. Mikulić v. Croatia 판결 (2002년 2월 7일)

항목	내용
사실관계	혼인 외 출생한 신청인이 생물학적 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가 DNA 검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법원이 이를 강제할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소송이 4년 이상 지연됨. 신청인은 ECHR에 제소하며 제6조(공정한 재판), 제8조(사생활 · 가족생활 보호), 제13조(효과적 구제수단) 위반을 주장.
판단	제6조 위반: 장기간 지연과 절차적 무력은 ‘합리적인 기간 내 재판받을 권리’ 침해. 제8조 위반: 생물학적 부모를 알 권리는 사생활의 핵심 요소로, 친자관계 확인은 정체성 보장과 직결됨. 크로아티아는 이를 위한 효과적 절차를 제공하지 않음. 제13조 위반: 재판 지연 방지나 DNA 검사 강제 등 실효적 구제수단 부재.
의의	사생활 존중권에 ‘정체성을 알 권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함. 국가는 친부 확인을 위한 법적 절차를 마련하고 신속성을 보장해야 함. 입양인의 뿌리 찾기 권리 보장 논의에 중요한 판례로, 정보공개 및 가족찾기 절차의 실효성 확보 필요성을 시사.

2. ODIEVRE v. FRANCE 판결 (2003년 2월 13일)

항목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익명출산 제도 하에서 출생 후 4세에 완전입양된 사례. 성인이 되어 비식별정보는 제공받았으나, 형제의 신상 정보 요청은 친생모 신원 노출 우려로 거부됨. 법원에 익명성 철회를 요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신청인은 익명출산을 보장 하는 프랑스 법이 ECHR 제8조(사생활 · 가족생활 보호)와 제14조(차별금지)를 위반한다고 주장.
판단	제8조: 출생정보 접근권은 사생활의 핵심이지만, 이는 친생모의 익명성과 충돌. 프랑스는 출산 시 모 · 아 건강 보호, 불법 낙태 ·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익명출산을 인정하고, 2002년 법 개정으로 CNAOP를 통한 익명성 철회 절차를 마련. ECHR은 국가의 재량범위 내 조치로 판단, 제8조 위반 아님. 제14조: 익명출산으로 친자관계 불성립 및 상속권 제한이 차별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신청인은 양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통해 재산권을 보유.
의의	ECHR은 출생정보 접근권과 친생모 익명성이라는 상충하는 이익 간 균형 필요성을 강조. 프랑스의 입법은 비례성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 신청인은 친생가족에 대한 비식별정보에는 접근 가능했음을 확인. 입양인 권리 논의에서 익명출산 제도가 가지는 한계와 국가의 조정 역할을 보여줌.

3. Jaggi v. Switzerland 판결 (2006년 7월 13일)

항목	내용
사실관계	신청인(1939년생)은 친모로부터 A.H.가 친부라는 말을 들었으나, 1948년 스위스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친자확인 청구를 기각함. A.H. 사망(1976) 후 혈액형 분석에서 친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나, 1997년 신청인의 DNA 검사 요청은 유가족 거부로 무산됨. 1999년 제네바주 법원과 연방법원은 ① 1948년 판결의 확정, ② 사망자 유해 침해 우려, ③ 유가족의 사생활 보호 필요, ④ 신청인의 신체 · 정신적 피해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 이에 신청인은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제8조(사생활 보호) · 제13조(효과적 구제수단 보장) 위반을 주장하며 제소.
판단	협약 제8조 위반 인정. 국가는 사생활 · 가족생활 존중을 위한 소극적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 의무도 부담. 친부 확인에 대한 관심은 나이와 무관하며, 장기간의 확인 노력 자체가 정신적 · 심리적 고통임을 인정. 유가족의 반대에 종교 · 철학적 근거가 없었고, 묘지 유지도 신청인의 노력 덕분임. 따라서 사망자의 존엄성과 유족 감정보다 신청인의 사생활권이 더 중대하다고 판단.
의의	친부 확인 시도가 장기간 지속되었음을 정신적 · 심리적 피해로 인정. 사망자와 유족의 이해보다 개인의 정체성 확인권을 우선시한 판례.

4. Godelli v. Italy 판결 (2012년 9월 25일)

항목	내용
사실관계	출생 직후 버려져 입양된 신청인은 성인이 된 후 친모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이탈리아 법은 익명 출산을 선택한 산모의 신원 공개와 비식별정보 제공 모두를 전면 금지. 신청인은 이로 인해 자신의 기원을 알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제8조 위반을 주장. 국제인권규범(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헤이그 협약 제30조, 유럽평의회 권고 등)도 인용하며, 이탈리아 제도가 아동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산모의 권리만 절대적으로 보호한다고 비판.
판단	제8조 위반 인정. 국가는 사생활 존중을 위해 상충하는 권익 간에 공정한 균형을 이뤄야 하나, 이탈리아 제도는 조정 장치 없이 산모의 권리만 절대적으로 보장. 프랑스의 경우(오디에르 사건 이후) 기밀 유지 포기 절차와 비식별정보 제공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탈리아는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음. 신청인은 나이가 많아도 친부모 확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장기간의 확인 시도 자체가 정신적 · 심리적 고통임을 인정. 결과적으로 이탈리아가 허용 재량을 넘어 비례성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
의의	익명 출산의 경우에도 입양인의 신원 확인권을 인정한 판결. 이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익명성 절대보장을 위헌으로 보고, 입양인의 요청 시 산모에게 익명성 철회 여부를 질의하도록 함(2013년 결정). 대법원도 친모 사망 시 정보공개를 인정하는 판례(2016년) 제시. 입법부는 절차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 시도.

5. Cherrier v France 판결 (2024년 1월 30일)

항목	내용
사실관계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신청인은 친부모의 인적사항을 알고자 출생정보접근을 위한 국가자문위원회(CNAOP)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친생모가 비밀 유지 의사를 밝혀 거부됨. 행정법원 · 항소법원 · 참사원 모두 현행법(가족 및 사회활동법 L.147-6조)에 따라 기각. 프랑스 제도는 친생모의 동의 시 비밀 해제가 가능하지만, 동의 없이는 불가. 신청인은 유럽인 권재판소에 제소, 협약 제8조 위반 주장.
판단	본 사안은 친생모의 익명 유지와 자녀의 출생정보 접근권 간의 이익형량 문제. 프랑스 제도는 비식별정보에 대한 접근은 보장하고, 인적정보 공개는 친생모 동의 시만 허용. 익명출산 제도는 여성의 건강 · 생명 보호와 직결될 수 있으며, 사생활 · 가정생활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 존재. 입법자가 생식세포기증자의 익명성은 해제하면서도 익명출산은 유지한 점은 여성의 신체적 · 심리적 완전성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임을 반영. 신청인의 권리 제한은 법에 근거하고, 비식별정보 접근 보장 등 절충 장치가 존재하여 균형 유지. 결론: 국가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고, 제8조 위반 아님.
반대의견	신청인은 56세에 자신의 입양 사실을 알았고, 출신을 알기 위해 “일생일대의 싸움”을 시작. 현재 제도는 최종결정권을 어머니에게만 부여하고, 시간이 지나도 그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호. 알 권리와 익명성의 우선순위는 시간 경과 · 당사자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특히 어머니 사망 후까지 익명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움. 협약 제8조는 성인이 된 아동이 자신의 출신을 알 권리를 포함하며, 지나친 제한은 위반 가능성.
의의	유럽인권재판소는 친생모 익명성 보호를 위한 자녀 알 권리 제한이 제8조 위반이 아님을 재확인. 다만 판결문에서 익명성 유지로 인한 자녀 측 고통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을 언급. Odièvre 판결 20년 후에도 프랑스 제도의 기본 구조가 제8조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은 아쉬움. 반대 의견은 향후 판례 변화 가능성을 시사.

6. 소결

유럽인권재판소는 주요 판결을 통하여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 및 가족 관계를 알 권리가 사생활 보호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① 입양인의 출생정보를 절대적으로 비공개로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알 권리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② 국가는 입양인의 출생정보 접근을 위한 효과적인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③ 입양인과 생물학적 가족 간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절차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유럽인권재판소는 입양인의 뿌리를 알 권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 결론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입양인이 성인 또는 일정 연령이 되면 친생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자신의 입양 관련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입양기록 추적(Tracing)이나 수색 제도를 두고 있으며(스웨덴, 아일랜드, 미국 워싱턴주), 입양정보공개 절차가 진행되면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스웨덴, 덴마크, 영국)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찾기 지원을 위하여 문서작성, 번역, 전화통화 통역에 대하여서까지 지원하는 경우(노르웨이),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신원 공개가 가능한 절차를 두고 있는 경우(미국 워싱턴주)도 우리에게 없는 제도로 참고할만하다.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입양인뿐 아니라, 입양인의 자녀, 사망한 입양인의 친족 등에게까지 정보공개청구권자를 확대해 보장하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공개되는 입양정보의 범위에 입양인의 친형제를 포함한 친척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입양인이 자신의 출생 및 가족 관계를 알 권리가 사생활 보호의 핵심 요소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출생의 기원을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권’과의 직접적 관계를 확인하며,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에 대하여, 단순히 신체적 보호를 의미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 가족관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하고, 개인이 자신의 신원을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를 보호받고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입양특례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입양인들의 뿌리에 대한 권리가 실체적, 절차적으로 심각하게 제약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해외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에 관련된 조항이 입양특례법상 단 한 개 조항(제36조)에 불과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비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입양특례법 제36조, 특히 제2항 단서 조항의 실질적 적용에 있어서 입양인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중요한 가치와 입양인의 ‘부모를 알 권리’라는 기본권이 조화롭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해당 법률이 위헌적인 법률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검토가 시급히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

보았던 해외입법례와 유럽인권재판소 결정례 등을 참고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입양인의 뿌리에 대한 권리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입양인들이 박탈당하였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Right of Adoptees to Know Their Origins:
Comparative Laws and Case Law

Lim Yeaji, Attorney(Law Firm Deoksu)

Right of Adoptees to Know Their Origins: Comparative Laws and Case Law¹⁾

Lim Yeaji,
Attorney(Law Firm Deoksu)

I. Comparative Legal Study — Status by Country

1. Sweden

(1) Overview

Sweden ratified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on 1993. 5. 29 and integrated it into national law, alongside related legislative updates.²⁾³⁾

(2) Findings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Social Services Act (2001:453); Children and Parents Code (1949:381); Inter-country Adoption Act (2018:1289); Inter-country Adoption Ordinance (2018:1296); Act on Sweden's Accession to the 1993 Hague Convention (1997:19); Inter-country Adoption Mediation Act (1997:192).
2	Eligible Applicants	Adoptee, adoptive parents, birth family.
3	Competent Bodies	MFoF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courts; private entities; Swedish Migration Agency; Swedish National Archives; Swedish Tax Agency ⁴⁾
4	Disclosure Conditions	Adult adoptees (18+) — no consent from birth parents required.

1) This presentation summarizes portions of the project “Comparative Legal Study on Adoptees’ Right to Know Their Origins,” conducted under the On-Village Law Project (co-researchers: Kim Seonhyu, Kim Yeongmi, So Rami, Won Uirim, Yun Ina, Im Yeji, Jeon Mingyeong, Hwang Junhyeop), 2025.

2) Kim Hyojin; Lee Jaeyeon,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Contents Relating to Adoption: Focusing on Korea, Japan,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No. 34 (2011), p. 138.

3) Excerpts from Swedish legal provisions concerning inter-country adoptions,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July 2016, <https://www.mfof.se/download/18.7a15f94516e8e25421b349ea/1575532272623/swedish-laws-concerning-adoption-july2016.pdf>, accessed 2024. 11. 29.

4) Swedish Family Law and Parental Support Authority (Myndigheten för familjerätt och föräldraskapsstöd, MFoF), <https://www.mfof.se/internationella-adoptioner/stod-och-vagledning/att-soka-sitt-ursprung/vagledning-vid-ursprungssokning/inledning-och-information/lagar-och-bindande-konventioner-for-sverige.html>, accessed 2024. 10. 20.

No.	Item	Details
5	Scope of Disclosure	Public: name, personal identity number, address, marital status, nationality. Sensitive: birth-related information, gender transition and disability data, adoption details ⁵⁾
6	Procedure	Upon application by an adoptee aged 18+, MFoF provides information including birth parents’ age, health, social circumstances, and reasons for adoption.
7	Support Services	Tracing of birthplace and adoption records;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upport.
8	Remedies	As adults have a statutory right of access without parental consent, no meaningful avenue for objection exists.

(3) Implications

MFoF broadly discloses adoption-related information to adult adoptees without parental consent and supports tracing. Where a birth family refuses contact, social services continue outreach and offer counseling.

2. Denmark

(1) Overview

Denmark acceded to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1997. 11. 1 and incorporated it into domestic law. It also signed the revised 2008 European Convention on the Adoption of Children⁶⁾. In January 2024,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reported systemic illegality in adoptions from Korea to Denmark during the 1970s–80s; Denmark’s sole inter-country adoption agency (DIA) announced suspension of services on 2024. 1. 16⁷⁾.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Hague Convention implementing acts; Adoption Act ⁸⁾
2	Eligible Applicants	Adult adoptees (18+); adoptive parents for minors ⁹⁾
3	Competent Bodies	Appeals Board; Family Court; Adoption Review Board; Adoption Committee; Danish International Adoption (DIA).
4	Disclosure Conditions	Adult adoptees (18+) — no birth-parent consent required.
5	Scope of Disclosure	All information concerning the adoptee’s background, including identifying and non-identifying details of the birth family ¹⁰⁾

5) Ibid.

6) Danish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Declaration (as amende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f 27 November 2008 on the Adoption of Children,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r/2012/18>, accessed 2024. 12. 9.

7) “Denmark Announces a ‘Halt to Adoptions’... Adoptee Groups: ‘A Good Thing,’” Newstapa, https://newstapa.org/article/LQ2Fr?utm_source=chatgpt.com, accessed 2024. 12. 9.

8) Danish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doption Act,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2019/775>, accessed 2024. 12. 9.

9) Danish Appeals Agency (Ankestyrelsen), <https://ast.dk/born-familie/hvad-handler-din-klage-om/adoption/fremmedadoption/adoptivbarnets-oprindelige-foraelde>, accessed 2024. 12. 9.

10) Questionnaire on the Practical Operation of the 1993 Adoption Convention, HCCH, <https://assets.hcch.net/docs/dc7f8077-b675-4974-8241-49d331859b12.pdf>, p. 19, 2020; accessed 2024. 12. 9.

No.	Item	Details
6	Procedure	File information requests with the Appeals Board; request population register data from the National Archives and registration office.
7	Support Services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support (no governmental tracing service) ¹¹⁾
8	Remedies	As access is guaranteed to adult adoptees, objections are not contemplated.

(2) Findings
; Adoption Guidelines¹²⁾; European Convention on Adoption of Children¹³⁾....

(3) Implications
Single state-certified intermediary; no parental-consent requirement; disclosure includes adoptee’s status and birth parents’ names, dates of birth, and addresses; professional counseling to mitigate psychological impact upon re-accessing records.

3. Norway

(1) Overview
Norway’s Adoption Act (1986. 2. 28) regulates confidential adoptions and information duties, and intercountry adoption. Adoptions require governmental approval and must serve the child’s welfare. Norway does not permit overseas adoption of domestic children; it recognizes only foreign children adopted into Norway¹⁴⁾. The competent authority is the Directorate for Children, Youth and Family Affairs (Bufdir).

(2) Findings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Hague Convention implementing laws ¹⁵⁾
2	Eligible Applicants	Adoptees; birth parents.
3	Competent Bodies	Bufdir ¹⁶⁾
4	Disclosure Conditions	Adoptees (18+ via Bufdir; minors via National Archives). No parental consent required.
5	Scope of Disclosure	Unrestricted.

11) Ibid.
12) Danish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Adoption Guidelines, <https://www.retsinformation.dk/eli/retsinfo/2023/10084>, accessed 2024. 12. 9.
13) Danish National Legal Information Center, Declaration (as amended) to the European Convention of 27 November 2008 on the Adoption of Children, <https://www.retsinformation.dk/eli/ltr/2012/18>, accessed 2024. 12. 9.
14) Kim Hyojin; Lee Jaeyeon,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Contents Relating to Adoption: Focusing on Korea, Japan,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No. 34 (2011), p. 138.
15) Mandate for the Investigation of Historical Foreign Adoptions,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8f5e8adf32dd480aab97fc5b63e9f4b8/mandate-for-the-investigation-of-historical-foreign-adoptions.pdf?utm_source=chatgpt.com, accessed 2024. 12. 9.
16) Norwegian Directorate for Children, Youth and Family Affairs (Bufdir), <https://www.bufdir.no/om/>, accessed 2024. 10. 20.

No.	Item	Details
6	Procedure	Submit inquiry to Bufdir titled “Access to foreign adoption documents” to obtain case information ¹⁷⁾
7	Support Services	Tracing via “Search for biological origin”; translation costs and phone interpreting funded for first call ¹⁸⁾
8	Remedies	Report concerns to Bufdir; request investigation by the Examination Committee for Foreign Adoptions (est. 2023) ¹⁹⁾

; Adoption Act²⁰⁾; National Archives (minors may apply here)²¹⁾.²²⁾; counseling available²³⁾..

(3) Implications
At age 18, adoptees are notified in writing of their right to access adoption records. The newly established committee investigates suspected illegality in intercountry adoption. Practical support covers draft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4. United Kingdom

(1) Overview
In 1999, the United Kingdom amended certain provisions of its adoption laws to enable ratification of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ereinafter, the “Hague Convention”). Subsequently, in 2003, the UK ratified the Hague Convention and made additional amendments to both intercountry and domestic adoption laws accordingly.

17) Bufdir, “Access to Adoption Procedures,” <https://www.bufdir.no/adopsjon/opprinnelse-og-innsyn/>, accessed 2024. 12. 9.
18) Mandate for the Investigation of Historical Foreign Adoptions, https://www.regjeringen.no/contentassets/8f5e8adf32dd480aab97fc5b63e9f4b8/mandate-for-the-investigation-of-historical-foreign-adoptions.pdf?utm_source=chatgpt.com, accessed 2024. 12. 9.
19) Norwegian Directorate for Children, Youth and Family Affairs (Bufdir), Guidance When There Are Concerns About an Adoption, <https://www.bufdir.no/adopsjon/bekymret/>, accessed 2024. 12. 9.
20) Kim Hyojin; Lee Jaeyeon, “A Comparative Study on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and Contents Relating to Adoption: Focusing on Korea, Japan,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Korean Journal of Child Welfare, No. 34 (2011), p. 138.
21) National Archives of Norway, “Biological Origin,” posted 2017. 5. 28., last updated 2024. 6. 26., https://www.arkiverket.no/en/personal-documentation/biological-origin?utm_source=chatgpt.com, accessed 2024. 12. 9.
22) Bufdir, “Access to Adoption Procedures,” <https://www.bufdir.no/adopsjon/opprinnelse-og-innsyn/>, accessed 2024. 12. 9.
23) Ibid.

The current law governing adoption procedures in the UK is the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hereinafter, the “2002 Act”), which came into effect on December 30, 2005. The Act stipulates that the welfare of the child must be the paramount consideration in adoption proceedings, and—consistent with the Children Act 1989—explicitly sets out welfare considerations to ensure that UK adoption procedures comply with Article 2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²⁴⁾.

(2) Findings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2	Eligible Applicants	Adoptees aged 18+; persons other than the adoptee (subject to scrutiny).
3	Competent Bodies	Adoption agencies ²⁵⁾
4	Disclosure Conditions	Requests involving adults are handled under statutory rules rather than agency discretion ²⁶⁾
5	Scope of Disclosure	Identifying data concerning the adoptee or others, including entries from the Adoption Register and certified copies of birth records, disclosed only per statutory procedure ²⁷⁾
6	Procedure	Written notice of decisions with reasons and appeal guidance ²⁸⁾
7	Support Services	Counseling may be offered ²⁹⁾
8	Remedies	Within 40 days from notice, appeal to the Secretary of State and seek review by an independent panel ³⁰⁾

..³¹⁾; exceptions apply where adoptive or birth parents consent as provided in regulations³²⁾..; where requested by the information recipient, must be provided³³⁾. Free to adoptees³⁴⁾³⁵⁾.

(3) Implications

Upon adulthood, adoptees enjoy a robust right to access their adoption information without extra conditions; agencies must petition the High Court or Family Court to restrict disclosure. Applicants are not limited to adoptees alone. Counseling is embedded to address psychological impacts of reunion and disclosure.

24) The United Kingdom acceded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1991. 12. 16.

25)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 57–58

26)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 61

27)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 57(3)

28)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reg. 15(2)

29)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 63.

30)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reg. 15(2)

31)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 57(1)

32) Adoption and Children Act 2002, § 57(5)

33)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reg. 17(1)

34)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reg. 22(2)

35) The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Regulations 2005, reg. 15(3)

5. Ireland

(1) Overview

Ireland ratified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Hague Convention”) on 28 July 2010. Pursuant to section 9 of the Adoption Act 2010 (the “2010 Act”), the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and took effect on 1 November 2010.

Established in 2015, the Mother and Baby Homes Commission of Investigation announced findings that thousands of infants had died between the 1920s and the 1990s in Irish institutions for unmarried mothers³⁶⁾, most of which were run by the Catholic Church. In its report, the Commission recommended that “adopted persons should have a right to have access to their birth certificates and other information relating to their birth. The right to identity is an important human right and should only be denied i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Medical information compiled at the time of adoption as well as adoption records should also be made available.” Influenced by these recommendations, the Oireachtas enacted the Birth Information and Tracing Act 2022, thereby guaranteeing that—regardless of parental wishes—all persons aged 16 and over are entitled to access birth, early-life, and medical information.

(2) Findings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Adoption Act 2010; Birth Information and Tracing Act 2022.
2	Eligible Applicants	Persons aged 16+ ³⁷⁾
3	Competent Bodies	General Register Office (GRO); Adoption Authority of Ireland (AAI); Tusla ³⁸⁾
4	Disclosure Conditions	Where a birth parent requests no contact and data protection, access to identifying birth–parent information is restricted.
5	Scope of Disclosure	Certified copy of birth certificate ³⁹⁾
6	Procedure	Apply ⁴⁰⁾
7	Support Services	Tracing service provided.
8	Remedies	Escalate dissatisfaction to a line manager, then to the Ombudsman; seek judicial review in the High Court ⁴¹⁾

36) Department of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Final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vestigation into Mother and Baby Homes,” 12 January 2021 (last updated 22 November 2021).

37) In addition to adoptees: “persons who were the subject of, or for whom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suspect the existence of, an incorrect birth registration”; and persons who, from birth until the day they turned 18, (i) resided in an institution listed in the Schedule, or (ii) were in foster care or subject to foster protection (Act § 2).

38) For persons aged 16–17, applications may only be made through the Child and Family Agency,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subsequent procedures.

39) Birth Information and Tracing Act 2022, §§ 6–8.

40) For persons aged 16–17, applications may only be made through the Child and Family Agency,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subsequent procedures.

41) Supra, p. 23.

; where relevant persons (birth/adoptive parents) are deceased and the requester is 18+; nearest relatives⁴²⁾ (18+) of persons who died in listed institutions.; birth information; early-life information; care-related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on; relatives’ medical information; provided items. → registration⁴³⁾ → information session → release of records..

(3) Implications

It is noteworthy that not only adoptees but also their children and relatives of deceased adoptees are recognized as having the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Even in cases where the biological parents are deceased, or where they have expressed a desire not to be contacted on the grounds of privacy, copies of birth certificates and birth-related information are nevertheless provided. Furthermore, through tracing services, all reasonable efforts are made to establish contact with the biological parents, including direct outreach to confirm whether they are willing to meet their child. These aspects distinguish Ireland’s system from Korea’s Special Adoption Act.

However, Ireland has also been criticized by adoptees, since if biological parents request that their personal information remain protected and decline contact, adoptees are denied access to that information. In addition,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Birth Information and Tracing Act 2022 in October 2022, there has been a flood of application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tracing services. As a result, the legal deadlines—three months for information disclosure and six months for tracing services—have frequently not been met, cre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 improvements.

6. Germany

(1) Overview

Germany brought the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into force on 1 March 2002, and enacted the Act Implementing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dÜbAG)⁴⁴⁾.

2) Adoption-Related and Disclosure-Related Legislation

(a) Adoption-specific statutes

The principal statutes governing adoption are: (i) the Adoption Placement Act⁴⁵⁾ (AdVermiG); (ii) the Act on the Effects of the Adoption of a Child under Foreign Law⁴⁶⁾ (AdWirkG); and the Act to Improve Assistance for Families in Adoption⁴⁷⁾ (Adoptionshilfe-Gesetz). In addition, the Personal Status Act and the Civil Code also contain provisions relevant to adoption.

(b) Legislation on disclosure

Rules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to adoptees are set out primarily in the Adoption Placement Act and the Personal Status Act. In this connection, as of 2014. 5. 1., Germany introduced the regime of confidential birth through the Act on the Avoidance and Management of Pregnancy Conflicts⁴⁸⁾ (SchKG), which also regulates requests by persons born under confidential birth to access information.

In short, the categories of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e Personal Status Act, the Adoption Placement Act, and the SchKG (confidential birth) differ. Access to entries in the register of births must be requested under the Personal Status Act; access to the mediation file concerning one’s own adoption must be requested from the adoption agency under the Adoption Placement Act. Where a child was born under confidential birth, he or she may apply for a certificate of parentage under the SchKG.

42) The order of “closest relatives” is: “his/her mother or father,” “his/her siblings,” “his/her uncles/aunts,” “his/her first or second cousins” (Act § 26(2)).

43) Supra, p. 12.

44) Act Implementing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dÜbAG) — https://www.gesetze-im-internet.de/ad_bag/BJNR295010001.html#BJNR295010001BJNG000100306

45) Adoption Placement Act (AdVermiG) — (The HCCH Country Profile refers to “Adoption Placement Act (AdVermiG).”) — https://www.gesetze-im-internet.de/advermig_1976/

46) Act on the Effects of the Adoption of a Child under Foreign Law (AdWirkG) <https://www.gesetze-im-internet.de/adwirkg/>

47) Act to Improve Assistance for Families in Adoption (Adoptionshilfe-Gesetz)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jumpTo=bg-bl121s0226.pdf#__bgbl__/%5B@attr_id='bgbl121s0226.pdf'%5D__1728972763915

48) Act on the Avoidance and Management of Pregnancy Conflicts (SchKG) —<https://www.gesetze-im-internet.de/beratungsg/>

(2) Findings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Hague Convention implementing statute; Adoption Placement Act; Act on Effects of Adoption under Foreign Law; Act to Improve Assistance for Adoptive Families; Personal Status Act; Civil Code; Pregnancy Conflict Act (confidential birth).
2	Eligible Applicants	Adoptees aged 16+ (or legal representatives for minors); adoptive parents.
3	Competent Bodies	Register offices; adoption agencies; Federal Office of Family Affairs and Civil Society Functions.
4	Disclosure Conditions	Accessible at 16; denied where it would seriously impair a party’s overriding interests ⁴⁹⁾
5	Scope of Disclosure	Preparation, implementation, and follow-up of adoption placement; birth and life history; birth register; identifying/non-identifying data of birth parents.
6	Procedure	All adoptees (or legal representatives) may apply to register offices and adoption agencies for their birth information.
7	Support Services	Facilitation of information exchange and potential contact between birth parents and adoptees.
8	Remedies	Administrative appeal and litigation available ⁵⁰⁾

(3) Implications

In Germany, including in cases of confidential births, adoptees gain the right at age 16 to inspect and obtain copies of their birth register, placement files, and lineage certificates. Disclosure is the rule, with only limited exceptions allowing non-disclosure. Even in cases of confidential birth under the Pregnancy Conflict Act, if concerns about revealing the biological mother’s identity arise, the Family Court conducts a balancing of interests between the rights involved. If the biological mother fails to testify within the period set by the court, it is presumed—under Article 1(2)—that the mother’s interests no longer warrant protection. This confirms that Germany essentially upholds a stance prioritizing the child’s right to know. Furthermore, even if an adoptee’s disclosure request is denied, the adoptee may reapply after three years, demonstrating that the legal framework strengthens support for the child’s right to know.

In addition, before adoptees turn 16, Germany provides for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adoptive parents in the interest of the child’s welfare, with adoption agencies managing the process. As the child grows, they may gradually participate in this exchange. This approach reflects a fundamentally different philosophy from Korea’s closed adopt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restricts access and lacks such child-centered information sharing.

49) See BGH, 1. 3. 2005, XII ZB 83/04; OLG Celle, 25. 6. 2009 – 16 WF 132/09. Grounds include:
(i) where there is a risk of serious infringement of the personal information or privacy of the child or other relevant parties;
(ii) where the child may experience shock or emotional difficulty regarding his or her relationships with biological or adoptive parents;
(iii) where disclosure may give rise to legal issues or disputes.

50)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Verwaltungsverfahrensgesetz, VwVfG) and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

7. United States

(1) Overview

As of 2024. 7., 15 U.S. states grant adult adoptees the right to obtain their original birth certificates (OBCs) without restriction. In 19 other states, access by adult adoptees is restricted, but if specified conditions are met, they may obtain a birth certificate without a court order. In the remaining states, adoptee access is limited absent a court order or unless the record reflects the birth parents’ written consent or death⁵¹⁾.

In many states, statutes prohibit disclosure of identifying information—including the birth mother’s identity, court information, the place of adoption, or the persons who arranged the adoption⁵²⁾. Access to such adoption information is permitted only upon a judicial finding of good cause⁵³⁾, and the meaning of “good cause” varies by state. A common feature, however, is that most states set the evidentiary bar at a “compelling need for the identifying information⁵⁴⁾.”

By contrast, some states—including Alabama, Alaska, Kansas, and Oregon—allow adult adoptees unrestricted access to such information once they reach majority⁵⁵⁾.

51) Adoptee Rights Law website (USA), <https://adopteerightslaw.com/maps/>

52) Jeong, Gwangsū. (2004). “A Study on U.S. Adoption Law.” Kangwon Law Review, 19, 43–66.

53) Samuels, *supra* note 1, at 378–82.

54) In re Adoption of S.J.D., 641 N.W.2d 794, 799–800 (Iowa 2002); see also In re Estate of McQuesten, 578 A.2d 335, 339 (N.H. 1990) (“an adoptee bears a heavy burden”); In re Long, 745 A.2d 673, 675 (Pa. Super. Ct. 2000) (good cause must be established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Bradey v. Children’s Bureau of S.C.*, 274 S.E.2d 418, 422 (S.C. 1981) (“disclosure follows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55) Jeong, Gwangsū. (2004). “A Study on U.S. Adoption Law.” Kangwon Law Review, 19, 43–66.

(2) Vermont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Vermont Adoption Act ⁵⁶⁾
2	Eligible Applicants	Adoptive parents; adoptee’s legal guardian; guardians; adoptees aged 18+; emancipated adoptees; linear descendants (18+) of deceased adoptees; parents/guardians of linear descendants under 18; adoptee’s former parents, grandparents, and siblings ⁵⁷⁾
3	Competent Bodies	Court hearing the adoption petition; placement agency ⁵⁸⁾
4	Disclosure Conditions	If a birth parent requested non–disclosure, identifying information is restricted, but the original birth certificate is available. Non–identifying information is disclosed.
5	Scope of Disclosure	Non–identifying information ⁵⁹⁾
6	Support Services	—
7	Remedies	Judicial relief ⁶⁰⁾

...; vital records office.⁶¹⁾ and identifying information (except where the birth parent did not execute a confidentiality waiver at consent/termination; for requests after 2023. 7. 1., no further consent is required⁶²⁾)..

(3) New York

1) Overview

New York,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New York Clean Bill of Adoptee Rights §3419 that took effect on 2020. 1. 15., guarantees adoptees aged 8 or older and their lineal descendants unrestricted access to the original birth certificate (OBC). Adoptees may apply for the birth certificate through the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and may also use the Adoption Information Registry, intermediary services, and DNA testing to search for their origins. During the bill’s passage, a point of contention was whether birth parents could have expected confidentiality in adoption records at the time of placement; ultimately, New York affirmed that all persons have a right to fully know their identity, extending the same right to thousands of adoptees.

56) Vermont Statutes — Adoption Act.

57) 15A V.S.A. § 6-104.

58) 15A V.S.A. § 6-104.

59) Information items include:

• known hereditary conditions or diseases; • the parents’ current health status; • whether there is use of drugs or alcohol; • results of all medical, psychological, or psychiatric evaluations completed before placement; • if a parent has died, the cause of death; • race, ethnicity, and religious background of each parent; • general physical description of each parent; • dates of birth and sex of the parents’ other children; • facts and circumstances relating to consent or relinquishment; and • any other information necessary to determine the minor’s eligibility for state or federal benefits (including financial, medical, or other support).

60) 15A V.S.A. § 6-104(e).

61) 15A V.S.A. § 2-105.

62) Davenport, Amy Marie. “Adoption Law in Vermont.” Ewha Law Journal of Gender Studies 2.2 (2011): 1–30. A Delicate Balancing of Interests.

2) Findings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New York Clean Bill of Adoptee Rights (2020).
2	Eligible Applicants	Adoptees aged 18+; lineal descendants of a deceased adoptee; the adoptee’s legal representative or that of a deceased adoptee’s descendant ⁶³⁾
3	Competent Bodies	New York State Vital Records; NYC Department of Health & Mental Hygiene ⁶⁴⁾
4	Disclosure Conditions	Adult adoptees may obtain identifying information and adoption records without special restrictions.
5	Scope of Disclosure	The birth certificate contains the adoptee’s personal information—of the kinds listed below—as held by the court and the adoption agency ⁶⁵⁾
6	Procedure	Submit request to the office where the original record is held.
7	Support Services	Operation of an adoption information registry.

... In addition to the birth certificate, the adoptee may obtain supplementary documents, such as the adoption order filed together with that certificate⁶⁶⁾.

3) Implications

The significance of New York State’s system lies in the fact that adult adoptees, upon request, are granted access to identifying information about their biological parents and to their own adoption records without restriction. In addition, New York operates an Adoption Information Registry, which allows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relatives to register their information so they can be connected with one another. Through this system, adoptees may request non-identifying information and medical records about their biological parents or siblings, and—where both parties consent—identifying information may also be disclosed.

63) New York Public Health Law § 4138-E(2)(a)

64) NCEA (2021), Adoption Advocate No. 161, Adult Adoptee Access to Adoption and Birth Records: History, Controversy, Legislation, and Societal Change.

65)1) Names and identification of the adoptive parents

(2) Birth-related details

(3) Information about the adoptee

66) New York Public Health Law § 4138-E(2)

(4) Washington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Washington Adoption Act.
2	Eligible Applicants	Adoptees aged 18+.
3	Competent Bodies	Washington State Department of Health.
4	Disclosure Conditions	Non-identifying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on written request by adoptive parents, adoptees, or birth parents. Identifying information may be disclosed via search procedures.
5	Scope of Disclosure	Original birth certificate, subject to contact preference form and non-disclosure affidavit by birth parents.
6	Procedure	Apply to the Department of Health for the original birth certificate.
7	Support Services	Court-appointed confidential intermediaries may conduct searches ⁶⁷⁾
8	Remedies	If an intermediary refuses disclosure of non-identifying information, petition the superior court.

⁶⁸⁾; contact preferences may be filed by adoptees as well as birth relatives.⁶⁹⁾

(3) Implications

Compared with Vermont and New York, Washington State imposes considerably greater restrictions on adoptees’ access to adoption records. Nevertheless, its system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llows an adoptee to petition the court for the appointment of a confidential intermediary to search for biological parents. If the sought person is deceased, the court may order disclosure of the deceased person’s identity to the petitioner. Furthermore, unless a biological parent has submitted a contact preference form within the legally prescribed period stating that they do not wish their original birth certificate to be disclosed, the state is, in principle, required to provide the adoptee with the birth certificate. Importantly, a parent’s confidentiality affidavit or contact preference form expires upon the parent’s death, meaning that the adoptee’s right to know is prioritized over the privacy rights of deceased biological parents.

Another noteworthy aspect is that not only biological parents but also adoptees themselves are invited to submit statements on whether they wish to have their own identifying information disclosed to their biological relatives. This demonstrates that Washington State also gives weight to the privacy rights of adoptees while ensuring their right to know.

8. Italy

(1) Overview

(a) Italian Civil Code (Regio Decreto 16 March 1942, No. 262), Articles 291–310, regulates the general requirements and effects of adoption, including adult adoption.⁷⁰⁾

⁶⁷⁾ RCW 26.33.343(1)

⁶⁸⁾ RCW 26.33.343(6)(b)

⁶⁹⁾ RCW 26.33.347

⁷⁰⁾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regio.decreto:1942-03-16;262!vig=2020-12-04>, accessed 2024. 11. 27.

In 1983, Italy fundamentally reformed its adoption law by recognizing minor adoption as the standard model, regulating it under special legislation, and removing it from the Civil Code.⁷¹⁾

(b) The central authority designated for implement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is the Commission for Intercountry Adoption (C.A.I.). The structure and functions of this body are established under the Law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Commission for Intercountry Adoption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8 June 2007, No. 108⁷²⁾).

(c) Article 30 of the Italian Constitution stipulates parents’ duty to support, guide, and educate their children. However, an exception is provided under Presidential Decree of Nov. 3, 2000, No. 396⁷³⁾, Article 30(1), which permits a woman to give birth anonymously (Normattiva, link, accessed Nov. 27, 2024).

Under this decree, a woman giving birth may request that her personal details be excluded from the birth registration at the local registry office. The mother’s identity remains sealed for 100 years from the date of the document’s creation—effectively “setting the period of legal anonymity beyond the span of human life” (*Corte costituzionale, Decision No. 278 of 2013, para. 5 of Considerato in diritto). Only after 100 years⁷⁴⁾ can her identity be disclosed (Legislative Decree of 30 June 2003, No. 196, Article 93).

(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Code (Legislative Decree of 30 June 2003, No. 196⁷⁵⁾) governs the general rules on data protection and the use/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Normattiva, link, accessed Nov. 27, 2024).

In addition, Law of 7 August 1990, No. 241 establishes general rules on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 right of access to administrative documents.

⁷¹⁾ FRA,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17/mapping-minimum-age-requirements-concerning-rights-child-eu/accessing-adoption-files-and-information-biological-family>, accessed 2024. 10. 20.

⁷²⁾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DECRETO%20DEL%20PRESIDENTE%20DELLA%20REPUBBLICA%208%20giugno%202007,%20n.%20108:stato:regio.decreto:1942-03-16;262!vig=2020-12-04>), accessed 2024. 11. 27.

⁷³⁾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presidente.repubblica:decreto:2000-11-03;396>, accessed 2024. 11. 27.

⁷⁴⁾ This means “the legal duration of anonymity is set longer than a human lifetime” (Corte costituzionale, sentenza n. 278 del 2013, para. 5 of “Considerato in diritto”).

⁷⁵⁾ Normattiva, <https://www.normattiva.it/uri-res/N2Ls?urn:nir:stato:decreto.legislativo:2003-06-30;196!vig>, accessed 2024. 11. 27.

(2) Findings

No.	Item	Details
1	Legal Basis	Law on the Rights of the Minor to a Family (Italian Adoption Law); Civil Code; C.A.I. Decree; Constitution; Personal Data Protection Code; Law No. 241/1990 on administrative procedure and access to administrative information.
2	Eligible Applicants	Adoptees aged 25+; adoptees aged 18+ where serious psychological health reasons exist or adoptive parents are deceased/untraceable; adoptive parents with proven serious reasons; hospital/health facility directors in urgent serious risk to the minor’s health.
3	Competent Bodies	Juvenile Court ⁷⁶⁾
4	Disclosure Conditions	In principle, the Juvenile Court grants access upon application by an adoptee aged 25+ ⁷⁷⁾
5	Scope of Disclosure	Birth certificate; medical records; identifying information on close relatives including siblings (subject to consent checks).
6	Procedure	Applicant files pro se; no lawyer required; approximately one month; fees apply.
7	Support Services	In cases of intercountry adoption, some Accredited Adoption Bodies (AABs) ⁷⁸⁾
8	Remedies	Administrative litigation.

If birth was anonymous, the court must first conduct confidential proceedings to verify whether the mother maintains anonymity. provide services such as assisting adoptees in visiting their country of birth without requiring direct contact with their biological parents.⁷⁹⁾

(3) Implications

1) First, in Italy, the Juvenile Cour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adoption process, conducting a rigorous eligibility review under strict requirements. Access to adoption information likewise requires the approval of the Juvenile Court. Notably, even in exceptional cases where disclosure is sought by adoptive parents of a minor or young adult adoptee under the age of 25, or by heads of medical institutions, it is the Juvenile Court itself that directly evaluates whether the legal requirements (such as necessity and urgency) are met and whether disclosure might cause serious harm to the applicant’s mental or physical well-being. This reflects the Juvenile Court’s leading role throughout both the pre-adoption and post-adoption stages.

76) Literally tribunale per i minorenni — translated as “juvenile court.”

77) From age 25, the right to know one’s identity is inherently autonomous; the law does not provide that the exercise of this right be restricted or delayed based on the will of the biological parents, nor is there a balancing of interests by the judiciary (quoted from Sentenza Cassazione Civile n. 22838 del 09/11/2016).

78) Under the Italian Adoption Act, the Adoption Commission designates accredited adoption bodies worldwide and publishes/updates their contact information and addresses on its website.

79) HCCH, <https://assets.hcch.net/docs/48badc15-3b70-4a4c-a416-c20545398cdc.pdf>, accessed 2024. 8. 7.

2) Procedure for Verifying Biological Parents’ Consent

When confirming whether a biological mother who gave birth anonymously wishes to maintain her anonymity, a closed hearing before the court is required. Compared with Korea, where confirmation is sought merely through postal notice, this procedure carries greater binding force and ensures a clearer determination of intent.

3) Principle of Disclosure of Adoption Information

Although adoptees’ access rights vary depending on age, once those requirements are satisfied, adoptees are generally entitled to unilateral access to adoption information. In this respect, the legislature has deemed the rights of adoptees to clearly outweigh those of biological parents, excluding the usual balancing of interests that might otherwise take place. The legislature’s choice reflects the unique role of biological parents within the complex process leading to an adoptee’s status as a child of adoption.⁸⁰⁾

4) Strict Interpretation of Exceptions to Non-Disclosure

Article 28(7) of the Italian Adoption Law provides that the identity of biological parents who gave birth anonymously is not to be disclosed. However, efforts by Italian adoptees, along with rulings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f Italy, have steadily expanded adoptees’ access to information. Significantly, even when a biological parent has chosen anonymous birth, that parent’s right to privacy is not absolute. If an adoptee requests disclosure, the court must again conduct a closed hearing to confirm whether the mother still wishes to maintain anonymity.

This is encouraging, as it acknowledges that circumstances may change over time, allowing a biological parent who once chose anonymity to make a new decision regarding their now-adult chil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the Supreme Court of Cassation further held (Sez. I Civ., Judgment No. 15024/2016⁸¹⁾; Judgment No. 22838 of Nov. 9, 2016⁸²⁾) that even if a biological parent who gave birth anonymously has died, the adoptee’s right to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must still be recognized.

5) Expansion of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 Including Siblings and Relatives

Moreover, the Supreme Court of Cassation, in its Judgment No. 6963 of March 20, 2018⁸³⁾, interpreted the adoptee’s right to information about their origins broadly enough to include information about siblings. The Court reasoned that, under the Constitution and customary law, the textual recognition of the right to access one’s origin must be read expansively. Thus, especially in cases where the biological parents cannot be traced, the right may extend to the closest relatives such as siblings, even though they are not explicitly mentioned in the statute. Recognizing the right to discover one’s biological lineage as essential to the construction of personal identity has led the Court to adopt this broad interpretation.

80) Cass. civ. Sez. I, 20 marzo 2018, n. 6963 — partial quotation from the reasoning.

81) Biodiritto, <https://www.biodiritto.org/Biolaw-pedia/Giurisprudenza/Corte-di-Cassazione-sez.-I-civ.-sent.-15024-2016-parto-anonimo-e-diritto-a-conoscere-le-proprie-origini>, accessed 2024. 11. 27.

82) Laleggepertutti, <https://sentenze.laleggepertutti.it/sentenza/cassazione-civile-n-22838-del-09-11-2016>, accessed 2024. 11. 27.

83) Tribunale per i Minorenni di Trieste, https://tribmin-trieste.giustizia.it/cmsresources/cms/documents/Cassazione_6963-2018.pdf, accessed 2024. 11. 28.

9. Synthesis

Sweden, Denmark, Norway, the UK, Germany, U.S. (New York), and others grant adult adoptees access to identifying information irrespective of birth-parent consent. Some provide tracing/search mechanisms (Sweden, Ireland, Washington), counseling (Sweden, Denmark, UK), practical support includ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Norway), and procedures to disclose deceased parents’ identities (Washington). Ireland broadens applicants to descendants and relatives; Italy interprets origin information to include siblings.

II. Leading ECtHR Cases

Mikulić v. Croatia (2002. 2. 7)

Facts: An out-of-wedlock child sought paternity; defendant repeatedly refused DNA testing; no enforcement procedure existed; proceedings delayed over four years.

Holding: Violation of Article 6 (reasonable time) and Article 8 (private life) and Article 13 (effective remedy). The right to know one’s biological parentage is core to private life; the state failed to provide effective procedures.

Significance: Defines the right to identity as part of private life and requires timely, effectiv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paternity—relevant to adoptee origin claims.

Odièvre v. France (2003. 2. 13)

Facts: Applicant adopted after anonymous birth. She received non-identifying information but could not obtain sibling identities due to mother’s anonymity.

Holding: No violation of Article 8. Balancing the child’s access to origins with the mother’s anonymity was within the state’s margin of appreciation; France provided non-identifying data and a waiver mechanism (CNAOP).

Significance: Highlights the need to balance access to origins with maternal anonymity; shows legislative solutions (non-identifying data; consent-based waivers).

Jaggi v. Switzerland (2006. 7. 13)

Facts: Applicant’s putative father died; family opposed DNA testing of remains.

Holding: Violation of Article 8. Interest in establishing paternity persists regardless of age; psychological burden recognized; applicant’s rights outweighed family objections.

Significance: Prioritizes identity determination over posthumous and family objection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Godelli v. Italy (2012. 9. 25)

Facts: Adoptee born anonymously was absolutely barred from identifying data.

Holding: Violation of Article 8. Absolute anonymity without balancing mechanisms violates proportionality.

Significance: Spurred Italian reforms and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allowing inquiries into anonymity and expanding access.

Cherrier v. France (2024. 1. 30)

Facts: Applicant born anonymously; CNAOP denied identifying data as mother maintained secrecy under law.

Holding: No violation of Article 8. The scheme preserves non-identifying access and permits disclosure upon maternal consent; aims to protect women’s health and prevent unsafe outcomes.

Significance: Affirms Odièvre while acknowledging the applicant’s hardship; dissent suggests future evolution toward stronger access rights.

III. Conclusion

Comparative practice shows strong recognition of the right of adult adoptees to know their origins, independent of parental consent, with procedural and psychosocial supports. ECtHR jurisprudence frames this right within Article 8’s protection of identity and private life. By contrast, Korea’s Adoption Special Act (Article 36) affords limited and procedurally thin access, often subordinated to parental data-protection claims. Legislative reform—guided by the above jurisdictions and ECtHR standards—is urgent to give meaningful effect to adoptees’ constitutional rights and to facilitate identity restoration.

[illegible]